
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3권 제3호(통권30호)
2018년 9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목 차

〈일반논문〉

한국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 주제 분석: 한국행정학보 및 행정학회 발표논문집의 주제어에 대한 SNA의 활용 / 송진희·최윤서·김정진·서인석	1
복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 박종훈·이성우	3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병리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윤기웅·유승현	59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설계 · 리더십 · 자원 · 네트워크 요인을 중심으로 / 이정희·권기현	91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이수정·남궁미	121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 예측모형 탐색 연구: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 정인호·이대웅·권기현	14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강창민·정원희	175

한국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 주제 분석: 한국행정학보 및 행정학회 발표논문집의 주제어에 대한 SNA의 활용

송진희·최윤서·김정진·서인석

본 연구는 어떤 주제가 한국의 성과관리 연구에서 핵심적 주제였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론 및 논리적 검토에 기초해 6가지 연구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별 차이를 구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SNA 분석방법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성과관리 연구 주제어 중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지방정부'였다. 이는 한국에서 성과관리의 학술연구가 지방정부의 역량 진단 또는 평가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 또는 도구로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시된 주제어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었다는 점이다. 과거 평가의 초점이 민간기업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으로 이전된 공공영역의 대상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공공기관 평가는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성과관리연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연주주제로 부각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주요 주제어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접근을 통해 상이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성과관리의 주제는 유사하였다. 중앙의 정치논리와 별개로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의 도입과 같이 현장의 실무적 요구가 성과관리에서 중시되었다고 보여진다.

[주제어: 한국의 성과관리연구, 핵심 주제어, SNA]

1. 문제의 제기

성과관리는 일 잘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과정인 것이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80922). 이러한 성과관리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 부각되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쏟아졌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내용이 특정 시점에 성과관리의 개념적·방향적 성격을 규명한 것일 수 있음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왜 한국에서는 성과관리가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을까? 1960년대부터 성과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고,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공공관리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성과지향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부각되었다(윤상오, 2004).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성으로 인해 좌시되었던 민간영역의 성과평가가 공공부문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¹⁾.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유재원, 2004). 이는 몇 가지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학술적으로 정부성과 또는 정부실패를 측정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과 영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이론이 행정학 분야에서 강조되면서 이론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측면이다. 둘째 한국의 현실에서 지방자치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로 성과평가가 논의되어 온 것이다. 셋째 한국의 연구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성과관리를 강조해왔다. 조세 연구원의 성과관리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 연구는 학계 또는 정부부처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관리의 관심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성과관리가 제도으로써 가진 초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성과는 경제적 성과, 민주적 성과, 공익적 성과 등 성취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성과는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doing the things right)과 관련된다. 경제학 또는 경영학적 관점으로써 생산성, 효율성, 비용효과성 등이 강조될 수 있다. 민주적 성과는 절차적·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구축되었는가와 관련된다. 법학 또는 정치학적 관점으로써 헌법정신, 투명성, 국민참여, 의사결정과정의 적법성/적절성 등이 강조될 수 있다. 공익적 성과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doing the right

1) 정부부문의 “성과관리”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미리 제시하고,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홈페이지 http://evaluation.go.kr/mobile/user/psec/m_intro/m_intro_1_2_1.jsp)

things)과 관련된다. 인류학 또는 미래학적 관점으로써 문명변천, 국가비전, 국민정체성 등이 강조될 수 있다. 핵심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하기 보다는 가시적인 측정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이는 본질적인 성과측정 보다는 성과 측정의 잘못된 행태가 발생시켰다. 이는 성과관리가 자칫 점수관리(socore management)로 변질될 가능성마저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공동성·유승현, 2006: 59). 공공부문 성과를 '경영성과'로 오해해 '생산성' 또는 '효율성'의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주제가 한국의 성과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었을까?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검토된다면 성과관리에서 어떤 '성과'가 핵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각 정부성과를 측정하고 진단하는 결과로써 제시되기도 한다. 잘 정리된 사례 연구들은 좋은 논문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학술논문의 연구 주제를 검토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성과관리의 중심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 맥락은 시기별로 상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과관리'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의 수준에 따라서 특정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성과관리의 논의가 상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기별로 구분하여 논의한다면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되고 진화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에서 어떤 방향의 주제가 한국 성과관리를 이끌어왔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성과관리가 흘러갈 것인가를 분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몇 가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 주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정부 성과관리의 주체가 정부인지, 아니면 사회인지, 아니면 학계인지에 따라서 실용성, 이론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것은 연구주제의 차이와 함께 연구주제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성과관리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초반에는 '정부의 저성과 진단'으로 시작하여 '성과관리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논의, 이후 '성과관리 적용 이후의 실효성과 방향성 검토' 등으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SNA 분석을 통해 주제어 분석을 시도한다. 주제어 분석은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과 시기별 구분을 통한 분석의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해 성과평가의 의미와 시사점에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1. 성과관리 연구의 맥락과 핵심 주제어

한국에서 정부 성과관리 연구의 맥락은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의 논의로 바라볼 수 있다. 성과관리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부각되었으며 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는 ‘정부 성과 및 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 제정된 1993년부터이다(이준, 2010). 당시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세금 납부에 크게 반감을 갖는 시기였다. 납부하는 세금의 부당한 정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연방정부의 개혁을 촉진하였고, 이것이 정부성과 및 결과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GPRA제정은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입법화되었으며, 빌클린턴 대통령 정부 취임후 1993년 2월 발효가 되었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선, 사업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 둘째 연방정부의 사업결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 셋째 사업의 중심을 국민에게 초점화하여 연방사업의 효과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 넷째 연방 의회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다. 정부의 대민 신뢰 향상과 역량 확보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²⁾. 이와 달리 한국의 성과관리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국정홍보처, 2008: 64).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량 평가로 총액인건비 제도 등 성과관리 방식을 중시한 것이다(국정홍보처, 2008: 140). 구체적으로, 2004년도에 참여정부 지방행정혁신이 시작될 당시 비전을 지방행정의 비능률성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과 성과를 최대한 높여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선진 지방자치 정착’을 제시하였다(〈그림 1〉참조). 즉 성과관리가 국가개혁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지방정부와 관련된 주제로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Performance_and_Results_Act

〈그림 1〉 참여정부 지방행정혁신의 비전과 목표



자료: 국정홍보처(2008: 167)

연구문제 13): 한국에서 성과관리 연구의 주제는 ‘정부개혁’이 중심적 화두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에서 성과관리 연구의 주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적 화두였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배정과 같은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금재호, 2004: 1)”로 정의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재정운영과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000년대 이후의 성과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관점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2000년부터 28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미국식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것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성과관리 방식은 지역민의 공공서비스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달성에 더 초점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기존 예산의 배분을 가늠하는 근거로 성과관리제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성과관리 연구가 새로운 사업과 목표 또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목표달성’과 무분별한 사업이나 팽창을 막기 위한 ‘예산제

- 3) 연구가설이 아닌 연구문제라고 명명한 이유는 본 연구의 성격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실증검증을 수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현상에서 나타난 특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나아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질적 의의를 두고 있는 바, 따라서 일정한 예측의 방향성을 포함한 가설입증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탐색적 차원의 연구의제이기 때문에 연구문제라 제시하였다(서인석 외, 2009: 59).

한'의 관점으로 그 논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회의 성과관리 연구가 미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도에 더 큰 초점을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성과관리 연구 주제가 2000년대에 근접할수록 '예산' 또는 '재정'의 주제가 더 많았을 것이다.

셋째, 정부 성과관리 연구를 주도한 주체는 학문영역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학문영역에서는 조직에서 바람직한 성과가 창출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관점이 강했을 수도 있다. 성과관리는 무엇보다 조직성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의 주제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초기에는 정부재정개혁에 그 초점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성과평가의 제도로써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즉 성과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업 또는 공공기업과 관련해 이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문제 4: 한국에서 성과관리제도 연구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을 것이다.

넷째,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을 넘는 동안 제도 및 실무적으로 부각되었던 성과관리는 2010년을 지나면서 제도가 가진 문제나 한계를 지적하는 관점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는 초기의 적응, 안정화 시기를 거쳐 점차로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5: 최근의 연구에 근접할수록 성과관리제도 연구는 성과관리의 '새로운 방향', '문제의식' 등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는 실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연구들이 다수인 바 정권별 초점이나 관심도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각 정권별로 성과관리에서 주목하는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6: 정권별로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술연구의 주제도 이에 따라 상이한 주제가 나타났을 것이다.

2. 성과관리 연구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성과관리 맥락

본 연구가 2000년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차원에서 분류가 가능하였다. 정부의 저성과 진단과 성과관리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정부성과관리 도입 시 공공부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관점을 제시한 연구, 경영기법이나 BSC의 제도화 가능성 연구, 성과관리의 적용에 대한 반성과 관련된 연구(방향성 검토)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해당 범주영역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1) 정부의 저성과 진단 및 성과관리 도입가능성의 검토

정부의 저성과 진단을 위한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의 사례(김순은, 2005; 박노옥, 2005) 또는 공공사업의 사례(윤상오, 2004; 나태준·이남국, 2005; 고성철·이병기, 2005)를 살펴본 연구들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김순은(2005)은 영국의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상향식 관점의 성과관리제도가 정책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활용이 정부 간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시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박노옥(2005)은 미국의 JTPA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적 유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성과정보체계의 개발, 성과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한 형태의 정보로 제공, 성과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입법부의 이해와 참여필요, 정부부문내의 다른 성과관리제도들과의 정합성 제고필요, 관계당사자들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1〉 정부의 저성과 진단 및 성과관리 도입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연구목적	이론적 접근			연구 방법	연구결과의 시사점
		관련이론 or 사례	종속변수	독립변수		
김순은 (2005)	영국의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제도의 성공적 요인확인	정책집행이론 (상향식관점과 하향식관점)	정책결과	- 정책환경 - 정책설계	사례 분석	- 정부간 관계의 변화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박노옥 (2005)	공공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적 유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미국의 JTPA 프로그램	재정사업 자율평가	- 계획 - 성과계획 - 집행 - 성과	사례 분석	- 성과정보체계의 개발 - 성과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 유용한 형태의 정보로 제공 - 성과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입법부의 이해와 참여필요 - 정부부문내의 다른 성과관리제도들과의 정합성 제고필요 - 관계당사자들의 역량 개발
윤상오 (2004)	공공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평가의 역할	공공정보화사업	-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시행	사례 분석	- 성과관리의 단위설정 - 성과관리의 주체 -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타당성확보 문제 등
나태준·이남국 (2005)	성과관리제도가 성과관리에 적합함을 확인	기획예산처	재정 집행·운영 성과측정·평가	-	사례 분석	- 성과관리 시스템을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 성과관리 실행방안모색
고성철·이병기 (2005)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추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두 평가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	- 목표관리제 - 자체평가 - 통합성과관리	통합성과관리체제	전략기획	사례 분석	- 성과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통합 연계필요 - 성과관리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 전략 기획에 기반한 성과계획을 수립 - 성과관리의 성공요인은 주민들의 지지와 구성원들의 합의
윤수재·이광희 (2009)	영국과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 운영현황 그리고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캐나다의 프로그램구조 (PAA) - 영국의프로그래구조 (PSA)	효과성 경제성 책임성	- 고객지향 모형 - 이해관계자 모형 - 관리지향모형 - 목표지향 모형	사례 비교 연구	“계획-점검 및 측정-보고의 사이클을 제도화 - 국가수준 또는 범정부수준에서의 성과계획/부처별 성과계획을 연계 - 성과계획의 수립이나 성과보고 과정에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것을 제도화 - 재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성과관리 제도는 사업과 예산이 직접 연계되도록 하며 지출관리와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성과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필요함

다음으로, 공공사업의 사례를 통해 성과관리 적용시의 방안에 대해 연구로는 윤상오(2004), 나태준·이남국(2005), 고성철·이병기(2005)를 살펴볼 수 있다. 윤상오(2004)는 공공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평가의 역할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시행 과정을 분석하여 성과관리의 단위설정, 성과관리의 주체,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타당성확보 등이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제안하였다. 나태준·이남국(2005)은 성과관리제도가 성과관리에 적합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재정 집행·운영, 성과측정·평가를 검토한 결과 성과관리제도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도의 활용성을 위해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방안과 성과관리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성철·이병기(2005)는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추진사례 분석을 통하여 두 평가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성과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통합 연계가 필요하고, 성과관리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 전략기획에 기반한 성과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의 성공요인은 주민들의 지지와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윤수재·이광희(2009)는 영국과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 운영현황 그리고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캐나다의 프로그램구조(PAA), 영국의프로그램구조(PSA)를 살펴보고 성과관리에 있어 고객지향, 이해관계자, 관리지향, 목표지향의 모형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해 “계획-점검 및 측정-보고의 순환체계의 제도화, 국가수준 또는 범정부수준에서의 성과계획/부처별 성과계획의 연계, 성과계획의 수립이나 성과보고 과정에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재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성과관리 제도는 사업과 예산이 직접 연계되도록 하며 지출관리와 통합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성과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정부성과관리 도입 시 공공부문의 제도적 실효성 연구

정부성과관리 도입 시 공공부문의 제도적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연구로는 박석희(2006), 공동성·유승현(2006), 김재훈·최흥석(2007), 최흥석 외(2008) 등이 있다. 박석희(2006)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와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조직 역량 개선에 미친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강화, 조직역량 변수, 조직특성요인변수, 환경요인변수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와 그에 따른 조직역량변수들은 성과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경영평가제도를 통한 성과관리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모형이나 지표체계 등의 합리화는 물론 평가결과와 조직운동을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공동성·유승현(2006)은 성과관리가 무엇보다 전략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략관리의 요소로 조직구조, 인적자원, 업무프로세스, 리더십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점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근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표 2〉 정부성과관리 도입 시 공공부문의 제도적 실효성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이론적 접근			연구 방법	연구결과의 시사점
		관련이론	종속변수	독립변수		
박석희 (2006)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와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조직 역량 개선에 미친효과	기관평가 제도	조직역량 개선	- 조직역량 변수 -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강화 - 더미변수 조절 변수인 조직 특성요인변수 - 환경요인변수	측정 지표 및 측정 방법	-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와 그에 따른 조직역량 변수들은 성과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 - 실천적인 차원에서 경영평가제도를 통한 성과관리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모형이나 지표체계 등의 합리화는 물론 평가결과와 조직운동을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공동성 · 유승현 (2006)	전략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	성과관리 시스템의 전략관리 현황	성과관리의 성과	- 전략의 구체화 - 조직구조 - 인적자원 - 프로세스 - 리더십	표본 추출	-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외한 모든 분석요소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점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근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
윤수재 · 조태준 (2009)	중앙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PDCA 모형	조직 효과성	성과관리시스템 핵심요인	요인 분석 & 다중 회귀 분석	- 조직몰입차원에서 매뉴얼개발 -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미션확립

윤수재·조태준(2009)은 중앙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핵심요인이 조직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을 인식결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몰입차원에서 매

뉴얼개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미션확립 할 것을 지적하였다.

3) 경영기법 및 BSC 도구의 적용가능성 검토

경영기법 및 BSC 도구를 성과관리의 도구로 적용할 때의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김재훈·최홍석(2007)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성과측정 방식과 전략적 성과관리 측정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전과 전략이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성장과 학습관점에서 각각 반영됨으로써 기존 측정방식에 비해서 더 정밀한 성과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은 성과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차등지급에 활용할 뿐이고, 포상금, 호봉승급, 그리고 연봉 책정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체성과금이 적어도 인건비 증가율만큼은 증가되어서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

〈표 3〉 경영기법 및 BSC 도구의 적용가능성 검토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이론적 접근			연구 방법	연구결과의 시사점
		관련이론	종속변수	독립변수		
김재훈· 최홍석 (2007)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관한연구	전통적 성과측정 이론과 전략적 성과측정이론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성장 학습관점	비전과 전략	계량평가 다면평가	- 공공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차등지급에 활용할 뿐이고, 포상금, 호봉승급 그리고 연봉책정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 - 자체성과금이 적어도 인건비 증가율만큼은 증가되어서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
최홍석· 김재훈· 정재진 (2008)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에 따라 경영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	성과관리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경영평가 결과 점수	- 성과관리 전략변수 - 조직구조 변수	기술통계 회귀분석 SPSS 사용	- 조직 전략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시장형 공기업의 구조적 운영과정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성과를 창출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이 많은 기관일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양호하다는 가설을 검증되지 못했고 자체재원액이 많은 기관일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석 외(2008)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에 따라 경영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전략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시장형 공기업의 구조적 운영과정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성과를 창출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이 많은 기관일수록 경영평가결과가 양호하다는 가설을 검증되지 못하였고, 자체재원액이 많은 기관일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성과관리에 있어서 조직 전략적 측면이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조직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4) 성과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 문제의식, 방향성 검토

성과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의식에 대해 고민한 연구도 있었다. 조주연·이석환·주효진(2011)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인식하는 유형과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인식하는 유형을 구분하여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수용성 차이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신공공관리이론과 신공공서비스이론에 기초해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민유형을 구분하고 이것이 성과관리제도를 수용한다고 인식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의 유형은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시민이 적극적이고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성과관리를 잘 수용할 것이라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성과에 대한 시민들에게의 환류와 같은 것이 더 적합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표 4〉 성과관리제도의 사회적 인식과 수용성, 문제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이론적 접근			연구 방법	연구결과의 시사점
		관련이론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주연· 이석환· 주효진 (2011)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인식하는 유형과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인식하는 유형을 구분하여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수용성 차이와 관계를 확인	• 신공공관리 이론 • 신공공서비스 이론	성과관리 제도의 수용성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인식유형	실증적 분석	•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해 인식하는 유형이 명확하게 구분됨 • 각각의 유형별로 명확한 특성이 나타남 • 고객의 관점에서 주인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과 자료의 수집

분석자료는 한국행정학회의 논문 검색에 포함된 한국행정학보 논문과 행정학회 발표논문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이후의 연구대상 중 ‘성과관리’ 주제어로 검색된 연구논문과 발표논문이 대상이며, 해당 연구들의 주제어(키워드)가 각 노드가 된다. 이는 자아중심 네트워크의 측정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전체 네트워크 측정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제어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이나 성과관리와의 관련된 주제어는 직간접적으로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성과관리’ 단어를 중심으로 자아중심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자아중심 네트워크는 성과관리와 연결된 주제어만을 측정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적합하다(서인석, 2013: 88-89). 게재논문의 경우는 ‘주제어’ 초록에 명시되어 있으나, 발표논문의 경우 ‘주제어’가 보통 제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목에 명시된 ‘단어’를 주제어로 간주하고 코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은 2004년 2개, 2005년 5개, 2006년 4개, 2007년 6개, 2008년 2개, 2009년 7개, 2010년 3개, 2011년 2개, 2012년 3개, 2013년 3개, 2015년 5개, 2017년 2개로 총 대상 논문의 자료 수는 43개 논문이 된다.

〈표 5〉 연구대상 주제어

시기	주제어
노무현 정부 (34)	성과관리, 지방정부, 책임성, 영국사례, 평가, 공공정보화, 성과관리제도, 성과목표체계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전략기획, 통합성과관리체계, 지자체 자체평가, 지자체 목표관리제, 지자체, 행자부, 전략관리, 공무원인식,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조직역량,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BSC, 성과관리시스템, 정부산하기관, 문화국민생활 유형, 범부처,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시민참여형 책임운영기관, 정부부처, 토피효과,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체제, 수용성,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46)	지방정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진단, 평가, 공공기관, 경영성과요인, 구조적특성, 성과, 관리전략변수, 성과관리제도, 토착화, 지자체, BSC, 환경영향분석, 중앙행정기관, 전략적 성과관리, 합리적 쓰레기통모형, 조직효과성, 영국사례, 캐나다사례, 성과관리, 공공서비스, 한계, 성과관리연구, 공공부문, 10가지 한계, 행정학역할, 속의민주주의, 효율성, 효과성, 도입, 활용, 인사관리 공정성, 개인성과평가, 대학조직, 문화유형분석, 공무원의 시민인식유형, 수용성, 한국광해관리공단, UFO모형, 성과관리체계, 광해관리공단, 성과목표책임제, 성과관리인식 영향요인, 만족도 매개효과
박근혜 정부 (27)	송파구, BSC, 공기업, 성과관리, 딜레마, 공공성, 수익성,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지적위기, 실무적관성, 조직효과성, 인사관리제도, 성과중심, 보상, 효과성, 재정성과관리, 관리체계효율화, 책임성, 성과, 정부개혁, 성과관리제도, 한계, 개선방안, PLS-SEM, 공공기관 경영평가, 형성 모델

43개 논문에서 제시된 ‘주제어(Keywords)’의 수는 총 107개였다. 시기별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가 주제어 34개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가 주제어 46개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가 주제어 27개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가장 많은 주제어가 제시되었다.

2. 분석방법: SNA 근접중심성 분석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은 관계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김재근·서인석, 2012). 특히, SNA 분석은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가 주제어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핵심주제어를 확인할 수 있다. SNA 중심성 분석에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의 기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기법으로 근접중심성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중심성의 지표 중 근접중심성(closeness)은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결합링크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상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이 수치가 작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C_i = \left[\sum_{j=1}^n d_{ij} \right]^{-1}$$

각 행위자 i 의 근접중앙성

각 행위자 i 와 j 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거리(geodesic distance)

자료: 이동규 외(2012: 296)

본 연구에서 중심성 측정은 근접중앙성(closeness)을 통해서 실행된다.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내의 각 행위자가 그 연결망내의 다른 모든 행위자들과의 직/간접적 연결상태를 고려하여 측정하는 개념으로 근접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그 연결망 내에서 다른 모든 행위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행위자(Wasserman and Faust, 1994; 박치성, 2006; 이동규 외, 2010; 이동규 외, 2012: 296)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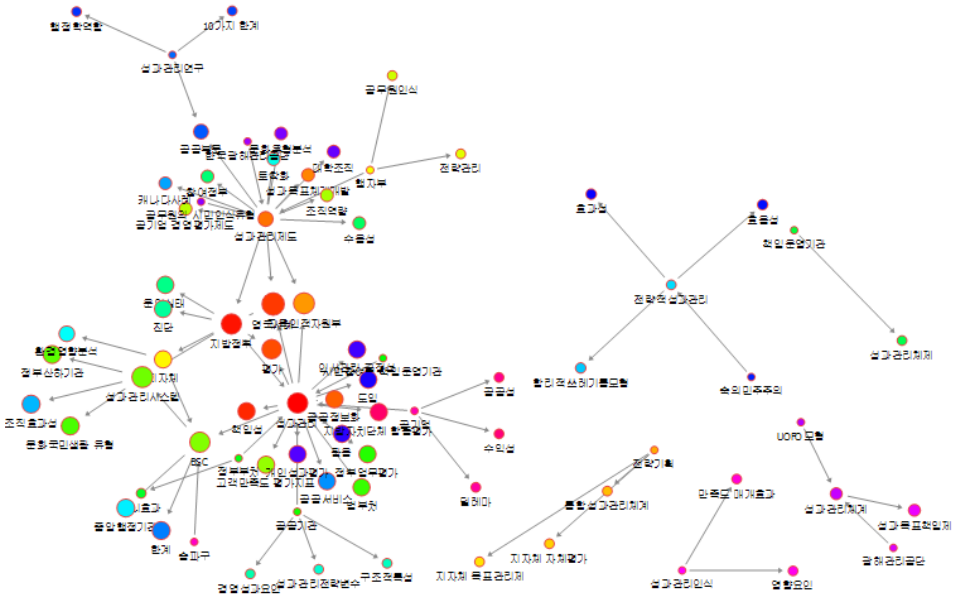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논의

1. 전체 대상 핵심주제어 분석

1) 네트워크 기술통계

〈그림 2〉는 전체 조사대상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주제어 네트워크의 분석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 전략적 성과관리, 전략기회, 성과관리체계 등의 용어를 중심으로 자아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 조사대상 주제어 네트워크



〈표 6〉은 근접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관리의 주제어는 외향과 내향의 관계성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준편차의 경우 내향은 0.023이며, 외향은 0.06으로 확인되었는데, 내향의 경우 주제어의 평균이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외향의 경우 표준편차가 2배정도 높아 특정 주제어가 더 부각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최대값을 통해서 확

인해볼 수 있는데, 내향근접중심성의 경우 최대값이 0.078(7.8%)인데 비해 외향은 0.225(22.5%)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6〉 근접중심성 기초통계량

유형	근접중심성 측정치	
	내향(IN)	외향(OUT)
평균	0.029	0.029
표준편차	0.023	0.06
최소값	0	0
최대값	0.078	0.225
근접중심성 지수	6.836%	7.988%

2)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표 7〉는 근접중심성 분석결과이다. 총 76개의 주제어가 대상이 되었고, 이중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평균한 값들을 주제어의 중요도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때 내향-외향을 고려한 값들의 평균 수치 이상인 16개 주제어만이 제시되었다. 10%이상을 수치를 차지한 주제어는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 ‘지방정부’로 확인되었다. 성과관리제도와 관련된 연구라는 점에서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가 높은 것은 짐작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확산과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이상의 수치를 차지한 주제어는 행자부, 공기업, 공공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무원의 시민인식유형, 정부부처, 시민참여형 책임기관, BSC, 성과관리시스템, 지자체로 확인되었다. 5%이상의 주제어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용어로 이해된다. 성과관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제어라 판단된다. 5%미만의 수치를 차지한 주제어는 영국 사례, 교육인적자원부, 평가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의 부각과 더불어 평가 용어가 주요 주제어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76개 중 16위를 차지하였다. 영국 사례가 성과관리의 주된 대상이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주요 성과관리 대상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표 7〉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구분	근접중심성			순위
	내향	외향	평균	
성과관리	0.0675	0.225333	0.146417	1
성과관리제도	0.04	0.22535	0.132675	2
지방정부	0.0675	0.191773	0.129637	3
행자부	0	0.176309	0.088155	4
공기업	0	0.171429	0.085715	5
공공기관	0	0.171429	0.085715	5
한국광해관리공단	0	0.161793	0.080897	7
공무원의 시민인식유형	0	0.161793	0.080897	7
정부부처	0	0.153725	0.076863	9
시민참여형 책임운영기관	0	0.145075	0.072538	10
BSC	0.068571	0.053333	0.060952	11
성과관리시스템	0.072688	0.04	0.056344	12
지자체	0.051282	0.050196	0.050739	13
영국사례	0.078431	0	0.039216	14
교육인적자원부	0.074074	0	0.037037	15
평가	0.063492	0	0.031746	16
평균	0.029446	0.029049	0.029248	-

2. 시기별 분석: 노무현 정권시기: 200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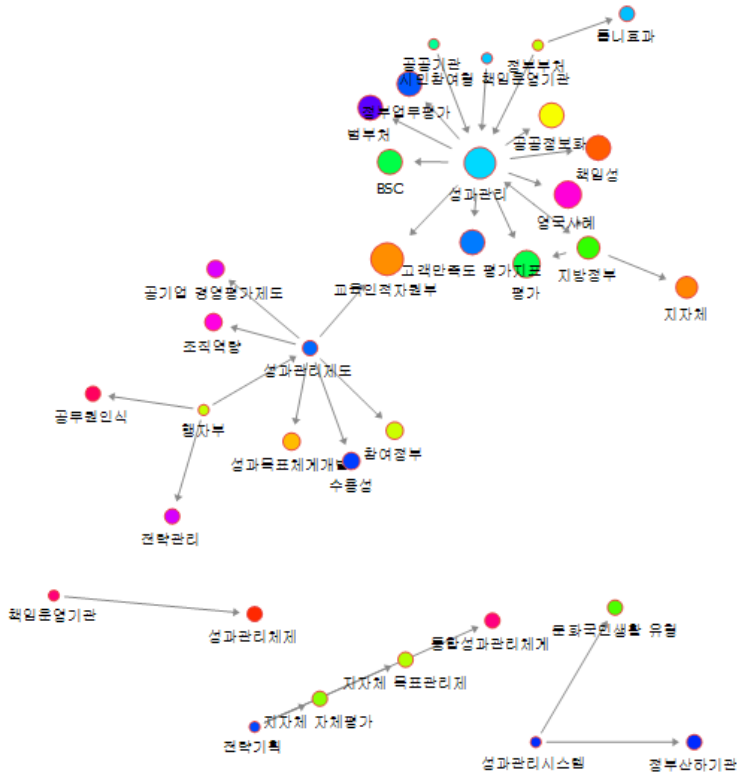
1) 네트워크 기술통계

〈그림 3〉은 노무현 정권시기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이다.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다.

〈표 8〉 근접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은 대동소이하나 외향이 조금 높았다. 성과관리의 주제어는 외향과 내향의 관계성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준편차의 경우 내향은 0.036이며, 외향은 0.084으로 확인되었는데, 내향의 경우 주제어의 평균이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외향의 경우 표준편차가 2배정도

높아 특정 주제어가 더 부각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최댓값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내향근접중심성의 경우 최댓값이 0.124(12.4%)인데 비해 외향은 0.306(30.6%)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림 3〉 노무현 정권시기 성과관리연구 주제어 네트워크



〈표 8〉 근접중심성 기초통계량

유형	근접중심성 측정치	
	내향(IN)	외향(OUT)
평균	0.046	0.047
표준편차	0.036	0.084
최소값	0	0
최대값	0.124	0.306
근접중심성 지수	10.858%	8.929%

2)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표 9〉는 근접중심성 분석결과이다. 총 34개의 주제어가 대상이 되었고, 이중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평균한 값들을 주제어의 중요도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때 내향-외향을 고려한 값이 4%이상인 것들만을 제시하였다. 평균수치 이상의 주제어는 10개가 해당하였다. 20%이상을 수치를 차지한 주제어는 ‘성과관리’가 유일하였다. 10%이상을 차지한 주제어는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정부부처’로 확인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지방분권 지방이양 등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한 주제가 주로 부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평균이상의 근접중심성 수치를 보여준 주제어는 시민참여형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영국 사례로 확인되었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제어, 그리고 ‘영국 사례’ 등 성과관리 사례와 관련된 주제어가 그 뒤를 이었다.

〈표 9〉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구분	근접중심성			순위
	내향	외향	평균	
성과관리	0.121212	0.305556	0.213384	1
지방정부	0.069264	0.203704	0.136484	2
성과관리제도	0.030303	0.181818	0.106061	3
정부부처	0	0.204848	0.102424	4
시민참여형 책임운영기관	0	0.181818	0.090909	5
공공기관	0	0.181818	0.090909	5
행자부	0	0.163636	0.081818	7
교육인적자원부	0.123737	0	0.061869	8
평가	0.094697	0	0.047349	9
영국사례	0.094697	0	0.047349	9
전략기획	0	0.090909	0.045455	11
정부업무평가	0.084175	0	0.042088	12
법부처	0.084175	0	0.042088	12
BSC	0.084175	0	0.042088	12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0.084175	0	0.042088	12
공공정보화	0.084175	0	0.042088	12
책임성	0.084175	0	0.042088	12
평균	0.046378	0.047206	0.0467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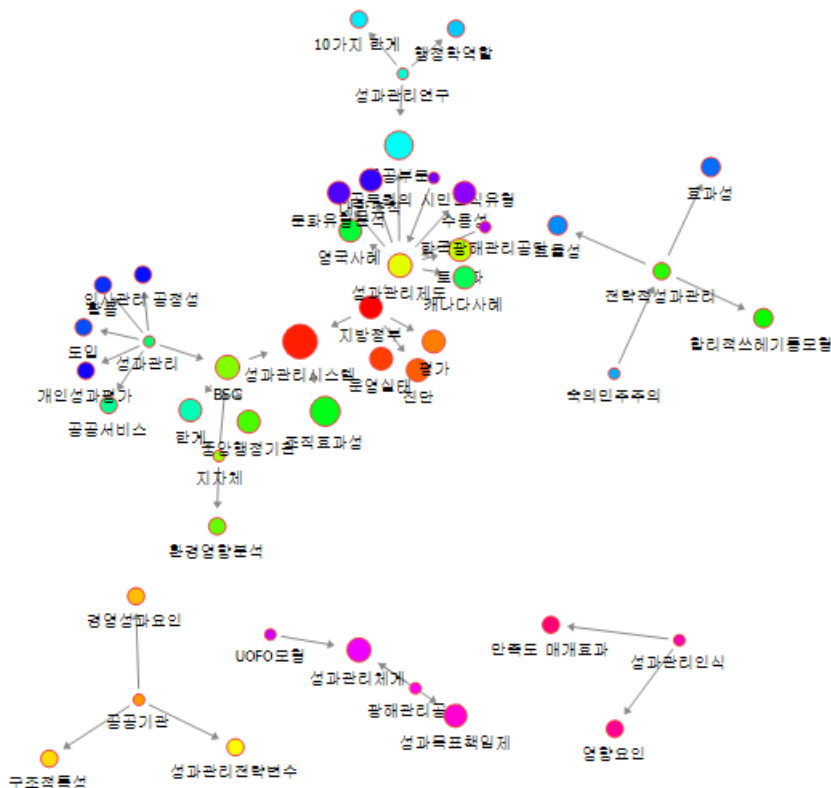
평균 수치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나타난 주제어들은 전략기획, 정부업무평가, 법무처, BSC,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공공정보화, 책임성이 확인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다양한 정부혁신 또는 정부개혁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 정보화, 고객만족도, 책임성 등의 다양한 주제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었다.

3. 시기별 분석 II: 이명박 정권시기: 2008-2012

1) 네트워크 기술통계

〈그림 4〉는 이명박 정권시기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이다. 성과관리제도, BSC, 전략적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연구, 성과관리체계 등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제어가 상당부분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그림 4〉 이명박 정권시기 성과관리연구 주제어 네트워크



〈표 10〉은 근접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은 동일하다. 성과관리의 주제어는 외향과 내향의 평균 관계성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준편차의 경우 내향은 0.018이며, 외향은 0.047로 확인되었는데, 내향의 경우 주제어의 평균이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외향의 경우 표준편차가 2배정도 높아 특정 주제어가 더 부각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최댓값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내향근접중심성의 경우 최댓값이 0.078(7.8%)인데 비해 외향은 0.198(19.8%)로 거의 3배 이르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10〉 근접중심성 기초통계량

유형	근접중심성 측정치	
	내향(IN)	외향(OUT)
평균	0.027	0.027
표준편차	0.018	0.047
최소값	0	0
최대값	0.078	0.198
근접중심성 지수	6.951%	8.619%

2)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표 11〉은 근접중심성 분석결과이다. 총 46개의 주제어가 대상이 되었고, 이중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평균한 값들을 주제어의 중요도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때 내향-외향을 고려한 값이 평균 이상인 것들만을 제시하였다. 10% 이상을 수치를 차지한 주제어는 ‘성과관리제도’가 유일하였다. 5% 이상을 차지한 주제어는 ‘성과관리’, ‘지방정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무원의 시민인식유형’, ‘BSC’,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이상의 다른 주제어는 ‘전략적 성과관리’, ‘지자체’, ‘성과관리연구’, ‘공공기관’, ‘성과관리체계’, ‘조직효과성’, ‘공공부문’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기 BSC의 추진 및 공공기관 통합 등의 이슈가 강화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변화되었지만, 성과관리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BSC,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연구 등 성과관리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 깊게 이루어진 부분이 이전 시기와의 차이로 판단된다.

〈표 11〉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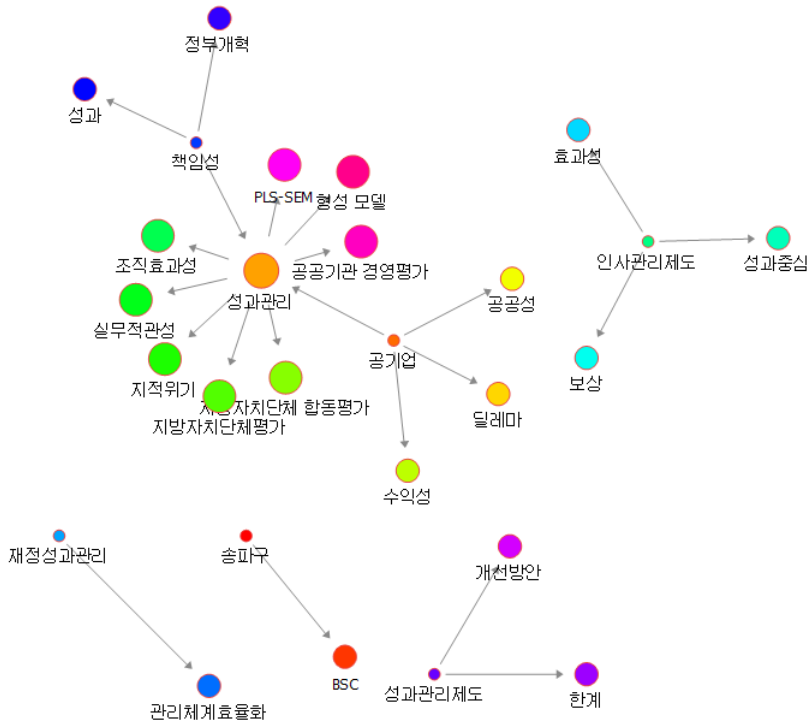
구분	근접중심성			순위
	내향	외향	평균	
성과관리제도	0.044444	0.197661	0.121053	1
성과관리	0	0.148148	0.074074	2
지방정부	0.04	0.092593	0.066297	3
한국광해관리공단	0	0.131987	0.065994	4
공무원의 시민인식유형	0	0.131987	0.065994	4
BSC	0.044444	0.071111	0.057778	6
성과관리시스템	0.077778	0.022222	0.05	7
전략적성과관리	0.022222	0.066667	0.044445	8
지자체	0	0.072727	0.036364	9
성과관리연구	0	0.066667	0.033334	10
공공기관	0	0.066667	0.033334	10
성과관리체계	0.044444	0.022222	0.033333	12
조직효과성	0.064646	0	0.032323	13
공공부문	0.059259	0	0.02963	14
평균	0.027251	0.027069	0.02716	-

4. 시기별 분석Ⅲ: 박근혜 정권시기: 2013-2017

1) 네트워크 기술통계

〈그림 5〉는 박근혜 정권시기 성과관리 연구의 핵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이다. 성과관리, 책임성, 인사관리제도,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림 5〉 박근혜 정권시기 성과관리연구 주제어 네트워크



〈표 12〉는 근접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은 대동소이하나 내향이 조금 높았다. 성과관리의 주제어는 외향과 내향의 관계성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준편차의 경우 내향은 0.026이며, 외향은 0.088로 확인되었는데, 내향의 경우 주제어의 평균이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외향의 경우 표준편차가 3.5배정도 높아 특정 주제어가 더 부각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최댓값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내향근접중심성의 경우 최댓값이 0.077(7.7%)인데 비해 외향은 0.308(30.8%)로 4배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12〉 근접중심성 기초통계량

유형	근접중심성 측정치	
	내향(IN)	외향(OUT)
평균	0.04	0.041
표준편차	0.026	0.088
최소값	0	0
최대값	0.077	0.308
근접중심성 지수	4.104%	8.278%

2)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표 13〉은 근접중심성 분석결과이다. 총 27개의 주제어가 대상이 되었고, 이중 내향 근접중심성과 외향 근접중심성을 평균한 값들을 주제어의 중요도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때 내향-외향을 고려한 값이 3%이상인 것들을 제시하였다. 10%이상을 수치를 차지한 주제어는 ‘성과관리’, ‘공기업’, ‘책임성’의 3가지가 확인되었다. 5%이상을 차지한 주제어는 ‘인사관리제도’로 평균이상의 값은 총 4가지만이 해당하였다. 이전 시기와는 다른 점으로 ‘책임성’, ‘인사관리제도’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대민 또는 대외 책임성의 요소가 성과관리에 중요 주제였으나, 이전 시기에서는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책임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은 무분별한 성과측정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연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평균 수치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나타난 주제어들은 성과관리제도, 형성모형, 공공기관 경영평가, PLS-SEM, 조직효과성, 실무적관성, 지적위기,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였다. 형성모형, PLS-SEM은 학술연구와 관련된 연구방법에 대한 것으로 성과관리 연구가 성과관리의 실태 및 제도화에 주목했던 이전 시기와는 달랐음을 나타낸다. 또한, 실무적 관성, 지적위기 등 성과관리의 근본적 방향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새로이 부각된 부분도 확인되었다.

〈표 13〉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구분	근접중심성			순위
	내향	외향	평균	
성과관리	0.076923	0.307692	0.192308	1
공기업	0	0.276923	0.138462	2
책임성	0	0.244939	0.12247	3
인사관리제도	0	0.115385	0.057693	4
성과관리제도	0	0.076923	0.038462	5
형성 모델	0.069231	0	0.034616	6
공공기관 경영평가	0.069231	0	0.034616	6
PLS-SEM	0.069231	0	0.034616	6
조직효과성	0.069231	0	0.034616	6
실무적관성	0.069231	0	0.034616	6
지적위기	0.069231	0	0.034616	6
지방자치단체평가	0.069231	0	0.034616	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0.069231	0	0.034616	6
평균	0.040456	0.040696	0.040576	-

5. 연구문제의 비교 및 검토

〈표 14〉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연구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총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분석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것은 3가지였다. 우선, 한국에서 핵심적인 성과관리 주제어는 ‘지방정부’였다는 점이다(연구문제2).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지방정부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연구가 다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와 함께 주로 다루어졌던 성과관리 주제어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었다는 점이다(연구문제4).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과 관련된 주제어는 5위, 7위, 10위로 확인되었다. 정부 성과관리 연구는 조직에서 바람직한 성과가 창출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관점에서 다루어졌고, 이에 연구대상으로써 공기업 등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표 14〉 연구문제의 확인

구분	연구문제	확인여부	비고
1	한국에서 성과관리 연구의 주제는 '정부개혁'이 중심적 화두였을 것이다.	無	전체 자료의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2	한국에서 성과관리 연구의 주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적 화두였을 것이다.	확인(3위) ⁴⁾	전체 자료의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3	성과관리 연구 주제가 2000년대에 근접할수록 '예산' 또는 '재정'의 주제가 더 많았을 것이다.	無	노무현 정권 시기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4	한국에서 성과관리제도 연구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을 것이다.	확인(5위, 7위, 10위) ⁵⁾	전체 자료의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5	최근의 연구에 근접할수록 성과관리제도 연구는 성과관리의 '새로운 방향', '문제의식' 등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을 것이다.	확인(6위) ⁶⁾	박근혜 정권 시기 근접중심성 분석결과
6	정권별로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술연구의 주제도 이에 따라 상이한 주제가 나타났을 것이다.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⁷⁾	각 정권별 자료분석결과 비교

마지막으로, 2017년에 근접할수록 성과관리 연구의 방향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주제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연구문제5). 성과관리의 제도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과 현장에 접목하는 연구에서 성과관리제도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한계와 개선점이 중심이 되는 연구들로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 다른 연구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어떤 주제가 한국의 성과관리 연구에서 핵심적 주제였는지에 궁금증

- 4)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 용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주제어로 확인되었다.
- 5) 연구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공기업, 공공기관이 5위의 주제어로 확인되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7위, 시민참여형 책임운영기관이 10위에 랭크되었다.
- 6) 박근혜 정권시기 분석결과 '실무적 관성', '지적위기'가 6위에 해당하는 용어로 확인되었다.
- 7)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지방정부,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전략기획, BSC 등이 논의되었고, 이명박 정권시기에도 지방정부, BSC, 공공기관 등의 용어가 제시되었다. 두 정부 시기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한 제도의 도입 방안이 중심주제로 이해되며 이는 유사한 주제가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권시기에는 책임성, 인사관리제도, 조직효과성, 실무적 관성, 지적위기 등이 제시된 바 이전시기와는 달리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을 가지고 시작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론 및 논리적 검토에 기초해 6가지 연구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별 차이를 구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SNA 분석방법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성과관리 연구 주제어 중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지방정부'였다. 이는 한국에서 성과관리의 학술연구가 지방정부의 역량 진단 또는 평가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 또는 도구로써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이 오랫동안 '화두'로써 다루어져왔다. 지방분권의 논의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적인 용도로 관심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관심에 편승해 더 부각된 연구주제가 '성과관리'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관점에서 지방정부 진단을 통해 지방정부 역량 개선을 목적으로 학술연구가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기본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론 보다 는 실무 현장에 가까운 주제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시된 주제어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영국과 같은 경우 공공부문 민영화에 의해 공공서비스의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민간영역은 성과평가가 가장 자연스러운 영역이다. 민간영역 즉 시장에서 재정적이든 그렇지 않은 성과가 측정되지 않으면 조직은 생존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관점에서 측정가능한 성과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행정학 또는 공공부문은 이 관점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공기업은 각 기업이 가진 목표와 비전 등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그간 성과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으로 이전된 공공영역의 대상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공공기관 평가는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성과관리연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분석 결과에서도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과 관련된 주제어가 5위, 7위, 10위로 나타난 것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주요 주제어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접근을 통해 상이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성과관리의 주제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전략기획, BSC 등 성과관리제도화에 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시기에는 지방정부,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전략기획, BSC 등이 논의되었고, 이명박 시기에도 지방정부, BSC, 공공기관 등의 용어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의 도입 방안이 중심이었다고 간주되는 부분이다.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현장의 실무적 요구가 중시되었던 ‘연구주제’가 성과관리였다는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주제가 변화한 박근혜 정권시기는 성과관리가 제도로써 정착된 이후 실무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부합하기 위해 연구들이 새롭게 변화한 것이라 이해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공동성·유승현. (2006).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제도의 전략관리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上)」, 353-372.
- 고성철·이병기. (2005). “전략기획에 입각한 통합성과관리체제의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발표논문집」, 59-74.
-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7: 정부혁신.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 김재훈·최홍석. (2007).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발표논문집」, 1-27.
- 김재근·서인석.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409-438.
- 김순은. (2005).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영국의 성과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1-25.
- 금재호. (2004). “노동행정에 있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164.
- 나태준·이남국. (2005). “성과관리제도의 명암: 교육인적자원부 성과목표체계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1-19.
- 박노옥. (2005).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127.
- 박석희. (2006).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조직역량: 차단된 시계열설계를 통한 13개 공기업의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40(3): 219-244.
- 박치성. (2006). “비영리-정부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구.” 「2006년 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01-723.
- 서인석·권기현·이종구·김태진. (2009).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

- 의 의사결정.” 「한국행정학보」, 43(4): 47-80.
- 서인석. (2013). “새터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관기관 간 협력연결망의 메커니즘 분석.” 「지방행정연구」, 27(2): 75-102.
- 윤상오. (2004). “성과관리와 평가의 역할: 공공정보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20.
- 유재원. (2004). “성과관리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립: 영구 Best Value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6.
- 이준. (2010). “국가 R&D 성과평가 및 예산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동규·서인석·양기근. (2010).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KDSN)의 정보 교류 협력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1): 1-31.
- 이동규·서인석·장소진. (2012). “Collaborative Network Structure for Information Exchange: Focusing on ‘Settle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한국위기관리논집」, 8(2): 287-317.
- 윤수재·조태준. (2009).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17.
- 윤수재·이광희. (2009). “영국과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29.
- 조주연·이석환·주효진. (2011).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인식유형과 성과관리제도 수용 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20.
- 최흥석·김재훈·정재진. (2008).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23.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송진희(宋軫禧): 주저자.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복지 등 사회정책이다(Sjh7232@naver.com).

최윤서(崔允瑞): 공동저자.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아동보육정책이다(yoonsu5334181@hanmail.net).

김정진(金正眞): 공동저자.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거버넌스 등이다(koreaecolab@gmail.com).

서인석(徐寅錫):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정책평가, 계량행정. 연구방법론, 커뮤니티웰빙 등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정책이론핸드북(박영사, 2018)”, “인트로행정학(대영문화사, 2017)”, “Relationship the Changes in Policy Tools and the Local Fiscal Structure(JCEA, 2017)”,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한국지방행정학보, 2017)”, “The Government-Driven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IRAS, 2016)”,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등 다수의 연구물이 있다(inseok800414@naver.com).

복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박종훈·이성우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2030세대, 40세대, 50대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 복지 관련 변인, 정치적 특성 변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모형에 적용이 가능한 확장된 해체기법(Extended Decomposition Method)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 11차(2016년) 부가조사 자료이다. 분석 결과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근로유형,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형 내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차이로 대표되는 잔차효과는 2030세대를 기준으로 4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40세대의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대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론인 해체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둘째,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입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주제어: 복지에 대한 태도, 세대 간 갈등, 복지정책, 확장된 해체기법]

1. 서론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실업 및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문제들은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의 수요 증대로 표출되었고, 현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하고 있다(김윤태, 서재욱, 2014).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도, 청년수당 도입 등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복지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

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확장,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된 부(富)를 축적할 기회에 대한 특정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세대 간의 갈등의 확대로 표출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의 심화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대외적 환경의 변화는 세대 간 차이를 유발하며, 특히 경기 후퇴기에 그 차이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김미영, 2016; Galor & Moan, 2004; Myles, 2002).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기인 1960~70년대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경제 호황기와 침체기를 동시에 겪은 1980~1990년대 생이 세대 간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등은 청년층의 사회적 소외를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로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에 의해 유발된 세대 간 갈등을 함축하고 있다(이재경, 장지연, 2015). 청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비우호성은 청년층의 복지에 대한 태도 형성이 선(先) 세대들과는 차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복지적 관점에서 세대 간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실증적으로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표면적 지표에 기초한 연구는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일차원적 수준에 머무르게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인 계량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실증 분석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세대 간 소득 불평등, 삶의 만족도, 세대 간 불평등에 따른 이념갈등 및 해소방안 등에 집중하여 수행되었으며(강소랑, 최은영, 2016; 김봉근, 석재은, 한연주, 2013; 박명호, 2009; 전영준, 2013; 이재경, 장지연, 2015; 이현우, 이정진, 2013), 복지에 대한 인식 태도를 다룬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김영순, 여유진, 2015; 손병돈, 2016; 이정화, 문상호, 2015).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 주거, 복지 인식, 환경적 특성, 정치적 특성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2010년(5차), 2016년(11차) 자료이며, 복지에 대한 태도의 세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모형인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axaca(1973)와 Blinder(1973)에 의해 제안된 전통적인 해체기법이 아닌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활용되는 이항 로지스틱 모형에 적용 가능

한 확장된 해체기법(Extension Decomposition Method)을 본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통계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Fairlie, 1999; 2005; 2007).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세대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며, 복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확장된 해체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분석에 활용된 자료 및 변인에 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기초통계 및 해체기법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에 대한 개념 및 구분

세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유사한 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만하임식(Mannheim) 세대 개념과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청년층, 노년층 또는 30대, 40대 등으로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명호, 2009; 이은희 외, 2015; 강소량, 최은영, 2016; Mannheim, 1952). 두 가지의 세대 개념에 따라 세대에 관한 연구는 세대효과(Cohort effect)와 연령효과(Age effect) 또는 생애주기효과(Life stage effect)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세대효과는 역사적 경험의 공유로 정리될 수 있는데(김혜영, 2004), 동일 또는 유사한 경험 사건에 따른 사회적 의식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박명호, 2009). 특히, 청소년기를 관통하는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코호트 효과가 나타난다(박명호, 2009). 따라서 10세 단위로 집단을 조작하여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세대효과를 고려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이내영, 정한울, 2013).

연령효과는 개인의 생애과정의 발달과정 하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의식 변화에 주목한다. 연령효과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숙과정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정 개인의 성장단계에 따른 생애주기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정형화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세대가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선택에 미치는 이질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효과를 주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박명호, 2012; 이주희 2014; 이준한, 2014). 개인의 생애주기는 자기이해(Self-interest)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치나 복지에 대한 개인의 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박명호, 2009; 이정화, 문상호, 2015). 특히 연령과 자기이해를 결합한 개념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각 세대에게 주어진 상황에 근거하여 추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정화, 문상호, 2015; Goerres & Tepe, 2010).

세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령효과보다는 세대효과가 사회과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대의 특정한 경험을 연령효과의 기준에 따라 명목적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연령효과와 세대효과 개념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어수영, 2006). 따라서 세대 구분에 대한 연령을 통제하는 것은 명확하게 세대를 구분한다고 담보할 수 없다(박명호, 2009).

2. 복지에 대한 연구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김봉근 외, 2013; 김영미, 2016; 전영준, 2013; 박명호, 2009; 이재경, 장지연, 2015). 경제적 관점에서 세대 간 불평등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분배의 비형평성에서 비롯된다(Williamson et al., 2003). 특정세대에 편향된 자원의 분배는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였으며, 그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이재경, 장지연, 2015). 노동시장에서 청년에 대한 실제 실업률(8.6%)과 체감 실업률(22.5%)의 차이 간극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느끼는 박탈감과 청년층에 대한 비우호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Matsumoto et al., 2012).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은 소득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득에서 파생되는 주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실물자산 가격은 현재 청년층이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을 미치고 있다(박종훈, 이성우, 2016).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배신감은 세대 간 이질적 태도를 견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박명호, 2009).

세대 간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각 세대는 집단적인 정치행동을 통해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 선거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대 간 대결 구도는 특정 지지집단에 대해 왜곡된 자원배분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대 간 불평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된다(이재경, 장지연, 2015). 집단 간 행동보다는 국가 주도하의 복지 확대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전영준, 2013; 현대경제연구원, 2013). 복지확대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자원마련으로 파생될 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상기에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세대에 따른 복지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불평등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한 논문은 전무하다.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고착화함과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의 결여는 세대 간의 복지수요와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체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모형에서도 유효한 Fairlie(1999; 2005; 2007)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6년 두 년도를 설정하여 연도별로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회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규명하고 향후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방법론: 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Oaxaca(1973)와 Blinder(1973)에 의해 소개된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은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규명가능하게 해준다. 계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해체기법은 수학적 분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석적 측면에서 지니는 유용성이 상당하다(이성우, 2009; 황재희, 2017). 해체기법이 소개된 초기에는 노동시장 내 남녀 간 임금차별 요인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구학(=출신지역별 차별), 정책평가, 고용시장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금재호, 2010; 박종훈, 이성우, 2016; 신광영, 2011; 하성규, 이성우, 2001; 황재희, 2017). 하지만 Oaxaca와 Blinder가 제안한 해체기법은 종속변수가 선형인 최소자승(Least Square) 모형에

적합한 방식이다. 종속변수가 이산형(Discrete)인 경우에는 최우도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추정되므로 전통적인 해체기법을 모형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계적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성우 외, 2005). Ault et al(1991)와 Wachter and Megbolugbe(1992)은 종속변수가 이산형태인 경우 집단 간 비교가능 여부를 일련의 검정과정을 통해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한 후에 해체기법의 적용을 제안하였지만 상기 방법은 검정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통계적 문제점 및 과정의 복잡성을 해결한 이산형 해체기법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Bowblis & Yun, 2010; Fairlie, 1999; 2005; 2007; Pritchett & Yun, 2009).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다양한 해체기법 모형 중 Fairlie(1999; 2005; 2007)가 제안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기법은 집단 간 비교 이전에 표본 정립 시 집단의 분산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합동표본(Pooled Sample)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통계적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복잡한 통계적 검증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linder(1973)와 Oaxaca(1973)의 전통적 해체기법과 동일한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Blinder와 Oaxaca의 방법을 적용한 복지(=분배)에 대한 2030세대와 5060세대(40세대) 간 차이는 아래의 식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

$$\overline{Y^{5060}} - \overline{Y^{2030}} = [(\overline{X^{5060}} - \overline{X^{2030}})\widehat{\beta^{5060}}] + [\overline{X^{2030}}(\widehat{\beta^{5060}} - \widehat{\beta^{2030}})] \quad \text{식 (1)}$$

위 식(1)에서 $\overline{X^{\text{세대}}}$ 은 개별 독립 변수의 평균값의 행 벡터(Vector)를 나타내며, $\widehat{\beta^{\text{세대}}}$ 는 각 세대의 계수 행렬(Matrix)을 나타낸다. Fairlie(1999; 2005; 2007)를 참조하여 비선형 형태인 $Y = F(X\hat{\beta})$ 의 해체기법을 적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의 식 (2)와 같다²⁾.

-
- 1) 본 연구에서는 2030세대, 40세대, 50세 이상 세대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함. 본문에서는 편의상 2030세대와 5060세대(=50세 이상 세대를 통칭)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서술하였음을 밝힘
 - 2) $Y = F(X\hat{\beta})$ 에 해체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Y평균은 $F(X\hat{\beta})$ 와 같을 필요가 없어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

$$\overline{Y^{5060}} - \overline{Y^{2030}} = \left[\sum_{i=1}^{N^{5060}} \frac{F(X_i^{5060} \beta^{5060})}{N^{5060}} - \sum_{i=1}^{N^{2030}} \frac{F(X_i^{2030} \beta^{5060})}{N^{2030}} \right] + \left[\sum_{i=1}^{N^{2030}} \frac{F(X_i^{2030} \beta^{5060})}{N^{2030}} - \sum_{i=1}^{N^{2030}} \frac{F(X_i^{2030} \beta^{2030})}{N^{2030}} \right] \quad \text{식 (2)}$$

식 (2)에서 $N^{\text{세대}}$ 은 세대별 표본 수, $\overline{Y^{\text{세대}}}$ 은 종속변수의 평균, F는 로지스틱(Logistic) 분포로부터 도출된 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한다. 식 (1)과 식 (2) 우측의 첫 번째 항은 모형에서 통제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세대 간 복지 태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 효과(Endowment Effect or Characteristics Effect)를 나타낸다. 식 (1)과 식 (2)에서 우측의 두 번째 항은 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통제하지 못한 부분 또는 측정 불가능(Unmeasurable)한 부분으로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효과(Unexplained Effect) 또는 잔차효과(Residual Effect)라고 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측정 불가능한, 또는 설명되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그룹 간 차이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모형 내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잔차효과는 분석결과 해석 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아(Farilie, 2005; Jones, 1983)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해석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성효과(Endowment Effect)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풀이한다. 한편, 식 (2)는 아래의 식 (3)으로 변환하여 정리할 수 있다.

$$\overline{Y^{5060}} - \overline{Y^{2030}} = \left[\sum_{i=1}^{N^{5060}} \frac{F(X_i^{5060} \beta^{2030})}{N^{5060}} - \sum_{i=1}^{N^{2030}} \frac{F(X_i^{2030} \beta^{2030})}{N^{5060}} \right] + \left[\sum_{i=1}^{N^{5060}} \frac{F(X_i^{5060} \beta^{5060})}{N^{5060}} - \sum_{i=1}^{N^{2030}} \frac{F(X_i^{5060} \beta^{2030})}{N^{5060}} \right] \quad \text{식 (3)}$$

식 (3)은 2030세대의 회귀계수(β^{2030})를 우측 첫 번째 항에 적용한 결과로 대체기법 적용 시 첫 번째 항의 가중치로 사용되며, 독립변수 X^{5060} 의 평균값은 두 번째 항의 가중치로 사용된다. 이에 식 (2)와 식 (3)의 우측 첫 번째 항에 적용된 회귀계수($\hat{\beta}^{\text{남}}, \hat{\beta}^{\text{여}}$)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axaca and Ransom(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식 (2)와 식 (3)의 첫 번째 항에 세대 변수를 포함한 집단 전체(Pooled)의 회귀계수($\hat{\beta}^*$) 결과를 적용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세대별 분산을 동일하게 변형함으로써 분석대상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한

다. 아울러 도출된 회귀계수는 세대를 통제된 상태로 추정된 함수의 계수로서, 순수하게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식 (2)와 식 (3)의 첫 번째 항 부분을 위 방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overline{Y^{5060}} - \overline{Y^{2030}} \text{의 특성 효과} = \sum_{i=1}^{N^{5060}} \frac{F(X_i^{5060} \hat{\beta}^*)}{N^{5060}} - \sum_{i=1}^{N^{2030}} \frac{F(X_i^{2030} \hat{\beta}^*)}{N^{2030}} \quad \text{식 (4)}$$

식 (4)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대한 설명변수 전체의 특성효과를 보여준다. 개별 설명변수가 함축하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는 하단의 식 (5) 및 식 (6)를 통해 수치화가 가능하다.

$$F(\hat{\alpha}^* + X_{1i}^{5060} \hat{\beta}_1^* + X_{2i}^{5060} \hat{\beta}_2^*) - \frac{1}{N^{5060}} \sum_{i=1}^{N^{5060}} F(\hat{\alpha}^* + X_{1i}^{2030} \hat{\beta}_1^* + X_{2i}^{5060} \hat{\beta}_2^*) \quad \text{식 (5)}$$

$$F(\hat{\alpha}^* + X_{1i}^{2030} \hat{\beta}_1^* + X_{2i}^{5060} \hat{\beta}_2^*) - \frac{1}{N^{5060}} \sum_{i=1}^{N^{5060}} F(\hat{\alpha}^* + X_{1i}^{2030} \hat{\beta}_1^* + X_{2i}^{2030} \hat{\beta}_2^*) \quad \text{식 (6)}$$

식 (5)와 식 (6)은 X_1 , X_2 변수의 세대 간 차이를 나타낸 식이다³⁾. 개별 변수의 세대별 차이는 각 변수의 평균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예측확률은 개별 변인에 대하여 5060세대의 특성이 2030세대의 특성으로 연속적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 식 (5), 식 (6)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성격을 분산과 표본 수 조절을 통해 유사하게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표본 수가 많은 집단(=5060세대)을 중심으로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을 반복하고 순위(Ranking)를 반영하여 일대일 매칭의 형태로 두 집단을 구성한다. 상기 과정은 표본 수에 의해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모형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며 집단 간 동질화를 유도한다.

2. 자료 및 변인설명

본 연구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의 간극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론의 적용뿐만 아니라

3) Fairlie(1999, 2005)의 제시된 식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매년 조사되는 자료로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5차(2010년), 11차(2016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두 시점 간의 비교를 통해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통제된 변인은 하단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세대를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2030세대를 기준으로 4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실증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세대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다. 먼저,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문제이다. 앞서 어수영(2006)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세대 구분에 대한 연령을 통제하는 것이 세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담보할 수 없다. 상기에 확인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2030세대, 40세대, 50대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서론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 세대와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2030세대에서 쓰이는 “헬조선”, “3포세대”, “88만원 세대” 등의 용어는 2030세대의 처지를 비판하는 자조적인 용어로 기성세대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주된 용어이다(김영미, 2016). 2030세대는 주거 및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어려움은 소득 및 기타 문제로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40세대의 경우에는 비록 IMF와 해당 집단의 사회 진출 시기가 겹쳐 경제 불황기를 거쳤지만, 현재 일정수준의 소득성숙기에 도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직장에서도 중간 관리자, 또는 자영업에서도 일정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이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1980년대의 경제호황기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한 집단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2017)에 따르면 2030세대의 경우에는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8% 수준인 반면, 40대 이상 세대에서는 66~73%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2030세대와 그 외 세대 간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세대 집단의 상황, 복지에 대해 견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2030세대, 40세대, 5060세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하단의 변인설명 과정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인은 분배와 성장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4점 척도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3, 4)를 1로,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1, 2)를 0으로 구분하였다. 분배의 경우 복지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배를 복지의 개념으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 및 주거특성, 정부정책 및 개인의 정치성향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인구 및 사회경제학 특성

본 연구에서 통제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교육수준, 근로유형이다. 세 가지 지표는 경제적 구조 및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차이를 대변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육성취의 남녀 간 차이는 무차별해졌지만(통계청, 2015),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강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에 해당하는 여성 집단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소외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해당 집단의 차별은 결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의 이탈로 나타난 경력단절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종훈, 이성우, 2016). 노동시장에서 한계 영역에 있는 여성 2030세대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기타 집단에 비해 높은 연유로 타 세대와 복지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성별 간 복지 인식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류만희, 최영, 2009).

교육수준은 경제적으로 개인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변인(Proxy variable)이다(박종훈, 이성우; 2013; 하성규, 이성우, 2001). 복지수요가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면, 고학력(=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대졸 이상이 아닌 교육수준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에서 세대 간의 경제적 요건이 무차별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해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교육수준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김영순, 여유진, 2015).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 통계에 의하면 대학진학률이 70.8%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률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은 청년층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내 진입이 수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이승윤, 2016). 경제적 성취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대졸 이상의 청년층에서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대졸 이상의 경우에도 복

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실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로유형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자발적, 비자발적)로 구분하였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점유하기 위한 장년층과의 경쟁, 아르바이트 및 비교적 질이 높지 않은 일자리 경쟁은 노동시장에서 기 선점하고 있는 장·노년층에 비해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이재경·장지연, 2015). 또한 IMF이후 전략화된 고용구조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계화가 고착화되었다. 고용구조의 위계화는 임금격차와 일자리 간의 유동성을 제한하였다. 특히, 청년층에 해당하는 2030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지만 하향취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김영미, 2016; 이찬영, 2008).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대 간에 복지에 대한 수요는 차별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2) 생활, 주거, 복지, 환경 특성

삶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매우 만족, 만족)와 그렇지 않은 경우(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향상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주요 목표이다(강소랑, 최은영, 2016). 삶의 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싼 경제적 수준, 건강, 여가, 취업여부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강상경, 2012; 정순돌, 이현희, 2012; 정운영, 정세운; Diner & Oishi, 2000). 세대별로 소득이나 부의 수준, 노동시장 내 지위, 건강 등의 여건이 동일 생애주기 궤적에 회귀한다고 추측한다면, 삶의 만족도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한 인식도 세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점유형태로 대변할 수 있는 주거문제는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세대 간 복지수요에 대한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자가를 점유하여 주거안정을 수월하게 추구할 수 있지만(김현태, 남진, 2012; 박종훈, 이성우, 2016),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위치하여 자산소득이 성숙되지 못한 2030세대는 이전세대의 부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는 자가 점유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이재경, 장지연, 2015).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젊은 층의 주거 빈곤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황규성, 이재경, 2014). 이러한 요인은 세

대 간의 복지에 대한 수요의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및 사회여건과 관련된 변인은 복지범위에 대한 인식,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한 인식,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복지수요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이해관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우명숙, 남은영, 2014; 이상록, 김형관, 2014). 동일 시점에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관통하여 성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각 세대는 동질적인 가치관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범위, 복지를 위한 세금확대,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세대 내적으로는 비교적 유사한 인식을, 세대 간에는 이질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조사된 세대 간 복지 관련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성장보다는 복지(=분배)를 우선하며, 특히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과 선택적 복지를 우선하는 50대와는 차이를 보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통제된 다양한 복지 및 사회여건으로 형성된 인식은 세대 간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 시, 군 및 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였다. 서울 및 광역시에 대비하여 시 지역, 특히 군 및 도농복합군으로 특징지어지는 농촌지역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주거환경(=교통 접근성, 상하수도 등) 및 생활환경(=의료시설 수, 교육시설 등) 등이 열악하다(상수도 통계, 보건복지통계연보 참조). 비우호적인 주거 환경에 따라 고령세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2030세대의 인구증가와 맞물린 주거수요의 증가로 주거 및 주거서비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일부 도시구성원은 우호적인 주거 환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배제된 집단을 중심으로 서울 및 특광역시에서도 주거복지에 대한 복지확대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정치관심 및 성향 특성

정치관심 및 성향 특성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으로 구상하였다. 세대에 따른 이념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이,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박명호, 2009; 이현우, 이정진, 2013). 세대 간 정치성향의 차이는 정치과정을 통해 증폭되며, 정당, 언론,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대 갈등을 연상시키는 수사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대 간 대결구도를 확립하였다(박경숙 외, 2013; 박길성, 2014; 이현우, 이정진, 2013). 이들은 자원배분에 대한 세대 간

불평등과 형평성(Generational Equity) 문제를 제기하여 특정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인한 동질적 집단의 특징을 수월하게 띄지 못했던 각각의 세대는(박재홍, 2009) 동일한 배경인식 하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결집의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세대에 편향된 자원배분을 실시할 것이며, 이는 세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이현우, 이정진, 2013; 하연섭, 2008). 세대 간의 갈등은 최근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복지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야당(=자유한국당)을 지지한 50대 이상의 세대는 성장 위주의 태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변수의 정의

항목		변수설명
종속변수		
복지(=분배)에 대한 인식		분배=1, 성장=0
독립변수		
성별	성별	남성=1, 여성=0(참조집단)
교육수준	교육수준	대졸 이상=1, 대졸 미만=0(참조집단)
근로유형	근로유형1	임금근로자
	근로유형2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근로유형3	자발적, 비자발적 미취업자(참조집단)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만족=1, 만족하지 않음=0(참조집단)
주거	점유형태	자가=1, 차가=0(참조집단)
복지범위	복지범위에 대한 인식	보편적 복지=1, 보편적 복지 아닌 경우=0(참조집단)
복지확대	세금인상 반대	1~7점, 점수가 높을수록 세금인상을 반대함
불평등	소득,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	1~7점,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고 인식함
거주지역	거주지역1	서울 및 광역시
	거주지역2	시
	거주지역3	군 및 도농복합군(참조집단)
정치관심 및 성향	정치관심도	정치에 관심 있음=1, 관심없음=0(참조집단)
	정치성향1	진보 및 다소 진보
	정치성향2	중도
	정치성향3	보수 및 다소 보수(참조집단)

IV. 분석결과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한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형1(=2030+40세대)과 모형2(=2030+5060)로 구분하여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⁴⁾. 이항 로지스틱 분석 시 자료에 제시된 모수추정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횡단면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연유로 일부 독립변인에서만 유의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⁵⁾. 하지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합리적이고, 해체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독립변인의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일관성(Consistency)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결과는 본 연구모형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박중훈, 이성우, 2016).

본 연구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아닌 연유로 본 고에서는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표본(Pooled Sample)에서 사용된 세대를 구분하는 변인(2030세대)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두 시점 간의 복지에 대한 태도의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면, 모형1(=2030세대 VS 40세대)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가 5.42%에서 1.61%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0대에서 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2030세대 VS 50대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4.36%에서 7.64%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태도는 2030세대는 복지 선호로 변화되었지만(45.6%→55.3%), 50대 이상 세대는 성장 중심으로 (50.0%→47.7%) 나타났다.

통합표본의 평균적인 복지에 대한 태도를 한계효과(marginal effect)⁶⁾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분석연도별로 각 세대에 대한 2030세대의 한계효과는 40세대 모형의 경우, 2010년 6.36%에서 2016년에는 3.00%로 감소하였다. 반면 50대 이상 모형의 경우

4) 기초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지면 분량의 제약상 본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기초통계 분석 결과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기를 바람

5) 모수추정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표본이 모수에 근접하게 변환되어 대다수의 독립변인에서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

6)
$$\frac{\partial \text{Prob}(y = \text{복지선호})}{\partial x_k} = \frac{\partial}{\partial x_k} \left(\frac{e^{\sum_{k=1}^K \beta_k x_k}}{1 + e^{\sum_{k=1}^K \beta_k x_k}} \right) = \frac{e^{\sum_{k=1}^K \beta_k x_k}}{(1 + e^{\sum_{k=1}^K \beta_k x_k})^2} \beta_k = \frac{e^{\sum_{k=1}^K \beta_k x_k}}{(1 + e^{\sum_{k=1}^K \beta_k x_k})} \times \frac{1}{(1 + e^{\sum_{k=1}^K \beta_k x_k})} \beta_k$$

$$= P(1 - P)\beta_k \quad \text{단, } P = \text{Prob}(y = 1)$$

에는 2010년 1.59%에서 2016년 -7.86%로 분배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른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모형에 포함한 모든 변인을 통제 한 가운데 분석하면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량이 실측된 평균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서 통제한 독립변인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가 실제보다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2〉 한계효과

변인	2010년(5차)	2016년(11차)
40대	6.36%	3.00%
50대 이상	1.59%	-7.86%

하단의 〈표 3〉은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해체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대한 2030세대와 40세대 모형(이하 모형1)을 먼저 살펴보면, 복지에 대한 태도는 40세대와 2030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세대 모두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의 절대적 수치(=차이) 역시 그 간극이 좁혀지는 것으로 드러나(5.42%→1.61%) 2030세대와 40세대의 복지에 대한 태도의 방향성 및 영향력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50대 이상 세대의 모형(이하 모형2)에서는 2030세대의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는 달리 50대 이상의 복지(=분배)에 대한 태도는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2010년: 50.0%→2016년: 47.7%). 수치적으로 2030세대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복지에 대해 약 10%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50이상 세대는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의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특성효과와 잔차효과로 구분하여 도출한 결과는 〈표 3〉의 하단 부분에 정리되어 있다. 모형 내에서 통제된 독립변수들에 근거하여 설명 가능한(=특성효과)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차이는 모형1에서는 전체(100.0%)를 기준으로 -10.52%, -33.60%로 부(-)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에서 통제된 2030세대가 지닌 세대 특성만으로 복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2030세대가 지닌 특성은 복지에 대한 선호 또는 수요가 관찰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03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를 비교한 모형2의 분석결과에서는 특성효과가 2010년 11.35%에서

2016년 38.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해체기법 분석결과

변인	5차(2010년)				11차(2016년)			
	모형1 (40세대)		모형2 (50대 이상 세대)		모형1 (40대 세대)		모형2 (50대 이상 세대)	
분배	0.5106		0.5000		0.5695		0.4770	
분배(2030세대)	0.4564		0.4564		0.5534		0.5534	
차이	0.0542		0.0436		0.0161		-0.0764	
	Est.	Gap	Est.	Gap	Est.	Gap	Est.	Gap
성별	-0.0089	-16.37%	-0.0039	-8.92%	-0.0003	-1.91%	0.0000	-0.01%
교육수준	-0.0133	-24.50%	-0.0014	-3.10%	-0.0015	-9.05%	0.0111	-14.50%
근로유형1	0.0021	3.95%	-0.0057	-13.18%	-0.0002	-1.32%	-0.0045	5.88%
근로유형2	-0.0019	-3.48%	0.0068	15.60%	-0.0006	-4.01%	0.0002	-0.25%
삶의 만족도	0.0024	4.45%	0.0097	22.16%	0.0000	-0.14%	0.0026	-3.40%
점유형태	0.0167	30.80%	-0.0120	-27.61%	0.0039	24.08%	-0.0026	3.41%
복지범위	0.0000	0.03%	-0.0007	-1.64%	-0.0006	-3.66%	0.0005	-0.68%
세금인상 반대	0.0004	0.66%	0.0023	5.27%	0.0105	65.14%	0.0086	-11.20%
소득불평등	0.0003	0.54%	0.0027	6.26%	-0.0030	-18.85%	-0.0044	5.80%
거주지역1	0.0001	0.20%	0.0052	11.96%	0.0019	11.68%	0.0008	-0.98%
거주지역2	0.0029	5.36%	0.0214	48.96%	-0.0004	-2.78%	0.0006	-0.81%
정치관심도	0.0003	0.58%	0.0001	0.33%	0.0002	1.38%	-0.0009	1.11%
정치성향1	-0.0037	-6.82%	-0.0180	-41.35%	-0.0120	-74.63%	-0.0417	54.61%
정치성향2	-0.0032	-5.92%	-0.0015	-3.39%	-0.0031	-19.53%	0.0003	-0.40%
특성효과	-0.0058	-10.52%	0.0050	11.35%	-0.0052	-33.60%	-0.0294	38.58%
잔차효과	0.0600	110.52%	0.0386	88.65%	0.0213	133.60%	-0.0470	61.42%

모형에서 통제하지 못한 잔차효과는 설명변수들의 영향과 세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갈등이 혼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모형1에서는 잔차효과가 증대되고 있어 2030세대와 40세대 간의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집단적으로 2030세대와 40세대로 대별되는 2차 연령기(Second Age), 3차 연령기(Third Age)는 세대 간의 사회적 이질성을 함축하고 있다(이정화, 문상호, 2015; Sadler, 2001).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2030세대와 40세대의 나타나는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과 인적 네트워크 범위에 차이에 따른 40세대의 노동시장 내 우위, 자산의 축적으로 인한 사회적 기득권으로의 전환, 이를 통한 이념의 보수화 경향은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현우, 이정진, 2013). 실제로 '대한민국 불평등 리포트'에 따르면, 30세대와 40세대의 의미있는 인식차이가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다(이정화·문상호, 2015). 모형2에서 잔차효과는 모형1과 마찬가지로 큰 것으로 정(+)의 값으로 나타나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50대 이상 세대는 과거를 반추하면서 현재의 복지 수준을 약 58%가 높게 판단하고 있지만, 2030세대의 경우에는 약 35% 정도만 복지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젊은 층에서 복지수준이 경제성장 정도에 대비하여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한계에(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또는 미취업자로 전환)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경력, 보유자산 등의 인적자본 축적이 전무한 2030세대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에 놓여있고, 이러한 상황은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성효과를 중심으로 해체기법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형1의 결과에서 영향력이 나타났으나 그 경향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은 복지에 대한 인식에 모든 세대, 모든 시점에서 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1에서는 2010년 대비 2016년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개선된 반면, 모형2에서는 동 기간에 부(-)의 영향력이 삼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근로유형은 모형1에서 임금근로자(근로유형1)인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근로유형2)인 경우에는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금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환경 내에서 근무한다면 세대와는 무관하게 복지에 대한 태도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에는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근로자에서 전환되어(황수경, 2012)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복지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모형2에서는 임금근로자(근로유형1)는 2010년 부(-)의 영향력

을 미치다가 2016년에는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는 2010년에 대비하여 2016년에는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가 50대 이상 세대의 고용 및 경제여건을 악화하여 복지에 대한 태도가 2030세대와 동일하게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임금근로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에는 2030세대와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유효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모형1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절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는 2010년에는 2030세대와 분배에 대한 태도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에 대한 방향성과 무관하게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삶의 만족도 변인은 2010년에는 삶의 만족도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보이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희석된다고 할 수 있다.

점유형태는 모형1에서는 복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모형2에서는 점유형태가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변인의 경우에는 세금 인상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세금인상에 대한 반대성향이 강하다면, 2016년을 기준으로 2030세대와 40세대 간의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유효하게 시현되고 있으며, 2030세대와 50대 이상 세대 간은 태도 차이가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세대와 40세대 간의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2030세대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장 토대 위에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관점, 또는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금인상의 부담이 세금확대를 반대한다고 예측된다. 40세대의 경우에는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충분한 복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복지보다는 성장을 견지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5)⁷⁾. 소득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형1에서는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

7)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서 2030세대는 약 45~48% 수준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0세대 이상에서는 약 66%~73% 수준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모형2에서는 2030세대와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관점에서 풀이하면, 2030세대와 40세대는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2030세대), 향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40세대). 특히 양 세대를 관통하는 고용문제, 주거문제들은 50대 이상 세대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동일하게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는 무차별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50대 이상 세대는 소득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성숙되었다는 점과 자산이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타 세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재경·장지연,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에 대해 2030세대와 차이가 나타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및 광역시에서는 모형1에서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를, 시 지역에서는 2010년도 모형2에서만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는 태도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청장년층의 인구구조의 대부분을 이루는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2030세대와 40세대의 주거서비스의 향유가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 2030세대가 비교적 열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2030세대는 복지의 대한 수요가 40세대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2030세대와 40세대 간에 서울 및 광역시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대두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관심도에 관한 영향력은 모든 모형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치성향에서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적인 성향인 경우에는 모형1에서는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부(-)의 영향을 드러냈으며, 2016년에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진보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태도는 정(+)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기조를 유지하나 50대 이상 세대 내에 형성된 복지에 대한 태도가 2030세대와는 차별적임을 드러낸다. 정치세력이 중도인 경우, 모형1은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형2에서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부호와는 무관하게 중도성향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 결론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용 및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원배분의 편향성은 세대 간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를 영위해 나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세대 간 갈등은 복지제도의 확대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분배의 확대는 현재 내재된 세대 간 갈등의 폭을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통한 갈등 봉합이 선행되어 현 시점에서 복지에 대한 태도의 세대 간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해당 요인을 중심으로 제안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은 세대 간 차이에 대해 표면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복지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고,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완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2010년, 2016년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경제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해체기법을 차용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서도 적용 가능한 확장된 해체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는 모형에서 통제된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한계효과) 실제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연구모형 내에서 독립변인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특성효과는 모형1에서는 부(-)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잔차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분석되어 모형 내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의 특성효과는 2010년, 2016년 각각 11.35%, 38.58%로 나타나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모형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급부로 모형 내에서 설명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효과는 감소하였다.

셋째, 모형에서 통제된 개별 독립변인(=특성효과)은 시기변화에 따라 일치된 영향력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잔차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맥락적 효과가 복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 내 만연한 세대 간 불평등적 요소(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가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불

평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층이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추진된 청년 노동정책이 일자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청년층(2030세대)으로 한 노동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 편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가격의 상승, 전·월세 증가로 인한 주거비의 과도한 부담은 2030세대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이다. 주거시장에서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주거문제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실효성을 담보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 보았으며, 해당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최신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이를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부 한계도 지니고 있다. 먼저, 세대 구분에 있어서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10세 단위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해당 연령집단 내 세대 내에 동일한 경험이 향유되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세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론에도 서술하였듯이,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는 잔차효과가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잔차효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효과 위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 차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잔차효과를 규명할 수 없다. 또한 복지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여건(소득, 일자리 등)이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변인을 모형 내에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술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세대 간 복지 인식에 대한 차이를 보다 엄밀하게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육수준, 근로유형, 정치성향 등으로 표본을 세분화하여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미시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세대 간 복지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상경. (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소랑·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 금재호. (2010).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는가?.” 「노동리뷰」, 9: 48-69.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영순·여유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5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 복지수준과 재정의 균형」, 84-115.
- 김윤탈·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90: 331-378.
- 김봉근·석재은·현은주. (2013). “세대 내 소득탄력성을 활용한 우리나라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과 국제비교.” 「국제통상연구」, 18(3): 65-84.
- 김현태·남진. (2012). “서울시 가구특성에 따른 생활권별 주택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3(2): 155-173.
- 김혜영. (2004). “한국 가족문화의 세대별 특징.”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1: 4-47.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의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박경숙·서이종·김수중·류연미·이상직·이주영.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경제·문화·정치적 메커니즘」. 서울: 다산출판사.
- 박길성. (2014).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재흥.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박종훈·이성우. (2013).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주의 거소불일치 선택 요인.”

- 「서울도시연구」, 14(1): 1-22.
- 박종훈·이성우. (2016). “주택의 투자가치와 시장가치의 변화가 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파트 유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91: 19-40.
- 박종훈·이성우. (2016). “확장된 해체기법을 이용한 남녀 간 고용률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1980~2010.” 「한국인구학」, 39(1): 1-27.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5-34.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 우명숙·남은영. (2014).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1): 167-195.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 37-83.
- 이상록·김형관. (2014).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6(1): 163-189.
- 이성우. (2009). 「알기쉬운 국토연구방법론: 해체기법: 차이와 차별에 대한 통계학적 논증」. 안양시: 국토연구원.
- 이성우·박지영·민성희·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승윤. (2016).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은희·김경자·이성림·유현정·차경옥·이영애·이준영. (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2(2): 197-227.
- 이재경·장지연. (2015). “한국의 세대불평등과 세대정치: 일자리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주도 불평등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 15-44.
- 이주희. (2014). “세대별 고용형태에 따른 복지국가 만족도 및 선호 비교.” 「경제와 사회」, 103: 129-165.
- 이준한. (2014). “한국 이념의 보수화와 생애주기효과.” 「국제정치연구」, 17(1): 27-48.
- 이찬영. (2008). “임금근로자의 하향 취업 형태 분석.” 「금융경제연구」, 345호. 한국은행.
- 이현우·이정진. (2013). “세대별 이념갈등의 이질성: 세대 내 이슈태도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9(1): 57-81.
- 전영준. (2013). “세대간 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과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5(2): 107-151.

- 정순돌·이현희.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2.
- 정운영·정세운. (2011). “1인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연구: 저소득가구 와 고소득가구의 비교.” 「한국노년학」, 21(4): 1119-1134.
- 통계청.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광역시: 통계청.
- 하성규·이성우. (2001). “서울 거주자의 출신지역별 자가점유 특성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 지역격차와 지역차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2): 33-56.
- 하연섭. (2008).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 현대경제연구원. (2013).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20~30대는 복지 불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525.
- 황규성·이재경. (2014). “금융화와 소득 및 주택의 불평등 심화.” 「동향과 전망」, 91: 199-231.
- 황수경. (2012).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황재희. (2017). 「사후적 정책평가의 대안과 해석 -농촌지역개발정책을 활용한 평가모형 개발과 실증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ult, R. W., Ekeland Jr, R. B., Jacson, J. D., Baba, R. S., Saurman, D. S. (1991). “Smoking and Absenteeism.” *Applied Economics*, 23: 743-754.
- Blinder, Alan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 8(4): 436-455.
- Bowblis, J. R. (2010)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the use of drug therapy.” *Social Science Research* 39: 674-684.
- Diener, E., and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IT Press.
- Fairlie, Robert W. (1999). “The Absence of the African-American Owned Business: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1): 80-108.
- Fairlie, Robert W. (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4): 305-316.
- Fairlie, Robert W. (2007). “Why are Black-Owned Businesses Less Successful than White-Owned Businesses: The Role of Families, Inheritances, and Business

- Human Capital.” *Journal of Labor Economics*, 25(2): 289-323.
- Goerres, A. and Tepe, M. (2010). “Age-based Self-interes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Older People’s Attitudes towards Public Childcare in 12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6): 818-851.
- Jones, F. L. (1983). “On decomposing the wage gap: A critical comment on Blinder’s method.” *Journal of Human Resources*, 18(1): 126-130.
- Mahha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atsumoto, M., M., Hengge, M., and Islam, I. (2012). *Tackling the youth employment crisis: A macroeconomic perspective*. Geneva: ILO.
- Myles, J. (2002).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Elderly? Essay on the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axaca, Ronald.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s*, 14: 693-709.
- Oaxaca, Ronald., and Micheal Ransom.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 5-21.
- Pritchett, J. B., and M. S. Yun. (2009). “The in-hospital mortality rates of slaves and freemen: Evidence from Touro Infirmary, New Orleans, Louisiana, 1855-1860.”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6: 241-252.
- Sadler, W. (2001). *The Third Age: Six Principles of Growth and Renewal after Forty*, Boston: Da Capo Press.
- Wachter, S. M., Megbolugbe, I. F. (1992).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ome ownership.” *Housing Policy Debate*, 3(2): 333-370.
- Williamson, J. B., Tay. K. M., and Stephanie, A. H. (2003).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Interdependence, and the Framing of the Debate Over Security Reform.”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0(3): 3-14.
-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통계청.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상수도 통계, 환경부.
-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5차, 11차, 보건사회연구원.

박종훈(朴鐘薰): 주저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 전공 소속으로 2013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박사수료를 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거복지, 정책평가, 사회갈등, 고용 등이다(hohojonghoon@gmail.com).

이성우(李成雨): 교신저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남가주대학)에서 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지역개발, 정책평가, 국제개발협력 등이다(seonglee@snu.ac.kr).

부록1. 로짓 회귀분석 결과

변인	2010년(5차)				2016년(11차)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절편	-0.9851 **	0.4662	-0.3008	0.3802	-0.0111	0.4053	-0.1601	0.2801
세대변수	-0.2546 *	0.1446	-0.0638	0.1518	-0.1221	0.1080	0.3150 ***	0.1087
성별	-0.4112 ***	0.1570	-0.3356 ***	0.1292	-0.0162	0.1115	-0.0798	0.0897
교육수준	0.2639 *	0.1438	0.0121	0.1523	0.0295	0.1130	-0.0796	0.1034
근로유형1	0.1474	0.1840	0.0802	0.1407	-0.0439	0.1360	0.0459	0.0995
근로유형2	-0.1229	0.2372	0.1570	0.1655	-0.0465	0.2026	0.0044	0.1310
삶의 만족도	-0.1535	0.1492	-0.2348 *	0.1252	-0.0128	0.1204	-0.1111	0.0920
점유형태	0.3118 **	0.1393	-0.1557	0.1263	0.1891 *	0.1087	-0.0791	0.0908
복지범위	0.0045	0.1354	0.0245	0.1182	0.0856	0.1083	-0.0177	0.0900
세금인상	-0.0152	0.0428	-0.0255	0.0390	-0.1672 ***	0.0353	-0.1385 ***	0.0288
소득불평등	0.1932 ***	0.0552	0.1637 ***	0.0496	0.1348 ***	0.0466	0.0762 **	0.0349
거주지역1	-0.3312	0.2614	-0.3912 **	0.1988	-0.4414 *	0.2499	-0.0340	0.1618
거주지역2	-0.2740	0.2599	-0.6042 ***	0.1981	-0.3506	0.2481	-0.0423	0.1587
정치관심도	0.2863	0.2224	0.0662	0.1786	0.1130	0.1644	-0.1633	0.1230
정치성향1	0.5195 ***	0.1824	0.4094 ***	0.1519	0.8002 ***	0.1422	0.7320 ***	0.1164
정치성향2	0.4615 **	0.1795	0.2279	0.1440	0.6470 ***	0.1350	0.4454 ***	0.0999
-2Log L	1,285.90		1,660.47		2,066.44		3,191.15	
표본 수	769		1,484		1,065		2,621	

주 :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 한국복지패널 5차, 11차 조사자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병리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윤기웅·유승현

신공공관리론 이후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국민에 대한 책무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가 한국 및 선진국 정부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제도가 실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성과측정/평가의 병리현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중 하나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분석결과 실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병리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거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그 정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특성, 업무특성, 개인특성, 리더십이 병리현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리더십의 4개 유형(팀형, 과업형, 인기형, 무관심형) 중 팀형 리더십을 갖춘 직속상관 하에서 병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형 리더십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팀형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성과측정/평가의 병리현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리더십]

1. 서론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는 성과관리가 신공공관리(NPM) 물결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영미 선진국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

어 운영되어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IMF 이후 악화된 정부 재정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즉, 통합적인 정부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한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직무성과계약제도 등 기관, 사업,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다양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들이 급속도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한국 정부에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정부 전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산출된 성과정보가 정부 기관 및 사업/정책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계획수립 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Wholey, 1999). 또한 성과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mmons, 1995; Bruijn, 2002; Wang, 2002; 최은석·안희정, 2002).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동 제도가 실제로 이러한 기대 및 믿음을 충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 또한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그 증거 중 하나가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모태가 된 미국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의 폐지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PART 폐지의 이유 중 하나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OMB, 2010).

성과관리제도는 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로는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 업무 및 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평가 방식의 문제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성과관리제도의 설계의 미비 및 담당자들의 전략적 행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인 병리현상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병리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동안 학술적으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제시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병리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의 진화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은 성과관리제도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성과관리제도 도입 시 기대하였던 정부의 성과향상은 요원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성과관리 제도 중 하나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¹⁾ 또한 기존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진화에 따라 병리현상의 유발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기관특성, 과제특성, 개인특성, 리더십유형에 따라 병리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병리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일반화를 굳건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병리현상은 실제 과제 담당자들의 행태에 의해서 유발되고 이러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직속상관의 리더십에 따라 병리현상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운영실태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II.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병리현상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²⁾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획재정부가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 하의 하위 제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관리제도 중 하나이다.³⁾ 동 제도는 “부처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기획재정부, 2018b: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및 활용하여 운영된다. 성과계획서는 “각 부처가 전략목표 및

-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2003년부터 존재해왔고, 그 원류는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2) 동 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과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 3)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핵심사업 평가제도(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된다.

[당년도(t년도)] 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전년도(t-1년도)에 수립된다(기획재정부, 2016: 1).⁴⁾ 성과보고서는 차년도(t+1년도)에 당년도(t년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18b: 1). 요컨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전년도(t-1)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당년도(t)에 활동을 수행하며, 차년도(t+1)에 성과를 측정/평가함으로써 운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측정/평가 결과는 차차년도(t+2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동 제도의 운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 성과계획 수립단계는 ① 전년도(t-1)에 각 부처가 전략,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⁵⁾를 통해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자율적으로 검증한 이후 기획재정부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성과계획서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신규사업(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이 적정한지부터 점검한다. 즉,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적정한지를 확인 및 점검한다. ③ 이어서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가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⁶⁾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④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한다. 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수정하여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취합하고, 「국가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⑥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된 이후 당년도(t) 2월 중 정부예산안과 국회의 확정예산 간 차이를 교정하기 위해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확정한다. 둘째, 당년도(t)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한다. 셋째, 차년도(t+1)에는 당년도에 이루어진 예산 배분 및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진다. 그

4) 성과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기관의 비전·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 가능[하다. 그리고] 당해연도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 2016: 1).”

5) 자체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전체의 1/2이상 민간위원)”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재정사업 평가 담당 차관급 또는 차장급 공무원”이 맡는다(기획재정부, 2016: 4).

6) 주로 “전체적인 성과계획 목표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기획재정부, 2016: 23).

와 동시에 성과보고서 작성도 이루어지는데 ① 이 과정은 각 부처가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성과보고서 작성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결산보고서의 서류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한다.⁷⁾ ②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③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성과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④ 기획재정부는 수정 및 보완된 성과보고서를 취합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감

〈그림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 과정



자료: 기획재정부(2016; 2017b; 2018b)

7) 「국가회계법」 제14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사원에 제출하고,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보고서(성과보고서 포함)를 국회에 제출한다. ⑥ 당년도(t) 성과보고서는 차차년도(t+2)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참조 활용된다.

2)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조직의 전략목표와 성과를 정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규명하고 측정하며 향상시키는 일련의 지속적인 과정이다”(Aguins, 2009). 즉, 각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 및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환류하여 궁극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성과측정은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과관리 시스템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oister, 2003: 4).

성과측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표의 명확성, 측정 가능성, 외부변수의 통제, 학습을 통한 성과향상 가능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공부문은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유승현, 2013: 138-140). 첫째, 공공부문의 기관 및 정책/사업의 이해관계자 수는 민간부문에 비해 많고 종종 이해가 충돌되므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종종 모호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Nutt & Backoff, 1992: 3). 둘째,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고, 설사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성과 중에서는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측정이 쉽지 않다. 셋째, 공공부문의 성과는 업무 담당 기관 또는 개인의 노력 외에 다양한 외부환경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교부나 통일부의 경우 타국가 또는 북한의 사정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외교부나 통일부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넷째,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업무는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 유사한 업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환경 및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의 성과측정 결과를 활용한 학습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성과측정 방식을 강행할 경우 자칫 부작용, 즉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성과측정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도 병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설계는 원래 의도하였던 성과의 향상은 고사하고 예산낭비 또는 위법/부당한 행태만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병리현상과 관련하여 과거 여러 학자들(Smith, 1995; Hood, 2006; 2007)이 다양한 유형의 병리현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과정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한다.

3)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과정별 병리현상과 대응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목표치 설정방식으로 Hood(2008)가 경고한 병리현상 외에도 각 단계별로 다양한 병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⁸⁾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인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병리현상과 그 대응을 살펴보면, 첫째, 성과계획 단계 중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병리현상(근시안적 관리, 터널효과, 전략적 지표 변경)이 나타날 수 있다. ① 성과지표 설정 시,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관리(Myopia)가 나타날 수 있다(Smith, 199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2016: 13)는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의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OMB, 2003). ②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만을 선정하려는 터널효과(Hood, 2006; 2007; 2008)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2016: 12)는 “지표 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기획·조정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성만을 고려하여 ‘회의 빈도’, ‘참가자 수’와 같은 지엽적인 지표만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여전히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고 측정이 용이한 지표만을 선정하려는 행태가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③ 향후 성과평가를 잘 받는데 유리하도록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전략적 행태도 나타날 수 있다(유승현, 2013). 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2016: 14)

8) Hood(2007: 95)는 성과측정방식을 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로 평가하는 목표치달성도 방식(Target System), ② 기관/사업/개인의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매겨 점수화하는 서열화 방식(Ranking System), ③ 업무의 성과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는 판단적 방식(Intelligence System)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는 “원칙적으로 기존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017a: 5). 그러나 공공부문 사업 중 많은 경우 사업의 예산 및 내용(수행방식, 수혜대상 등)이 종종 바뀌게 되고, 그럴 경우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유지하는 것은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공정에 따라 성과지표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계획 단계 중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병리현상(톱니효과, 전략적 목표치 변경)이 나타날 수 있다. ①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치를 낮추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Hood, 2006; 2007; 2008).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2016: 17)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국제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합리적인 목표치인지 여부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다. ② 성과지표 수정과 마찬가지로 향후 성과평가를 잘 받는데 유리하도록 목표치를 수정하는 전략적 행태도 나타날 수 있다(유승현, 2013). 이에 대응하여 기획재정부(2017a: 5)는 목표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사업 중 일부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따라서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합리적인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셋째, 집행 단계에서는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담당자의 전략적 행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두 가지 병리현상(산출왜곡, 문턱효과)이 나타날 수 있다. ① 담당자가 맡고 있는 다양한 업무 중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는 업무에만 매달리는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이 나타날 수 있다(Hood, 2006; 2007; 2008).⁹⁾ 이러한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2016: 2)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위사업을 성과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가를 받지 않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여 되도록 모든 업무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 12). 그러나 여전히 제외되는 단위사업이 존재하고, 제외되는 단위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9) 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위사업을 성과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 2).

하더라도 단위사업 내 실제 성과평가를 받지 않는 세부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세부사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존재할 수 있고, 성과지표의 포괄성은 완전히 담보되기 어려우므로 성과가 측정되지 않는 활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② 이미 이전에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한 업무는 굳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업무에만 매달리는 전략적 행태(문턱효과 포함)가 나타날 수도 있다(Smith, 1995; Hood, 2006; 2007; 2008; 유승현, 2013).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획재정부는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그러한 권고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 및 실무자들이 많다.

넷째, 성과측정 단계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병리현상(왜곡된 해석, 왜곡된 보고)이 나타날 수 있다. ① 성과측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산출된 성과자료를 성과평가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왜곡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시 측정방법을 일부러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는 전략적 행태¹⁰⁾(Smith, 1995; 유승현, 2013)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2016)는 측정산식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만, 때로는 복잡하게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하여 측정산식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태가 나타난다. ②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측정 결과 산출된 성과자료를 성과평가에 유리하도록 가공 또는 변경하거나 성과평가에 불리한 자료는 누락시켜버리는 왜곡된 보고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이 결산점사의 일환으로 성과보고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적발 시 자칫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된 다른 병리현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유승현, 2013).

마지막으로 환류 단계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학습을 통해 성과목표체계, 성과지표, 목표치 등이 적시에 수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등이 그 효용성이 떨어져도 기존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변화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직화(ossification)”가 나타날 수 있다(유승현, 2013: 150).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다음 해의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거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한 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전략적 행태도 나타날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유승현(2013)과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성과측정 병리현상의 경우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전략적 행태(gaming)”로 명명한다.

이상 살펴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단계별 병리현상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단계별 병리현상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유형	개념	학자
성과 계획	성과 지표	근시안적 관리	장기적인 목표달성과는 관계없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려는 경향	Smith(1995)
		터널효과	여러 가지 다른 성과지표 중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려는 경향	Smith(1995)
		지표변경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과거에 설정된 성과지표를 수정하려는 경향	유승현(2013)
	목표치	톱니효과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다음 측정기간의 목표치 상향 설정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	Hood(2006; 2007; 2008)
		목표치변경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과거에 설정된 목표치를 수정하려는 경향	유승현(2013)
집행		산출왜곡	중요하지만 측정되지 않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측정되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	Smith(1995); Hood(2006; 2007; 2008)
		문턱효과	설정된 목표치를 최대한 초과달성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달성하려는 경향	Hood(2006; 2007; 2008)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자신들의 성과를 좋게 보이기 위해 잘못 또는 왜곡하여 보고하는 경향	Smith(1995)
		왜곡된 해석	측정된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	Smith(1995)
측정결과 환류		경직화	전략/성과지표/ 목표치 등이 효용성이 떨어져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Smith(1995)

자료: 유승현(2013) 수정

2. 선행연구 검토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병리현상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례연구 또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실제 이러한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병리현상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이다.

1) 병리현상 존재

병리현상의 존재여부를 검토한 연구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외연구로 Blau(1963)는 미국 주정부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정교한

성과측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관료들의 산출왜곡 행태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즉, 공무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측정되는 업무에만 집중을 기울이는 행태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Glaser(1991)는 Kansas주 Wichita시의 사례를 토대로 성과측정시스템이 부정적 효과(작업량 또는 산출물 지표에의 집착, 톱니효과, 정량지표에의 집착 등)를 야기한다고 제시하였다. Bruijn(2002)은 기존연구들을 참조하여 성과관리가 다양한 긍정적 효과(투명성 증대, 동기부여, 책임성 향상)를 유발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전략적 행태 유발, 혁신 저해, 협력 저해, 특정 지표에 대한 집착 등)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Mclean 외(2007)는 영국 감사위원회의 종합적 성과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CPA)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병리현상(범주화 오류,¹¹⁾ 산출왜곡, 문턱효과, 모순된 인센티브(contradictory incentives), 제3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경고하였다.

국내연구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우선 최성락·박민정(2008)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과목표를 검토하여, 다양한 유형의 톱니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¹²⁾ 공동성 외(2009)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Bevan & Hood(2006)가 제시한 5가지 유형의 병리현상(톱니바퀴 효과, 문턱효과, 비변별성, 변동성, 결과 왜곡)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병리현상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에 더하여 병리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중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방식도 제시하였다. 금재덕·이성도(2009)는 병리현상을 의도하지 않은 것(계량지표의 지나친 강조, 상호협조의 저해와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근시안적 관리, 조직경직화)과 의도한 것(특정 성과지표에의 고착, 차선추구, 왜곡된 보고, 왜곡된 해석, 게임)으로 구분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러한 병리현상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존재함을 밝혔다. 신민철(2010)은 병리현상을 성과측정단계인 성과목표 선정단계(터널현상, 근시안적 목표, 톱니효과), 성과목표 수행단계(문턱효과, 노력치환), 성과목표 분석단계(결과조작)로 분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병리현상이 실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남승하(2012)는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병리현상(달성하기 쉬운 지표 설정, 측정하기 쉬운 지

-
- 11) 범주화 오류(categorization errors)는 성과측정결과를 범주로 바꿔 평가점수로 환산할 때 생기는 오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값을 범주로 바꿀 때, 범주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
- 12) 최성락·박민정(2008: 135)은 톱니효과의 유형으로 “성과성장률을 계속 낮추는 유형, 성장목표를 고정시키는 유형, 성과목표를 낮추었다고 증가시키는 유형, 그리고 일정 수준에서 성과목표를 수렴시키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설정, 단기성과 지표 설정, 낮은 목표치 설정)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 내 각 시군 시설관리공단 및 기타 지방공사와 국토해양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승현(2013)은 성과관리단계(성과관리체계 → 성과측정 → 측정결과 환류)별로 병리현상을 구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어느 정도 병리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비록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에 대한 용어가 남발되고 있으며,¹³⁾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전의 연구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러한 병리현상들이 단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를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승현(2013)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석대상이 정부기관 중 일부만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으므로 일반화를 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전 연구들이 제시한 다양한 용어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개념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일반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2)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병리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요인인 기관특성, 업무특성, 개인특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평가결과에 기관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Norcross & Adams, 2007; Gilmour, 2008; 윤기웅·유승현, 2014)이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들만이 분석을 하였다. 예로 신민철(2010)은 부·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정책기관과 처·청과 같은 차관급 집행기관을 비교하여 장관급 정책기관에서 병리현상이 더 빈번하게

13) 예로 성과지표 집착(Smith, 1995), 산출왜곡(Hood, 2006; 2007), 노력치환(Kelman & Friedman, 2009)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 성과개념의 모호성, 목표에 대한 합의 등과 같이 성과관리 자체가 가진 한계점은 이미 앞에서 서술을 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예로 금재덕·이성도(2009: 355-357)는 병리현상의 원인으로 “성과개념의 모호성, 정책결정자들의 지나친 관심과 강조, 평가의 도구로서 성과관리, 자료수집의 한계, 불공정한 평가결과의 활용”을 들고 있다. 신민철(2010)은 원인으로 “정보의 불균형, 목표의 불명확성, 보상의 강조”를 들고 있다.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외부환경변수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에 외부환경변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를 향상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전략적 행태를 통해 성과평가점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업무의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거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Pollitt & Bouckaert, 2004; 윤기웅 외, 2015). 즉, 계량화된 또는 결과위주의 성과측정 및 평가가 용이한 업무의 경우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다. 한편, 업무특성에 따라 병리현상이 달라지는 것을 검토한 연구로는 신민철(2010)과 유승현(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민철(2010)은 업무특성을 기획, 집행, 평가, 지원 업무로 구분할 때, 지원과 기획 업무의 경우 병리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업무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일정한 측정주기를 보이는 과제의 경우 특히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강조되고 측정결과에 대한 결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강한 왜곡행태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과제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신민철, 2010: 151). 반면, 유승현(2013)은 업무특성에 따라 병리현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셋째,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은 공무원들의 성과평가제도에 대응한 전략적 행태(gaming)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개인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공동성 외(2009)는 채용직급, 현재직급, 근무기간, 현재직급 근무기간,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병리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혔다. 한편 신민철(2010)은 직급과 근무년수에 따라 성과측정의 병리현상이 달라짐을 보여주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개인특성변수와 관련하여 성과측정 왜곡현상들에 대한 응답자의 직급이나 근무년수 등과 관련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과측정제도가 부서나 개인의 평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불만과 관계가 깊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성과측정 수행과정에 대한 불신감은 과제 지표 선정과정에서의 제한적 참여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과도한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신민철: 2010: 150-151).

넷째, 상관의 리더십은 조직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한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리더의 관심 및 지원과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이석환, 2012). 따라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병리현상도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에서 리더십이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리더십이 병리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의 실증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재덕·이성도(2009)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리더십이 병리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정책결정자(장관, 실·국장)들이 성과측정을 강조하면 할수록, 실무 담당자들이 성과관리의 부담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게 되어 결국 성과측정시스템의 효과성이 감소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과측정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리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연구들에서 제시된 병리현상 중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목표치 설정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리현상만을 추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과정별로 정리하였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년도($t-1$)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당년도(t)에 활동을 수행하며, 차년도($t+1$)에 성과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측정 결과는 차차년도($t+2$)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성과계획(성과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 집행 → 성과측정 → 환류’로 그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병리현상을 정리하였다. 성과관리 단계별 병리현상에 대한 설문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문항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유형	설문문항
성과 계획	성과 지표	근시안적 관리	1년 내 성과달성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터널효과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표변경	설정된 성과지표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다
	목표치	톱니효과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목표치변경	설정된 목표치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다
집행		산출왜곡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는 업무(지표)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턱효과	달성하기 쉬운 업무(지표)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지표)는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성과자료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가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목표달성에 불리한 성과자료를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
			설정된 측정방법을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곡된 해석		측정방법을 가급적 추상적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과자료를 목표달성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측정결과 환류	경직화		기관의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검토 및 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지표의 검토 및 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목표치의 검토 및 수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도 성과보고서의 실적치가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에 적절하게 반영된다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내용이 성과계획서 작성에 적절하게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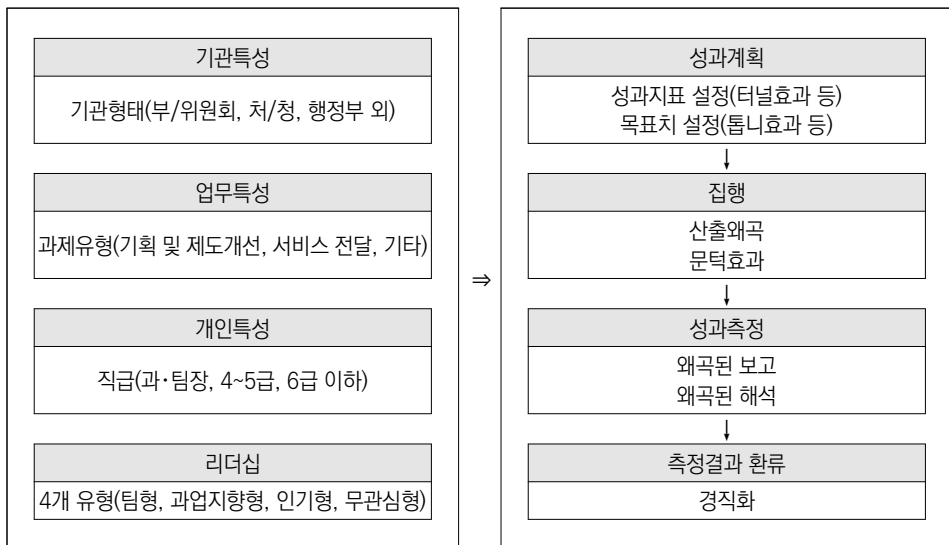
자료: 유승현(2013) 수정

둘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기관특성, 업무특성, 개인특성, 리더십 등이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본 연구는 각 특성별로 병리현상의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기관특성은 기관형태에 따라 부/위원회, 처/청, 행정부 외로 분류하고, 업무특성은 과제유형에 따라 기획 및 제도개선, 서비스 전달, 기타로 분류하였으며,¹⁵⁾ 개인특성은 직급에 따라 과·팀장, 4-5급, 6급 이하로, 리더십은 Blake & Mouton(1964)의 관리격자모형을 참조하여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 두 축을 기준으로 4개 유형(팀형, 과업형, 인기형, 무관심형)으

15) 기획 및 제도개선 업무와 서비스 전달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유형의 경우 그 수가 적어 분류의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기타로 범주화한다.

로 분류하였으며,¹⁶⁾ 분석방법으로는 F-test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상 살펴본 요인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다중회귀분석 시 활용되는 독립변수들이 모두 범주형 변수이므로 더미변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특성의 경우에는 행정부 외를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기준변수를 제외한 부 위원회 변수와 처/청 변수 2개 변수를 더미변수로 설정한다. 업무특성의 경우에는 기타과제유형을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기획 및 제도개선, 서비스 전달로 2개 더미변수를 설정한다. 개인특성의 경우에는 6급 이하를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과·팀장과 6급 이하로 2개 더미변수를 설정한다. 리더십의 경우에는 무관심형을 기준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리더십 유형인 팀형, 과업지향형, 인기형으로 3개 더미변수를 설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모형



16) 본 연구는 직속상관의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5개 질문문항 씩 10개 질문문항을 활용하였고,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 5개 질문문항의 평균값은 각각 5.43, 5.35였다.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의 강약을 구분하기 위해 중위수를 활용하였고, 중위수는 각각 5.60, 5.60였다. 즉, 5개 질문문항의 평균값이 5.60 이상은 강한 것으로 5.60 미만은 약한 것으로 설정하여,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 모두 강한 경우에는 팀형으로, 모두 약한 경우에는 무관심형으로, 과업지향성은 강하고 관계지향성이 약한 것은 과업형으로, 과업지향성이 약하고 관계지향성이 강한 것은 인기형으로 분류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을 위해 2015년 11월 4일부터 2015년 12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52개 중앙관서 중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¹⁷⁾ 조사대상은 각 중앙관서의 정부업무평가(재정사업, 주요정책과제, 행정관리역량) 관련 담당자 및 과장과 각 관리과제 담당자 및 과장 이고 수집된 설문은 총 923부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기관유형	부/위원회	525	56.9	직급	과·팀장	195	21.1
	처/청	369	40.0		4~5급	210	22.8
	행정부 외 ¹⁾	29	3.1		6급 이하	509	55.1
	결측치	0	0.0		결측치	9	1.0
	합계	923	100.0		합계	923	100.0
소속부서	성과관리/예결산	232	25.1	근무년수	5년 미만	129	14.0
	사업담당	673	72.9		5년~10년 미만	225	24.4
	결측치	18	2.0		10년~15년 미만	179	19.4
	합계	923	100.0		15년~20년 미만	165	17.9
과제유형	기획 및 제도개선	253	27.4		20년 이상	219	23.7
	서비스 전달	346	37.5		결측치	6	0.7
	기관 간 조정	55	6.0		합계	923	100.0
	규제	24	2.6	현재업무 담당기간	6개월 미만	194	21.0
	건축·토목	38	4.1		6개월~1년 미만	336	36.4
	교육·훈련	41	4.4		1년~2년 미만	238	25.8
	연구·개발	76	8.2		2년 이상	149	16.1
	결측치	90	9.8		결측치	6	0.7
	합계	923	100.0		합계	923	100.0

주: 조사대상 중 행정부 외 기관은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있다.

17) 당시 조사가 제외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5개 기관이다.

IV. 분석결과

1. 성과측정 병리현상의 추세 분석: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한국 정부에 성과관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리현상의 추세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해, 과거에 수행된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연구자들에 따라 사용된 질문문항의 문구가 다르고, 그 척도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유승현(2013)의 연구의 경우에는 질문문항, 척도, 자료수집대상도 동일하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병리현상에 따라 또는 연구자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경우 최근 들어 병리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리현상에 대응한 그동안의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및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감사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승현(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3년 전에 비해 모든 병리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살펴보면, 측정이 용이한 지표만을 선정하려는 터널효과(62.6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성과관리 경험을 환류하여 성과지표 등을 적절히 수정하지 않는 경직화(48.7점)의 문제는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성과측정 병리현상의 추세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공동성 외	금재덕·이성도	신민철	유승현	본 연구
성과 계획	성과 지표	근시안적 관리		65.0	66.8	70.0	60.5
		터널효과			65.6	70.7	62.6
		지표변경				66.9	56.9
	목표치	톱니효과	65.8	59.0	59.2	72.3	50.8
		목표치변경				60.9	49.6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41.5	55.7	60.5	50.3
		왜곡된 해석		56.5		59.1	52.0
집행		산출왜곡	67.6	58.5	64.7	66.6	60.0
		문턱효과	63.7		56.6	61.2	50.8
환류		경직화		60.0		49.0	48.7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공동성 외	금재덕·이성도	신민철	유승현	본 연구
자료수집대상		행정안전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앙관서 공무원	중앙관서 공무원
자료수집 기간		2008년 10월	2008년 11월	2009년 9월	2012년 4월~5월	2015년 11월~12월

자료: 공동성 외(2009); 금재덕·이성도(2009); 신민철(2010); 유승현(2013)

주1: 년월은 자료가 수집된 시기를 의미한다.

주2: 기존 연구마다 측정에 활용한 척도가 상이하므로 비교를 위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로 표시하였다.

주3: 금재덕·이성도(2009)는 산출왜곡을 '특정성과지표에의 고착'으로 통니효과는 '게임'으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신민철(2010)은 산출왜곡을 '노력치환'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왜곡된 보고를 '결과조작'으로 칭하고 있다.

2.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기관특성별 분석결과

기관형태에 따른 병리현상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왜곡을 제외한 9개 병리현상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형태에 따라 병리현상의 발생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처/청의 평균이 부/위원회나 행정부 외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처/청의 병리현상 유발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처/청이 부/위원회에 비해 병리현상 유발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업무를 기획위주와 집행위주로 분류할 경우 부/위원회는 주로 기획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청은 집행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행위주의 업무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¹⁹⁾ 한편, 처/청이 행정부 외 기관에 비해 병리현상 유발위험이 낮은 것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경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성과관리제도가 행정부 기관에 먼저 도입되었고, 행정부 외 기관은 그 후에 도입되어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 및 개선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산출왜곡만은 행정부 외 기관에서 병리현상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유승현(2013)의 연구에서도 처/청이 다른 기관형태에 비해 병리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었다.

19) 기획위주의 업무는 양적지표와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실제 그 기획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표 5〉 기관특성별 차이 분석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부/위원회	처/청	행정부 외	F값
성과 계획	근시안적 관리	4.34	4.09	4.28	3.506*
	터널효과	4.49	4.22	4.48	4.606*
	지표변경	4.13	3.78	4.00	6.469**
	톱니효과	3.72	3.29	3.86	12.116**
	목표치변경	3.64	3.20	3.83	11.760**
집행	산출왜곡	4.26	4.16	3.72	2.597
	문턱효과	3.64	3.42	3.83	3.227*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3.72	3.24	3.53	14.193**
	왜곡된 해석	3.80	3.42	3.62	7.752**
환류	경직화	3.52	3.23	3.69	9.805**

*p<0.05, **p<0.01

2) 과제특성별 분석결과

병리현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과제특성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톱니효과, 목표치 변경, 왜곡된 보고, 왜곡된 해석 네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 및 제도개선 업무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병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서비스 전달 업무가 다른 유형에 비해 병리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기획 및 제도개선 업무보다는 서비스전달 업무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가 용이한 과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병리현상이 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6〉 과제특성별 차이 분석결과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기획 및 제도개선	서비스전달	기타	F값
성과 계획	근시안적 관리	4.25	4.14	4.31	1.174
	터널효과	4.45	4.24	4.47	2.539
	지표변경	4.04	3.86	4.04	1.661
	톱니효과	3.71	3.43	3.53	3.188*
	목표치변경	3.63	3.35	3.53	3.251*
집행	산출왜곡	4.31	4.15	4.26	1.061
	문턱효과	3.74	3.51	3.55	2.241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3.66	3.37	3.66	4.693**
	왜곡된 해석	3.83	3.49	3.70	4.562*
환류	경직화	3.46	3.32	3.50	2.313

*p<0.05, **p<0.01

3) 개인특성별 분석결과

병리현상에 대한 공무원들의 개인특성별 인식 차이는 다음 〈표 7〉과 같다. 병리현상 중 직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톱니효과와 경직화 등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인 톱니효과는 4~5급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 등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는 경향인 경직화는 과·팀장에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병리현상 모두 4~5급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실제 성과평가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주로 4~5급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7〉 개인특성별 차이 분석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과·팀장	4~5급	6급 이하	F값
성과 계획	근시안적 관리	4.26	4.31	4.19	0.616
	터널효과	4.31	4.49	4.37	0.950
	지표변경	3.97	4.04	3.96	0.230
	톱니효과	3.41	3.76	3.52	3.664*
	목표치변경	3.49	3.47	3.47	0.021
집행	산출왜곡	4.30	4.28	4.14	1.566
	문턱효과	3.55	3.61	3.53	0.238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3.47	3.60	3.50	0.583
	왜곡된 해석	3.55	3.74	3.62	0.946
환류	경직화	3.24	3.46	3.45	3.277*

*p<0.05, **p<0.01

4) 리더십 유형별 분석결과

직속상관의 리더십 유형별 병리현상 차이는 다음 〈표 8〉과 같다. 10개 병리현상 중 근시안적 관리와 터널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병리현상의 경우 리더십 유형에 따라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더십 유형은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비교하면 팀형의 병리현상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속상관의 리더십이 관계지향성과 과업지향성 모두를 갖추고 있을 때 병리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인기형은 경직화를 제외한 7개 병리현상의 평균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직속상관이 인기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병리현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리더십 유형별 분석결과

성과관리 단계	병리현상	팀형	과업형	인기형	무관심형	F값
성과 계획	근시안적 관리	4.21	4.49	4.53	4.21	1.298
	터널효과	4.31	4.71	4.66	4.39	1.852
	지표변경	3.84	3.96	4.34	4.11	3.325*
	톱니효과	3.26	3.47	4.05	3.84	15.331**
	목표치변경	3.17	3.14	3.92	3.79	16.648**
집행	산출왜곡	4.34	4.14	4.32	4.06	3.228*
	문턱효과	3.31	3.51	3.92	3.80	10.015**
성과 측정	왜곡된 보고	3.24	3.53	3.88	3.79	13.129**
	왜곡된 해석	3.38	3.65	4.03	3.89	10.027**
환류	경직화	2.96	3.55	3.63	3.85	58.928**

*p<0.05, **p<0.01

3.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합검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특성, 과제특성, 개인특성, 리더십 유형은 병리현상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 또는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변수에 의해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에서 논의된 모든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병리현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열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9〉 및 〈표 10〉과 같다. 우선적으로 각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면,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병리현상이 근시안적 관리와 터널효과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8개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인 2개 모형은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인 8개 모형은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병리현상별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병리현상인 지표변경의 경우에는 리더십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리더십 유형이 지표변경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팀형 리더십의 β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지표변경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목표치 설정과 관련된 병리현상 중 톱니효과의 경우 개인특성과 리더십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 4~5급의 β 값이 정(+)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4~5급이 6급 이하에 비해 톱니효과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더십 유형 중에서는 팀형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무관심형에 비해 톱니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표치 변경의 경우에는 기관특성과 리더십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특성 중에서는 처/청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부 외 기관에 비해 전략적인 목표치 변경 문제가 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더십유형 중에서는 팀형과 과업지향형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무관심형에 비해 전략적인 목표치 변경 문제가 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집행 과정과 관련된 병리현상인 산출왜곡과 문턱효과는 모두 리더십 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산출왜곡의 경우 리더십 유형 중 팀형 리더십의 β 값이 정(+)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산출왜곡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문턱효과의 경우 리더십 유형 중 팀형 리더십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문턱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성과측정과 관련된 병리현상 중 왜곡된 보고의 경우 과제특성과 리더십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제특성 중 서비스 전달 업무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전달 업무가 기타유형의 업무보다 왜곡된 보고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리더십 중 팀형 리더십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왜곡된 보고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왜곡된 해석의 경우에는 리더십 유형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팀형 리더십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왜곡된 해석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류와 관련된 병리현상인 경직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는 과제특성과 리더십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과제특성의 경우 서비스전달 업무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전달 업무가 기타유형의 업무보다 경직화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리더십 중 팀형 리더십의 β 값이 부(-)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경직화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검토 I

독립변수		종속변수	성과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근시안적 관리	터널효과	지표변경	톱니효과	목표치변경
기관 특성 (기관 형태)	부/위원회		0.131 (0.048)	0.091 (0.033)	0.066 (0.023)	-0.004 (-0.001)	-0.219 (-0.077)
	처/청		-0.081 (-0.029)	-0.141 (-0.051)	-0.229 (-0.080)	-0.362 (-0.130)	-0.617* (-0.215)
	행정부 외		기준변수				
과제 특성 (업무 유형)	기획 및 제도개선		-0.056 (-0.019)	-0.026 (-0.009)	-0.001 (0.000)	0.154 (0.052)	0.096 (0.031)
	서비스 전달		-0.125 (-0.046)	-0.191 (-0.069)	-0.134 (-0.047)	-0.056 (-0.020)	-0.130 (-0.046)
	기타		기준변수				
개인 특성 (직급)	과·팀장		0.132 (0.040)	0.043 (0.013)	0.163 (0.048)	0.059 (0.018)	0.196 (0.057)
	4~5급		0.144 (0.045)	0.130 (0.040)	0.123 (0.037)	0.257* (0.080)	-0.008 (-0.002)
	6급 이하		기준변수				
리더십 유형	팀형		-0.002 (-0.001)	-0.065 (-0.024)	-0.207* (-0.074)	-0.566** (-0.208)	-0.591** (-0.210)
	과업지향형		0.318 (0.053)	0.307 (0.051)	-0.149 (-0.024)	-0.410 (-0.068)	-0.525** (-0.084)
	인기형		0.165 (0.023)	0.092 (0.013)	0.021 (0.003)	0.052 (0.007)	0.100 (0.013)
	무관심형		기준변수				
F-값			1.238	1.667	2.032*	7.643**	7.828**
R2			0.003	0.007	0.011	0.067	0.069

*p<0.05, **p<0.01

〈표 10〉 병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검토 II

독립변수 \ 종속변수		집행		성과측정		환류
		산출왜곡	문턱효과	왜곡된 보고	왜곡된 해석	경직화
기관 특성	부/위원회	0.453 (0.170)	-0.165 (-0.060)	0.175 (0.065)	0.143 (0.050)	-0.082 (-0.039)
	처/청	0.335 (0.124)	-0.335 (-0.128)	-0.284 (-0.104)	-0.196 (-0.068)	-0.265 (-0.123)
	행정부 외	기준변수				
과제 특성	기획 및 제도개선	0.071 (0.025)	0.173 (0.059)	0.001 (0.000)	0.113 (0.037)	-0.088 (-0.039)
	서비스 전달	-0.092 (-0.034)	-0.006 (-0.002)	-0.219* (-0.081)	-0.167 (-0.058)	-0.163* (-0.076)
	기타	기준변수				
개인 특성	과·팀장	0.117 (0.036)	0.151 (0.046)	0.134 (0.041)	0.088 (0.025)	-0.101 (-0.039)
	4~5급	0.150 (0.048)	0.048 (0.015)	0.103 (0.033)	0.170 (0.051)	0.030 (0.012)
	6급 이하	기준변수				
리더십 유형	팀형	0.327** (0.123)	-0.464** (-0.170)	-0.518** (-0.194)	-0.481** (-0.170)	-0.841** (-0.399)
	과업지향형	0.123 (0.021)	-0.202 (-0.033)	-0.188 (-0.032)	-0.159 (-0.025)	-0.270 (-0.058)
	인기형	0.392 (0.055)	0.251 (0.034)	0.045 (0.006)	0.088 (0.012)	-0.119 (-0.021)
	무관심형	기준변수				
F-값		2.321*	4.223**	7.954**	5.556**	19.685**
R2(조정된 R2)		0.014	0.034	0.070	0.047	0.169

*p<0.05,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실태 및 그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병리현상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병리현상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약 20년 간(시범사업 기간 포함) 운영해오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 및 컨설팅 노력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 목표치 등을 발견하여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고 각 기관 담당자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체평가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여 자체평가위원들이 성과계획서 작성 적정성 평가 시 문제시 되는 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est를 실시한 결과 기관특성, 업무특성, 개인특성, 리더십 유형 모두 병리현상에 따라 그 영향정도는 달라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기관특성의 경우 처/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위원회와 행정부 외 기관에서 병리현상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한계점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설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각 기관과 상의를 하여 각 기관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특성의 경우 서비스 전달 업무에 비해 다른 유형의 업무에서 병리현상이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획일적 성과관리제도 운영은 이러한 병리현상을 더욱더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가 업무특성별 지침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셋째,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4~5급에서 병리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직급에 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더욱더 요구되고, 이들이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리더십 유형 중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병리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팀형 리더십 고취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병리현상별로 차이는 있으나 리더십 유형만이 근시안적 관리와 터널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2개 모형을 제외한 8개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 하에서 병리현상

유발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관리제도가 의도한 성과(성과향상, 책임성 확보 등)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속상관들이 팀형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된다. 즉, 과업적인 측면에서 업무활동을 체계화하고 과제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것과 동시에, 부하들과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지원 및 격려를 하는 인간관계적 측면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교육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에서 인기형 리더의 경우 무관심형 리더보다 병리현상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병리현상 외에도 무수히 많은 병리현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Courty & Marschke(2007)이 지적하였듯이,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에 대응해 관리자들의 왜곡된행태가 나타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설계를 하게 되면 다시 그에 대응한 또 다른 왜곡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기존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비록 병리현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병리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위해 활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로 공무원들의 솔직한 응답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부정적인 행태에 대한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약 60점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잠재적 원인 변수 외에도 비전/전략/목표의 불명확성, 불합리한 성과보상체계 등 다양한 원인변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독립변수들이 모두 더미변수라는 한계로 인해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R^2)이 낮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인변수, 특히 등간 또는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설명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동성·조경훈·윤기웅. (2009). “개인성과측정에 있어 측정/평가방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8(2): 59-79.

- 금재덕·이성도. (2009).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347-377.
- 기획재정부. (2016).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_____. (2017a). 「'17년도 성과계획서 수정 지침」.
- _____. (2017b).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_____. (2018a). 「'18년도 성과계획서 수정 지침」.
- _____. (2018b). 「'17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
- 남승하. (2012). “성과측정의 왜곡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성과지표설정 과정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3): 119-142.
- 신민철. (2010). “성과측정 왜곡에 대한 인식 정향성 분석: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4): 133-155.
- 유승현. (2013). “정부기관 재정성과관리의 현황과 과제: 성과측정의 역설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1(3): 135-166.
- 윤기웅·유승현. (2014). “정부 재정성과 측정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성과지표 특성과 사업 특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 63-94.
- 윤기웅·김재근·공동성. (2015).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제도의 성과(인식) 차이 분석: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3): 27-54.
- 이석환. (2012).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7가지 치명적인 도덕적 죄: 이론과 실제간 연계를 위한 함의.” 「지방정부연구」, 16(1): 353-380.
- 최성락·박민정. (2008). “성과관리 도입과 관료의 대응: 톱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2): 135-161.
- 최은석·안희정. (2002). “지방정부의 전략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사례연구: Balanced Scorecard의 응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115-136.
- Ammons, N. D. (1995).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in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The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 Bevan, G. & Hood, C. (2006). “What’s Measured is What Matters: Targets and Gaming in the English Public Health Care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84(3): 517-538.
- Blake, R. R. & Mouton, J. S. (1964). *The Managerial Grid*. Huston, TX : Gulf.
- Bohte, J. & Meier, K. (2000). “Goal Displacement: Assessing the Motivation for

- Organizational Chea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2): 173-182.
- Bruijn de H. (2002).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Public Sector: Strategies to Cope With the Risks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5(7): 578-594.
- Courty, P. & Marschke, G. (2007). “Making Government Accountable: Lessons from a Federal Job Training Progra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5): 904-916.
- Gilmour, J. B. (2008). “Implementing OMB’s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Meeting the Challenges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E. S. Redburn, R. J. Shea, & T. F. Buss (eds.),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ing: How Governments Can Learn from Experience*, 21-48. New York: M.E. Sharpe, Inc.
- Glaser, M. (1991). “Tailoring Performance Measurement to Fit the Organization: From Generic to Germane.”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14(3), 303-319.
- Grizzle, G. A. (2002). “Performance Measurement and Dysfunction: The Dark Side of Qualifying Work.”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25(4): 363-369.
- Hofstede, G. (1981). “Management Control of Public and Not-for-profit Activitie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6(3): 193-211.
- Hood, C. (2006). “Gaming in Targetworld: The Targets Approach to Managing British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4): 515-521.
- _____. (2007). “Public Service Management by Numbers: Why Does it Vary? Where Has it Come From? What Are the Gaps and the Puzzles?” *Public Money and Management*, 27(2): 95-102.
- Kong, D. (2005). “Performance-based Budgeting: The U.S. Experience.” *Public Organization Review*, 5: 91-107.
- Kelman, S. & Friedman, J. N. (2009). “Performance Improvement and Performance Dysfunc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Distortionary Impact of the Emergency Room Wait-Time Target in the English National Health Serv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9(4): 917-946.

- McLean, I., Haubrich, D. and Gutierrez-Romero, R. (2007). "The Perils and Pitfalls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e CPA Regime for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Public Money and Management*, 27(2): 111-117.
- Norcross, E. & Adamson, J. (2007). "An Analysi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for Fiscal Year 2008." *A Working Paper in Government Accountability*. George Mason University: Mercatus Center.
- Nutt, P. C. & Backoff, R. W. (1992). *Strategic Management of Public and Third Sector Organization: A Handbook for Leaders*. CA.: Jossey-Bass.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3). *Performance Measurement Challenges and Strateg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2010).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 S. Government (Fiscal Year 201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oister, T. H. (2003). *Measuring Performance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CA.: Jossey-Bass.
- Pidd, M. (2005). "Perversity in Public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54(5/6): 482-493.
- Politt, C. & Bouckaert, G. (2004). *Public Management Reform: A Comparative Analysis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P. (1995).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ublishing Performance Data in the Public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8(2/3): 217-310.
- Wang, X. H. (2002) "Assessing Performance Measurement Impact: A study of U.S. Local Governments."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6(1): 26-43.
- Wholey, J. S. (1999) "Performance Based Management: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22(3): 288-307.

윤기웅(尹紀雄):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 연구분야는 공공거버넌스, 재무행정, 사업/정책평가, 정책집행, 성과관리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들로는 Modes of Public Governance: A Typology Toward a Conceptual Modeling (2018), 감사종류의 변화과정에 대한 행정사적 고찰: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2018), 정책집행주체별 정책집행부진원인 분석: 2005~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2016) 등이 있다(kwoon@anu.ac.kr).

유승현(柳昇賢):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감사, 공공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행정, 사회복지정책 등이며, 최근 주요논문으로는 “성과감사의 개념화 (2018)”,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에 대한 행정사적 고찰: 성과감사를 중심으로(2018)”,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분석: 중앙관서와 국회의 인식을 중심으로”(2018), “재정사업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가 요인 분석”(2015), “공공부문 자체감사인력의 감사역량에 관한 연구”(2014) 등이 있다(jhk690@korea.kr).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설계 · 리더십 · 자원 · 네트워크 요인을 중심으로

이정희·권기현

본 연구는 인문학대중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설계 이론, 로직모형, 네트워크 분석 등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분석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추진과정의 만족, 추진결과의 만족, 향후 참여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정책(사업)설계 요인, 리더십 요인, 자원 요인, 네트워크 요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역할 적합성, 주관연구기관의 의지, 비전-목표의 적합성, 참여자 상호작용, 자발적 참여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밀도, 중심성을 중심으로 한 인문도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3회), 경북 안동시(3회), 충북 청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강원도 원주시, 전남 목포시가 각 2회씩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인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도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인문도시, 정책설계, 로직모형, 네트워크 분석]

I. 서론

본 연구는 정책설계이론(policy desig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학의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의 존엄성(the dignity of a man) 실현에 있다. 정책학의 창시자 Lasswell(1951: 9-10)은 정책학은 근본적인 문제(basic problem)와 복잡한 모형(complex models)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한 가치 목표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2006년 학계의 ‘인문학의 위기’ 선언 이후 인문학과 인문정신의 중요성은

사회적,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40호)로 시행되고 있다. 인문도시(Humanities City)는 동 법이 지향하는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가 대학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과 궁극적으로 인간을 향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 국민에게로 내면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여가 강조되면서 정부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된 협력적 사업으로 2014년부터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이다.

인문학의 영향력은 크다. 영국 예술인문연구회의 ‘Leading the World’(2008: 3)에서는 예술과 인문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1파운드를 투입하면 국가는 즉각적(단기)으로 10파운드(10배)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15~20(15~20배) 파운드의 장기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의 학문적·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며,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정책설계에 주목한다. 정책설계는 정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정책(사업)설계 면에서 어떤 요인들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문도시지원사업과 관련한 기존 연구가 주로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실증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정책설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요소를 도출하고, 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책학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문도시가 지향하는 인문공동체를 접목하며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 정책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러한 방식의 정책문제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 정책대안은 다른 대안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더 부합하는가? 정책분석의 결과 찾아진 최적대안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등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에 답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정책연구와 정책분석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 실현이라는 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권기현, 2007: 26-27).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정책설계이론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사업)설계, 리더십, 자원, 네트워크 요인 등을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과인 참여자 만족과 향후 참여의지 등과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인문도시지

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사업 개선, 성공적인 인문도시 구축 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인문도시의 개념 및 현황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한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5: 8). 인문학대중화사업¹⁾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범위로 정한 인문도시는 2014년부터 1년형 또는 3년형으로 선정된 전국의 인문도시이다. 특히 2017년은 2014년에 선정된 3년형 인문도시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해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과 및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시기의 적절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사업 구조는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사업 구조

미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현실문제 극복,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 실현		
비전	전국(수도권, 지방)에 균형 있게 분포하는 인문도시 구축		
목적	•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인문학계와 일반 사회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		
활동	인문강좌 개최	인문체험 실시	인문축제 개최

1)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인문도시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길 위의 인문학 등이 있다. 또한 인문 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등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있다.

2017년 전반기 기준, 인문도시는 총 31개이며, 세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17년 전반기 기준, 인문도시 현황(총 31개)

인문 도시 현황	• 수도권(10개): 경기 수원, 경기 남양주, 경기 안산, 인천 계양구,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 인천 부평구, 서울 종로구, 경기 여주, 인천 남구 • 충청권(5개): 충남 홍성군,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세종, 충남 공주 • 강원권(2개): 원주, 춘천 • 경상권(8개): 대구 중구, 경북 영주, 경북 안동, 부산 연제구·해운대구·영도구, 경북 성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산청군, 울산 중구 • 전라·제주권(6개): 광주 광산구, 전북 익산, 전남 목포, 전북 군산, 전북 전주, 제주	
----------------	--	--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인문강좌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둘째, 인문도시는 지역의 인문자산(서원, 향교, 시인, 화가 등) 활용이 사업 구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 등을 필수로 한다. 동 사업은 처음에는 정부의 사업 기획으로 이루어졌으나, 추진형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민, 관, 지자체 협력사업이다.

2) 정책(사업)설계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정책설계이다. Anne L. Schneider & Helen Ingram(1990)은 정책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정책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정책설계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정책의도는 종종 정책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정책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정책설계의 문제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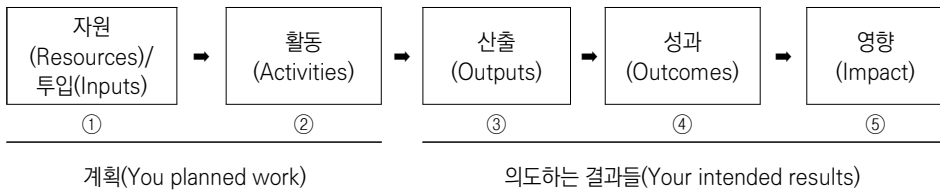
정책설계는 과정(process) 또는 산출물(output)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설계에서 모든 정책 산출물은 그것이 의도적이든, 논리적이든, 합리적이든 여부에 관계없이 설계의 일부분이다. 설계는 기계설계처럼 기계적 이미지, 엄격성이 연상되지만 바람직한 견해는 도시설계처럼 보다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변화하는 과정 또는 산출물로 이해하는 것이다(Anne L. Schneider & Helen Ingram, 1990: 79).

정책은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다른 환경의 많은 사람들이 정책 목적에 따른 지속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책설계의 개념적 구조에는 기관(agents), 대상집단(target populations), 결과(outcomes), 이들 간의 연계

3) 로직모형에 의한 성과 산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평가와 사업 평가 중 사업평가에 더 가깝다. 그래서 사업성과평가의 대표적인 모형인 로직모형(logic model)을 살펴보기로 한다. 로직모형은 필요한 자원과 사업의 성취를 위해 계획한 활동, 성취하기를 원하는 변화 또는 결과들이 관계를 나타낸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이다. W.K.Kellogg Foundation(2006: 1)에서 제시하는 로직모형의 기본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로직모형(logic model)의 기본구조



로직모형은 성과를 산출(output), 성과(outcomes), 영향(impact)으로 제시하며, 단기, 중기, 장기성으로 나눈다. 로직모형에 기초할 때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산출(Outputs)은 인문강좌 참여자 수, 인문강좌 개최 시간, 인문체험 참여자 수, 인문체험 프로그램 수, 인문축제 참여자 수, 인문축제 프로그램 수 등이다. 성과(Outcomes)는 인문강좌 참여자 중 수료자 수, 참여자의 향후 참여의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영향(Impact)은 참여자 만족도, 인문학의 대중적 확산 기여도, 인문학에 대한 인식 제고, 삶의 질 향상, 인문학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네트워크 분석과 인문도시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과정과 정책결정에서 상호의존적 행위자(interdependent actors)들 간 관계를 나타내는 패턴이다(W.J.M. Kickert, E.-H. Klijn and J.F.M. Koppenjan, 1999: 6-10). 네트워크 모형은 거버넌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다. 네트워크 접근법은 전략을 결정할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다양한 행위자들(개인, 연합, 국, 조직)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며, 다른 행위자와 동등한 위치에 존재한다. W.J.M. Kickert, E.-H. Klijn and

J.F.M. Koppenjan은 네트워크 접근은 정부의 조정(governmental steering)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연다며 정책결정과 거버넌스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합리적 중앙통치 관점, 다양한 행위자 관점, 네트워크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기획은 중앙정부(교육부)에서 이루어지나,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매우 자율적이다. 주제 설정, 세부 내용은 해당지역의 주관연구기관(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기관, 지역민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협력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 참여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을 반영한다.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네트워크 분석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문도시 참여자 중심의 네트워크이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참여자 네트워크 양상은 동 사업의 영향 관계 분석에 이어 보다 미시적으로 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공통 요소는 참여자 특성,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자 특성은 주로 개별 참여자 수준에서 접근하며, 상호작용은 방향, 내용, 강도 등이 세부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조는 개인적,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심성과 밀도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네트워크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인문도시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2014년부터 시작된 인문도시지원사업³⁾에 관한 연구는 실제 사업 수행 결과에서 나온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이 주를 이룬다. 동 사업에 관한 변수 간 실증 연구는 현재까지 찾기 어렵다. 강연호(2016)는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며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 시민사회-대학 연구기관-지자체의 상호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박연규(2017)는 수원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수행 경험

3) 인문도시지원사업은 2012~2013년까지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추진되었다. 그 후 단독 사업으로 실시된 것은 2014년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독사업으로 추진된 2014년을 사업의 시작 연도로 보기로 한다.

을 기술하며, 지역에 밀착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올 수 있고, 인문학 대중화의 본래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박구용(2017)은 인문도시 광산의 빛뿔 인문학을 토대로 피어난 ‘광주시민자유대학’은 모든 존재가 공생 공감하는 ‘인문한국’의 꿈이라고 제안하였다. 김지원·윤영득(2017)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고려,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회 마련, 지역의 콘텐츠를 브랜드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인문학대중화에 관한 연구

인문학대중화사업에 있어서는 학문적 성격과 이론적 배경,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방향 제시의 논문이 보고되었으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연구는 드물다. 동 사업과 유사한 지역축제, 관광 분야, 평생학습도시사업에서는 각 사업별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 방법이 시도되었다.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AHP, 구조방정식 등이다. 인문학 대중화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표 3>과 같다.

〈표 3〉 인문학대중화사업 관련 선행 연구

저자	분석대상	분석 방법	분석요소 및 내용	주요 내용
김의태·강대중 (2012)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 과정	인터뷰	-	인문학 강좌(노숙인 대상)는 학습자에게 존재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장으로 기능함.
유범상·이현숙 (2015)	인문학자 및 인문단체, 인문도시 관계자	인터뷰	-	인문학대중화사업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관점에서 분석함. 인문학대중화의 방향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함. 독서동아리, 전국시민인문센터 설치를 제안함.
서희석·이동기 (2004)	지역축제 전문가	설문조사 AHP	지역축제의 효율성, 방문객 만족도, 지역발전의 효과	지역축제 성공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함. 축제운영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주민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
안태기·조태영 (2015)	순천만 갈대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	요인 분석, 상관 분석, 구조 방정식	지역축제서비스 품질, 지역축제 성과, 지역애호도, 도시브랜드 자산	순천만 갈대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이 지각하는 지역 축제 서비스 품질, 지역축제 성과 등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

저자	분석대상	분석 방법	분석요소 및 내용	주요 내용
변종임 등 (2006)	19개 평생학습도시 사업	회귀 분석	개인특성, 직업, 평생교육 인식, 도시특성 등 학습기회 증진,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의식 증대 등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들의 사업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학습자 차원과 기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에 미치는 유 의미한 영향을 분석함.
김남선· 안현숙 (2007)	57개 평생학습도시	문헌 조사, 설문 조사, 분산 분석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 학습자의 인지정도, 평생학습도시 사업 후 학습자의 태도 변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분류하 고, 유형에 적합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개방 안을 제시

Ⅲ. 연구설계

1. 연구흐름도

이 연구는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네트워크 분석, 인터뷰 등의 4단계로 연구되었다. 1단계 요인분석은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네트워크 분석은 2단계에서 분석된 요인 중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연구의 방안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밀도, 중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단계 심층 인터뷰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총 28개 인문도시를 방문하여 현장 인터뷰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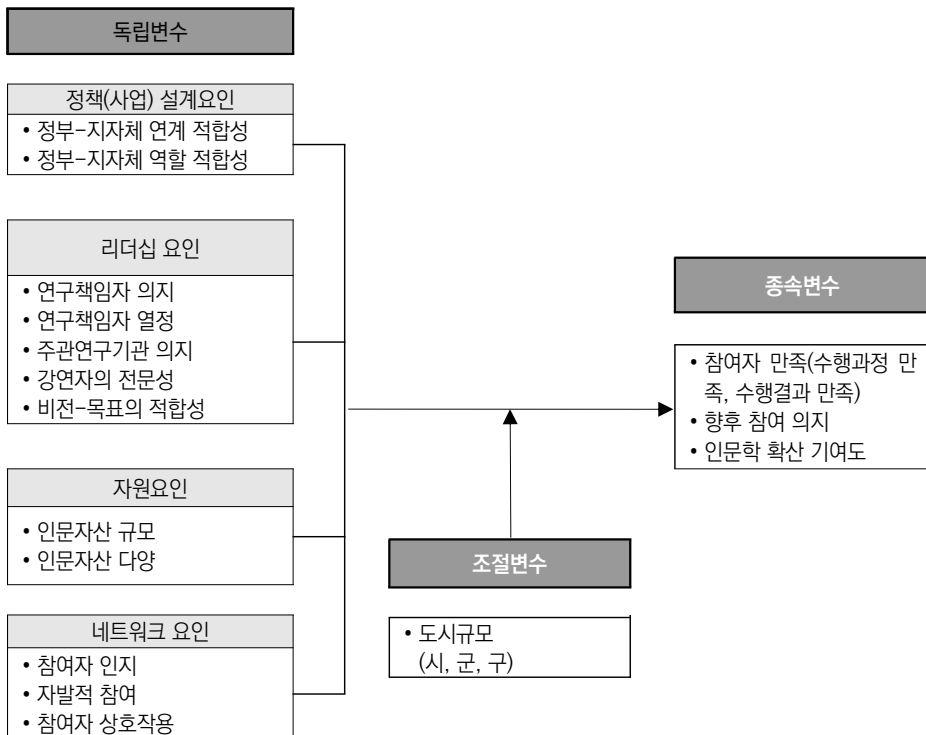
〈그림 4〉 연구흐름도

	1단계 요인분석	2단계 다중회귀 분석	3단계 네트워크 분석	4단계 심층 인터뷰
분석 대상	분석모형	설문지 응답 데이터	설문지 응답 데이터	연구책임자
분석 방법	탐색적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네트워크분석	현장 인터뷰
분석변수 (내용)	분석모형에 제시된 변수	독립변수(12개) 종속변수(4개)	밀도, 중심성	참여자 소통 방안, 사업설계에 대한 제언 등
분석툴	통계분석 프로그램(PASW 18)	통계분석 프로그램(PASW18)	SNA프로그램 (Ucinet6, Netdraw)	심층 인터뷰

2. 분석모형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정책(사업)설계이론, 로직모형, 네트워크 분석에 근거하여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독립변수는 정책(사업)설계 요인, 리더십 요인, 자원 요인, 네트워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인문학 성과의 장기성, 비가시성,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추진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만족과 향후 참여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를 설정하였다. 참여자 만족은 수행과정에서의 만족, 수행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세분화 하였다. 조절변수는 도시 규모를 설정하였다. 도시 규모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네트워크 분석,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3> 분석모형



3. 분석변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는 정책(사업)설계 요인, 로직 모형에 의한 투입 요인, 네트워크 분석 이론 등에 기반하여 참여자 만족도, 향후 참여 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정책(사업)설계 요인, 리더십 요인, 자원 요인, 네트워크 요인별로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항목별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설문은 변수의 내용에 매우 근접할 경우 7, 매우 그렇지 않을 경우 1로 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절변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분석변수

구분	변수		측정방법	선행연구
종속 변수	참여자 만족 (추진과정 만족, 추진결과 만족)		참여자 만족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서희석 · 이동기(2004), 권두승 외(2006), 김영준(2006), 서대석(2002), Mendoza and Zrihen(2001), Saint-Onge(1996) 등
	향후 참여의지		향후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변종임(2006) 등
	인문학 확산 기여도		인문학 확산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독립 변수	정책 (사업)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변종임 등(2006)
	설계 요인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리더십 요인	연구책임자 의지	연구책임자 의지가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변종임 등(2006)
		연구책임자 열정	연구책임자 열정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주관연구기관 의지	주관연구기관의 의지가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변종임 등(2006)
		강연자 전문성	강연자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서희석 · 서동기(2004)
		비전-목표의 적합성	비전-목표의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변종임 등(2006)
	자원 요인	인문자산 규모	인문자산의 규모가 매우 많은 경우 7, 매우 적은 경우 1	권두승 외(2006), 김두성(1997), Alan et al.(1997), Edvinsson and Malone(1997), Sohn et al.(2003)
		인문자산 다양	인문자산의 다양성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낮은 경우 1	

구분	변수		측정방법	선행연구
독립 변수	네트 워크 요인	참여자 인지	다른 참여자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 7, 매우 그렇지 않은 경우 1	
		참여자 상호작용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용이 매우 많은 경우 7, 매우 적은 경우 1	이연경(2015), 한진아·윤순진(2011), 정연미(2014) 등
		자발적 참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매우 높은 경우 7, 매우 그렇지 않은 경우 1	정연미(2014), 임채홍·홍성만·박소연(2013)
조절 변수	도시 특성	도시 규모	시(市)는 1, 군(郡), 구(區)는 0	변종임(2006) 등

4. 연구가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책(사업)설계 요인, 리더십 요인, 자원 요인, 네트워크 요인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관계로 설정하였다. 세부요인별 종속 변수와의 관계도 정적 관계로 동일하다.

〈표 5〉 주요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

가설1 (정책(사업)설계 요인)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정책(사업)설계 요인은 참여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정책(사업)설계 요인은 향후 참여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정책(사업)설계 요인은 인문학 확산 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리더십 요인)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리더십 요인은 참여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리더십 요인은 향후 참여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리더십 요인 요인은 인문학 확산 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원 요인)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자원 요인은 참여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자원 요인은 향후 참여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자원 요인 요인은 인문학 확산 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네트워크 요인)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네트워크 요인은 참여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네트워크 요인은 향후 참여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네트워크 요인 요인은 인문학 확산 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4~2016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이다. 각 과제별 참여자(일반인, 학생 등),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강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8월 26일까지이다. 조사방법은 서울, 인천, 광주, 울

산, 산청군 등 전국에 분포된 인문도시를 주말 등을 활용해 방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데이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PASW 18에 의한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Ucinet6.640, Netdraw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 연구책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총 31개 인문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출장 등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가 어려운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28개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 간 소통 방식, 인문도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으로 설문문항과 차별화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요컨대 양적·질적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지는 총 415부이다. 주관연구기관별 수집된 설문지 현황은 <표 6>과 같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라권, 경상권, 호남권 등 전국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인문도시별로 연구책임자, 강연자,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표 6〉 주관연구기관별 설문지 수집 현황

[illegible]

지역별 응답자 분포는 <표 7>과 같다.

<표 7> 지역별 응답자 분포

지역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응답자수	28	16	34	4	14	15	14	47	29	37
지역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무응답	계	
응답자수	16	40	16	18	43	18	15	11	415	

2. 연구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이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개념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사용된 12개 문항은 0.5 이상의 요인적재치를 나타냈고, 고유값이 1이 넘는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정책(설계)요인, 리더십요인, 자원요인,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총 누적 분산값은 76.574로 약 77% 정도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2133.309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표 8>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리더십 요인	연구책임자 의지	.899	.165	.111	.076	.854
	연구책임자 열정	.899	.168	.132	.106	.865
	강연자 전문성	.682	.265	.089	.219	.591
	비전목표의 적합성	.652	.272	.336	.008	.612
	주관연구기관 의지	.600	.113	.398	.207	.573
네트워크 요인	참여자 인지	.112	.882	.060	.135	.812
	참여자 상호작용	.264	.812	-.002	.218	.776
	자발적 참여	.303	.640	.219	.029	.550
정책(사업) 설계 요인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203	.057	.900	.164	.881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221	.130	.892	.142	.881
자원 요인	인문자산 규모	.128	.157	.129	.912	.890
	인문자산 다양	.170	.154	.183	.904	.903
고유값(eigenvalue)		3.176	2.127	2.016	1.870	

이 연구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reliability)를 살펴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Cronbach's Alpha test)를 통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사업)설계 요인의 알파계수 .878, 리더십 요인의 알파계수 .869, 자원요인의 알파계수 .891, 네트워크 요인의 알파계수 .771로 크롬바하 알파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분석결과

1)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사업)설계 요인, 리더십 요인, 자원요인, 네트워크 요인이 참여자 만족(추진과정 만족, 추진결과 만족), 향후 참여 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요인별 영향 요인을 살펴본 모델1과 전체 요인에 대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2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모델1의 분석 결과, 정책(설계)요인에서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은 인문도시 추진과정의 만족 등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은 추진과정 만족 등 4개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연구수행기관(주관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위자의 연계만으로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참여자 만족 등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각 행위자의 적합한 역할이 부여되어 설계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사업설계가 참여자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더십 요인 중 비전-목표의 적합성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인문도시 추진결과 만족, 향후 참여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는 인문도시 추진과정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강연자 전문성은 유의수준 0.05, 0.01 수준에서 추진결과 만족, 향후 참여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관연구기관(대학)의 의지, 비전-목표의 적합성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인 4개 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비전-목표를 반영한 각 인문도시의 주제, 즉 '다도해의 모항 목표의 희망 만들기 인문담론, 독립운동의 큰 울림! 안동마을에서 만나는 소통의 인문학, 인문도시 광산(光山), 빛피인문학과 함께 세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

다'처럼 과제명에 내포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깊이 있는 학문이 대중의 눈높이에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만족은 물론 향후 참여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원 요인 중 인문자산의 다양성은 인문도시 추진과정의 만족, 추진결과의 만족,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유의수준 0.01,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향후 참여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문자산의 규모보다는 인문자산의 다양성이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유·무형적 인문자산은 많고 적음의 규모보다는 서원, 향교 등 인문자산의 다양성이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트워크 요인 중 참여자 간 상호작용은 모델1에서 인문도시 추진과정 만족, 인문도시 추진결과 만족,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향후 참여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는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인지'는 추진과정 만족 등 인문도시 효과를 나타낸 4개 종속변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내가 000을 아는' 비교적 단순한 만남에 기초한 참여자 간의 인지만으로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단·장기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 질문, 대화, 탐방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독립변수 전체를 기준으로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2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모델 1과 같이 리더십 요인인 '주관연구기관의 의지, 비전-목표의 적합성'은 종속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자발적 참여'는 추진과정 만족을 제외한 3개 종속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추진과정 만족, 추진결과 만족'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표 9〉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요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모델1)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델1					R ²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베타)	유의 수준			
			B	SE(표준오차)					
정책 (사업) 설계 요인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추진과정	.076	.069	.304	.000***	.135	25.262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만족	.304	.066	.076	.380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추진결과	.308	.069	.388	.000***	.117	21.447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만족	-.049	.072	-.059	.497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향후	.263	.071	.314	.000***	.170	33.011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참여의지	.101	.074	.116	.173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인문학 확산	.062	.061	.077	.000***	.126	28.943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기여도	.218	.056	.291	.304			
리더 십 요인	연구책임자 의지	추진과정 만족	.066	.093	.063	.481	.351	34.518	
	연구책임자 열정		.184	.100	.173	.067			
	주관연구기관 의지		.173	.053	.190	.001**			
	강연자 전문성		.112	.062	.107	.072			
	비전-목표의 적합성		.188	.059	.194	.002**			
리더 십 요인	연구책임자 의지	추진결과 만족	.012	.091	.011	.893	.417	45.588	
	연구책임자 열정		.172	.098	.156	.081			
	주관연구기관 의지		.235	.052	.249	.000***			
	강연자 전문성		.159	.061	.146	.010*			
	비전-목표의 적합성		.237	.058	.237	.000***			
	연구책임자 의지	향후 참여 의지	-.172	.098	-.150	.081	.398	41.868	
	연구책임자 열정		.336	.105	.290	.002**			
	주관연구기관 의지		.223	.056	.224	.000***			
	강연자 전문성		.183	.066	.159	.006**			
	비전-목표의 적합성		.253	.062	.241	.000***			
	연구책임자 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	.041	.079	.039	.602	.421	57.845	
	연구책임자 열정		.150	.086	.140	.082			
	주관연구기관 의지		.248	.044	.276	.000***			
	강연자 전문성		.145	.053	.138	.006**			
	비전-목표의 적합성		.209	.048	.215	.000***			
자원 요인	인문자산 규모	추진과정	-.022	.055	-.035	.690	.076	13.407	
	인문자산 다양	만족	.182	.053	.304	.001**			
	인문자산 규모	추진결과	.061	.057	.094	.284	.098	17.687	
	인문자산 다양	만족	.145	.054	.233*	.008**			
	인문자산 규모	향후	.114	.061	.168	.061	.058	9.888	
	인문자산 다양	참여의지	.054	.059	.083	.357			
	인문자산 규모	인문학 확산	.080	.048	.129	.098	.138	32.238	
	인문자산 다양	기여도	.159	.048	.260	.001**			
네트 워크 요인	참여자 인지	추진과정 만족	-.002	.046	-.003	.966	.224	29.658	
	참여자 상호작용		.185	.044	.281	.000***			
	자발적 참여		.214	.046	.283	.000***			
	참여자 인지	추진결과 만족	.060	.045	.091	.189	.288	41.425	
	참여자 상호작용		.188	.046	.276	.000***			
	자발적 참여		.225	.044	.283	.000***			
	참여자 인지	향후 참여의지	.094	.047	.134	.046	.332	50.941	
	참여자 상호작용		.086	.047	.119	.071			
자발적 참여	.361		.045	.428	.000***				
네트 워크 요인	참여자 인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	.010	.045	.015	.822	.314	47.584	
참여자 상호작용	.183		.045	.264	.000***				
자발적 참여	.310		.043	.384	.000***				

*p<0.05, **p<0.01, ***p<0.001, 이하 동일

〈표 10〉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요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모델2)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델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수준	R ²	F
		B	SE(표준오차)	β (베타)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추진과정 만족	-.011	.061	-.014	.856	.393	15.668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033	.060	.045	.579		
연구책임자 의지		.080	.094	.079	.394		
연구책임자 열정		.143	.098	.139	.146		
주관연구기관 의지		.159	.057	.179	.006**		
강연자 전문성		.011	.065	.010	.868		
비전-목표 적합성		.137	.062	.145	.028*		
인문자산 규모		-.068	.048	-.114	.151		
인문자산 다양		.061	.048	.105	.206		
참여자 인지		-.003	.042	-.004	.950		
참여자 상호작용		.109	.047	.162	.021*		
자발적 참여		.080	.043	.105	.062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추진 결과 만족	-.144	.059	-.180	.015*	.477	22.141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048	.058	.062	.409		
연구책임자 의지		.041	.090	.039	.647		
연구책임자 열정		.108	.095	.101	.256		
주관연구기관 의지		.247	.055	.268	.000***		
강연자 전문성		.038	.063	.035	.543		
비전-목표 적합성		.201	.060	.204	.001**		
인문자산 규모		-.027	.046	-.043	.561		
인문자산 다양		.054	.047	.089	.249		
참여자 인지		.055	.041	.083	.179		
참여자 상호작용		.102	.045	.146	.025*		
자발적 참여		.083	.041	.105	.044*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향후 참여의지	.075	.061	.089	.222	.497	23.891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009	.060	.010	.887		
연구책임자 의지		-.187	.094	-.167	.047*		
연구책임자 열정		.315	.099	.279	.002**		
주관연구기관 의지		.162	.057	.166	.005**		
강연자 전문성		.114	.065	.099	.083		
비전-목표 적합성		.129	.062	.124	.039*		
인문자산 규모		.052	.048	.078	.280		
인문자산 다양		-.108	.048	-.169	.026*		
참여자 인지		.082	.043	.117	.055		
참여자 상호작용		.025	.047	.034	.590		
자발적 참여		.239	.043	.285	.000***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인문학 확산 기여도	-.033	.057	-.041	.566	.501	24.651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041	.056	.053	.468		
연구책임자 의지		-.027	.088	-.025	.761		
연구책임자 열정		.170	.092	.159	.067		
주관연구기관 의지		.217	.053	.235	.000***		
강연자 전문성		.092	.061	.085	.131		
비전-목표 적합성		.141	.058	.143	.016*		
인문자산 규모		.012	.045	.020	.786		
인문자산 다양		.031	.045	.052	.487		
참여자 인지		.004	.040	.006	.925		
참여자 상호작용		.064	.044	.091	.147		
자발적 참여		.170	.040	.214	.000***		

2) 소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모델 1>과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11>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요인별 변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과 전체 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로 표시하였다. 리더십 요인인 ‘주관연구기관 의지, 비전-목표의 적합성’은 추진과정 만족, 추진결과 만족, 향후 참여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네트워크 요인인 ‘자발적 참여’는 <모델 2>에서 추진과정 만족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외 변수에서는 ‘참여자 상호작용’이 많은 횡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서는 리더십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표 11〉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모델1, 모델2 종합)

회귀분석 결과 요인		모델1				모델2			
		추진 과정 만족	추진 결과 만족	향후 참여 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	추진 과정 만족	추진 결과 만족	향후 참여 의지	인문학 확산 기여도
정책(사업)설계 요인	정부-지자체 연계 적합성	-	-	-	-	-	○	-	-
	정부-지자체 역할 적합성	○	○	○	○	-	-	-	-
리더십 요인	연구책임자 의지	-	-	-	-	-	-	○	-
	연구책임자 열정	-	-	○	-	-	-	○	-
	주관연구기관 의지	○	○	○	○	○	○	○	○
	강연자 전문성	-	○	○	○	-	-	-	-
	비전-목표의 적합성	○	○	○	○	○	○	○	○
자원 요인	인문자산 규모	-	-	-	-	-	-	-	-
	인문자산 다양	○	○	-	○	-	-	○	-
네트워크 요인	참여자 인지	-	-	-	-	-	-	-	-
	참여자 상호작용	○	○	-	○	○	○	-	-
	자발적 참여	○	○	○	○	-	○	○	○

3) 조절효과 분석 결과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절효과는 〈표 12〉와 같다. 정책(사업)설계 요인, 리더십 요인, 네트워크 요인과 종속변수의 영향 관계에서 요인별로 R^2 변화량이 증가함으로써 도시 규모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조절 효과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자원 요인은 연구모형의 유의확률을 벗어남으로써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 군, 구 등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참여자 만족 등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참여자 상호작용은 실제 인문도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참여자 상호작용이 많은 인문도시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인문도시의 참여자 네트워크 분석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참여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의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인문도시 28개 중 네트워크 분석 인원이 4명 이하로 분석이 어려운 과제를 제외한 총 22개 인문도시이다. 경우에 따라 분석자료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1) 인문도시 밀도

인문도시별 밀도, 연결망의 링크 수, 평균 연결정도는 다음과 같다. 밀도의 경우 적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연결망의 링크 수가 평균 30개 이상 되는 인문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밀도(density)는 울산대, 충북대, 청운대, 안동대, 전남대·목포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노드(node)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개수로 정의되는 평균 연결정도는 울산대·동양대·부산교대, 인제대, 강원대, 여주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밀도가 높고, 연결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상호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변수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종속변수
						R제곱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정책 설계	1	.258 ^a	.067	.064	.897	.067	21.239	1	297	.000***		추진과정 만족
	2	.262 ^b	.068	.062	.898	.002	.550	1	296	.459		
	3	.287 ^c	.083	.073	.892	.014	4.554	1	295	.034	1.765	
리더십	1	.485 ^a	.236	.233	.812	.236	91.526	1	297	.000***		
	2	.486 ^b	.236	.231	.813	.001	.290	1	296	.590		
	3	.495 ^c	.245	.237	.810	.008	3.218	1	295	.074	1.904	
자원	1	.083 ^a	.007	.004	.925	.007	2.059	1	297	.152		
	2	.130 ^b	.017	.010	.922	.010	3.031	1	296	.083		
	3	.156 ^c	.024	.014	.920	.007	2.243	1	295	.135	1.672	
네트 워크	1	.286 ^a	.082	.079	.890	.082	26.555	1	297	.000***		추진결과 만족
	2	.327 ^b	.107	.101	.879	.025	8.155	1	296	.005		
	3	.358 ^c	.128	.119	.870	.021	7.213	1	295	.008	1.708	
정책 설계	1	.205 ^a	.042	.039	.945	.042	13.041	1	297	.000***		
	2	.209 ^b	.044	.037	.946	.002	.494	1	296	.483		
	3	.222 ^c	.049	.040	.945	.006	1.748	1	295	.187	1.851	
리더십	1	.515 ^a	.265	.263	.828	.265	107.166	1	297	.000***		
	2	.515 ^b	.265	.260	.829	.000	.018	1	296	.894		
	3	.515 ^c	.266	.258	.830	.001	.209	1	295	.648	1.988	
자원	1	.143 ^a	.020	.017	.955	.020	6.214	1	297	.013*		
	2	.164 ^b	.027	.020	.954	.006	1.898	1	296	.169		
	3	.195 ^c	.038	.028	.950	.011	3.496	1	295	.063	1.838	
네트 워크	1	.365 ^a	.133	.130	.899	.133	45.667	1	297	.000***		향후 참여 의지
	2	.396 ^b	.157	.151	.888	.024	8.350	1	296	.004		
	3	.431 ^c	.186	.178	.874	.029	10.416	1	295	.001	1.833	
정책 설계	1	.313 ^a	.098	.095	.975	.098	32.197	1	296	.000***		
	2	.316 ^b	.100	.094	.976	.002	.566	1	295	.453		
	3	.332 ^c	.110	.101	.972	.010	3.460	1	294	.064	1.673	
리더십	1	.433 ^a	.188	.185	.925	.188	68.465	1	296	.000***		
	2	.435 ^b	.189	.183	.926	.001	.393	1	295	.531		
	3	.438 ^c	.192	.184	.926	.003	1.137	1	294	.287	1.610	
자원	1	.024 ^a	.001	-.003	1.026	.001	.165	1	296	.685		
	2	.046 ^b	.002	-.005	1.027	.002	.468	1	295	.494		
	3	.047 ^c	.002	-.008	1.029	.000	.015	1	294	.903	1.535	
네트 워크	1	.400 ^a	.160	.157	.941	.160	56.400	1	296	.000***		인문학 확산 기여도
	2	.414 ^b	.172	.166	.936	.012	4.184	1	295	.042		
	3	.437 ^c	.191	.183	.927	.019	6.951	1	294	.009	1.675	
정책 설계	1	.314 ^a	.098	.095	.916	.098	32.860	1	301	.000***		
	2	.316 ^b	.100	.094	.917	.001	.455	1	300	.501		
	3	.342 ^c	.117	.108	.909	.017	5.866	1	299	.016	1.799	
리더십	1	.509 ^a	.259	.257	.830	.259	105.412	1	301	.000***		
	2	.511 ^b	.261	.256	.830	.002	.745	1	300	.389		
	3	.511 ^c	.261	.254	.832	.000	.023	1	299	.879	1.953	
자원	1	.164 ^a	.027	.024	.951	.027	8.354	1	301	.004**		
	2	.167 ^b	.028	.022	.953	.001	.304	1	300	.582		
	3	.200 ^c	.040	.030	.948	.012	3.701	1	299	.055	1.789	
네트 워크	1	.327 ^a	.107	.104	.911	.107	36.123	1	301	.000***		인문학 확산 기여도
	2	.342 ^b	.117	.111	.908	.010	3.344	1	300	.068		
	3	.364 ^c	.133	.124	.901	.016	5.407	1	299	.021	1.892	

〈표 13〉 인문도시별 밀도 분석 결과

인문도시명	주관연구기관	전체 밀도	연결망의 링크 수	평균 연결정도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대학교	0.263	35	5.000
충북 청주시	충북대	0.185	34	4.250
충남 홍성군	청운대	0.170	34	4.250
경북 안동시	안동대	0.154	37	3.700
광주 광산구	전남대	0.144	50	4.167
전남 목포시	목포대	0.144	31	2.818
경북 영주시	동양대	0.128	45	5.000
제주시	제주대	0.117	42	4.200
강원 춘천시	강원대	0.111	44	4.889
강원 원주시	연세대(원주캠퍼스)	0.105	42	4.200
경기 여주시	여주대	0.096	61	4.692
경기 남양주시	한림대	0.089	30	2.308
부산 연제구 외	부산교대	0.088	65	5.000
경남 산청군	인제대	0.070	74	4.933

(2) 인문도시 중심성

인문도시 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중앙에 위치한 정도인 중심성을 파악하는 것은 각 인문도시별 참여자 개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분석 결과에서 중앙성이 높은 개인은 특별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고, 중앙성이 높은 조직은 생존율이 높거나 성과가 좋다. 이처럼 중앙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용학, 김영진, 2016: 118). 이 연구에서는 중앙성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인문도시라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연결중심성은 그룹연결중심성(Group Degree Centralization), 그룹매개중심성(Group Betweenness Centralization), 아이겐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za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4〉 인문도시별 중심성 분석 결과

주관연구기관	행위자 수 (actor)	그룹연결중심성 (Group Degree Centralization)	그룹매개중심성지수(%) group betweenness centralization index	아이겐벡터 최대값 Maximum Eigenvectors	중심성 Centralization
전남대	12	0.1818	24.30	0.783	136.115
인제대	15	0.0962	0.48	0.696	97.432
한림대	13	0.1098	4.14	0.693	96.650
부산교대	13	0.2197	2.81	0.687	95.232
연세대(원주)	10	0.1944	8.67	0.686	94.448
여주대	13	0.1106	7.75	0.674	93.678
제주대	10	0.1111	1.00	0.673	91.326
동양대	9	0.1310	8.80	0.672	90.263
목포대	8	0.3810	2.90	0.666	88.569
안동대	10	0.2153	6.50	0.660	87.663
충북대	8	0.2738	4.91	0.652	84.802
청운대	8	0.0137	6.47	0.622	77.590
안양대	8	0.2381	5.13	0.600	72.286

그룹연결중심성은 전남 목포시(목포대학교) 0.3810, 충북 청주시(충북대학교) 0.2738, 경기도 안양시(안양대학교) 0.2381,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부산교육대학교) 0.2197, 경북 안동시(안동대학교) 0.21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내의 액터들은 불균등한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룹연결중심성이 높은 인문도시는 그룹연결중심성이 낮은 인문도시에 비해 액터 간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룹매개중심성 지수 분석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남대학교)가 24.30%로 가장 높았고, 경북 영주시(동양대학교) 8.80, 강원도 원주시(연세대 원주캠퍼스) 8.67, 경기도 여주시(여주대학교) 7.75, 경북 안동시(안동대학교) 6.50으로 나타났다.

인문도시별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결과, 아이겐벡터 최대값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남대학교) 0.783, 경남 산청군(인제대학교) 0.696, 경기도 남양주시(한림대학교) 0.693,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부산교육대학교) 0.687, 강원도 원주시(연세대 원주캠퍼스) 0.6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중심성 값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남대학교)가 136.115로 매우 높았고, 아이겐벡터 중심값이 높은 순서대로 중심값도

일치하여 나타났다.

5) 소결

인문도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밀도, 그룹연결중심성, 그룹매개중심성, 아이젠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인문도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광산구(3회), 경북 안동시(3회), 충북 청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강원도 원주시, 전남 목포시가 각 2회이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앙성이 높다는 것은 생존율이 높거나 성과가 좋다는 이론에 근거할 때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문도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을 수 있다. 밀도와 중심성이 높은 인문도시의 주요 성과를 연구책임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남대)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자유시민대학을 만들었다. 경북 안동시(안동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가치를 지역의 인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충북 청주시(충북대)는 인문도시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청주를 만들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해운대구·영도구(부산교대)는 인문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문공동체를 형성했다. 강원도 원주시(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협동조합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인문도시 원주를 만들었다. 전남 목포시(목포대)는 인문학적 아이덴티티를 찾아 패배에서 희망의 도시로 목포를 바꾸는데 기여했다.

6) 인문도시지원사업 인터뷰 결과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장 인터뷰는 회귀분석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질문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 간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자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설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 세계적인 인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방안 등이 그것이다. 밀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인문도시를 중심으로 인터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주요 인문도시 연구책임자 등 인터뷰 결과

인문도시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주요 성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구용 교수 (전남대)	- 인문도시지원사업을 토대로 자유시민대학 설립 “실제로 강의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 자생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인문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시	김진희 교수 (안동대)	- 독립운동의 새로운 인문적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재발견 “안동시가 가진 인문학적 자산이 기존에 하회마을, 퇴계 이항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면 여기에 독립운동이(하략)”
충북 청주시	박연호 교수 (충북대)	- 인문도시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청주 구축 “어쩌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청주라는 지역을 좋은 이미지를 꺼내서 사람들에게 관찮은 지역에 살고 있구나, 시민들한테 자부심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중략) 결국은 가치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인문학적 가치들을 찾아내고(후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 해운대 구 · 영도구	양병일 교수 (부산교대)	- 자연스러운 참여자 간 소통으로 인문공동체 구축 “인문강좌는 참가자 수준에 맞춘 것이 많았어요. 와서는 참여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술선수법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중략),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후략)”
강원도 원주시	이인재 교수 연세대 (원주캠퍼스)	- 협동조합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인문도시 원주 구축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그런 분들과 논의 하면서 강좌도 같이 구성하고, 운영도 같이 하고(중략) 굉장히 관-민 협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후략)”
전남 목포시	강봉룡 교수 (목포대)	- 인문학적 아이덴티티를 찾아 패배에서 희망으로 바꾼 인문도시 목포 구축 “지역의식,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목포만의 장점을 찾아보자. 다도해의 모항, 목포로 승부를 걸어보자(후략)”

연구책임자 인터뷰를 통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책(설계)요인인 정부-지자체의 역할 적합성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네트워크 요인인 참여자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청주시의 지역민이 주도하는 인문도시 기획, 원주시의 참여자 간 소통에 기반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정책(사업)설계 요인, 네트워크 요인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책(사업)설계 이론, 네트워크 분석 등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모델1, 모델2의 종합적인 회귀분석 결과,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리더십 요인(주관연구기관의 의지, 비전-목표의 적합성), 네트워크 요인(자발적 참여)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에서는 ‘참여자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횟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모델1에서는 ‘정부-지자체의 역할 적합성, 주관연구기관의 의지, 비전-목표의 적합성, 자발적 참여’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상호작용의 주목하며 살펴본 인문도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밀도, 그룹연결중심성, 그룹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인문도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3회), 경북 안동시(3회), 충북 청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강원도 원주시, 전남 목포시가 각 2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밀도, 중심성만으로 인문도시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문도시의 성과는 질적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문도시는 개최되는 지역마다 정체성과 상황이 다르고, 참여자도 다양하다. 이를 몇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연구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며, 실제 인문도시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된 것이다. 밀도와 중심성을 중심으로 상위에 분포한 도시를 중심으로 제시한 인문도시별 연구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다른 인문도시와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자료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모델1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정부-지자체의 역할이 적절하게 설계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끌어 내 대응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문도시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대응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리더십 요인 중 ‘비전-목표의 적합성’이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사업 자체의 고유 미션과 비전 하에 실제 인문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지역의 인문자산, 정체성, 주민, 역사, 문화적 환경 등 전

반적인 사항이 지역 기반으로 탄생한다.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길을 향한다. 이는 지역성과 인문학의 연계에 기반한 인문도시가 추진될 때 성공적인 인문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네트워크 요인 중 ‘자발적 참여, 참여자 상호작용’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 참여자 간의 질문, 대화, 토론 등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때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운영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표본에 의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점 등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응답한 표본이 적은 경우가 다수 있어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인문도시별 사례연구 등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봉룡. (2017). “인문도시 목포-다도해의 모항 목포의 희망 만들기 인문담론.” 「시민인문학」, 33: 9-14.
- 강연호. (2016).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63-85.
- 권기현. (2008). 「정책학」, 서울: 박영사.
- _____. (2010).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김남선·안현숙. (2007).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1): 25-49.
- 김동윤. (2015). “원도심 재생을 통한 제주형 인문도시의 모색.” 「시민인문학」, 28: 9-35.
- 김용학·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의태·강대중. (2012). “노숙인을 위한 인문교양교육의 가능성.” 「평생교육학연구」, 18(3): 197-226.
- 김지원·윤영득. (2017).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한국연구재단 선정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7(2): 19-26.
- 곽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문상호·권기현. (2009). “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

- 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18(1): 1-29.
- 박구용. (2017). “인문도시 광산에서 피어난 광주시민자유대학.” 「시민인문학」, 33: 42-68.
- 박연구. (2015). “인문도시를 위한 인문정책 방향 :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 36-69.
- _____. (2017). “지역밀착형 인문학 프로그램-수원의 인문도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3: 69-99.
- 변종임·채재은·김세희. (2006). “평생학습도시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3): 217-238.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손완주. (2016). “‘더불어 행복한 인문도시’ 꿈을 심는다-안양시청 인문도시지원팀.” 「도시와 사람」, 44-47.
- 서희석·이동기. (2004). “지방정부 지역축제 성공요인의 가중치 결정.”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427-442.
- 이영의. (2015). “인문도시의 구조와 내용: 춘천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 96-117.
- 유범상·이현숙. (2015). “인문학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8: 165-194.
- 정혜진·박형준. (2010). “제도설계와 정책효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165-188.
- 한진이·윤순진. (20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2): 81-94.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2011). “(가칭)인문도시사업 기획(안)-경남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이슈페이퍼.
- A. Charnes & W.W.Cooper & E. Rhodes.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29-444.
- Anne Larason Schneider & Helen Ingram. (1997). *Policy Design for Democracy*. Lawrence KS :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Ank Michels. (2011). “Innovation in democratic governance : how does citizen participation contribute to a better democracy?” *International Review of*

- Administrative Sciences*, 77(2): 275-293.
- Amitai Etzioni. (1967). "Mixed-Scanning : A "Third" Approach to Decision-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7(5). December.
- Banker, R. D., Charnes, A. and Cooper, W. W.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1078-1092.
- Charnes, A., Cooper, W. W. and Rhodes, E.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429-444.
- David L. Weimer. (1992). "The craft of policy design: Can I be more than art?" *Policy Studies Review*, 1992: 370-388.
- Graham T. Allison. (1971). *Essence of Decision - Introduction and conclusion*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Little. Brown and Company, 1-9, 245-263.
- Charles E. Lindblom.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 Spring.
- Frans Van Waarden. (1992).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29-52.
- John S. Dryzek and Brian Ripley. (1988). "The ambitions of policy design." *Policy Studies Review*, 705-719.
- Kaifeng Yang·Marc Holzer.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14-126.
- Karel Maler. (2001).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 Climbing a Ladder?" *European Planning Studies*, 9.
- Kickert et al. (eds). (1999). *Managing Complex Network: Strategies for the Public Sector*. 11-15.
- Lasswell, H.D. (1951). *The Policy of Orientation*. *Policy Sciences*, Stanford, California Univ. Press. pp3-15.
- _____. (1971). *A Pre-View of Policy Sciences*. New York. N. Y.:Elsevier.
- Patricia W. Ingraham. (1987). "Toward more systematic consideration of policy design." *Policy Studies Journal*, 15: 611-628.
- Peter delon. (1988-89), "The contextual burdens of policy design." *Policy Studies*

Journal, 17: 297-309.

Peter J. May. (1981). "Hints for Crafting Alternative Policies." *Policy Analysis*, 7: 227-244.

W. K. Kellogg Foundation. (2006). Logic Model Development Guide.

Xuan Zhang. (2014),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public policy formation."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Vols*, 5128-5130.

이정희(李貞姬):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설계, 인문사회분야 학술정책, 교육정책 등이다(korljh@nrf.re.kr).

권기현(權祈憲): 교신저자. 미국 Harvard University. John J.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After Hegemony),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학이론(정책형성론 및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전자정부론 및 정부혁신론)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정책학의 향연>(박영사, 2018), <정책학콘서트>(박영사, 2018), <정부혁명4.0>(박영사, 2017), <정책학강의>(박영사, 2014), <행정학강의>(박영사, 2014), <E-Government & E-Strategy>(박영사, 2014), <비정상의 정상화>(박영사, 2014), <행정학 콘서트>(박영사, 2013), <정의로운 혁신이란 무엇인가>(한연, 2013),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박영사, 2012),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박영사, 2011), <정책분석론>(박영사, 2009), <정책학의 논리>(박영사, 2007)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6), "정책결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실증적 접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5) 등이 있다(gkwon77@empas.com).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수정·남궁미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차이와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 수립 시에 정책대상의 소득계층에 따라 어떠한 주거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저소득 가구(200만 원 이하), 중소득 가구(201~400만원), 고소득 가구(401만 원 이상)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환경만족도를 결정하는 주거환경 요인들은 소득계층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치안 및 범죄 등 방법상태가, 중소득 계층의 경우 교육 환경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상업시설 접근성이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환경 요인 중 이웃과의 관계, 집주변 소음 정도는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소득계층, 주거환경, 주거만족도]

I. 서론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수요에 대한 적절한 주거공급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주거공급은 양적인 주거 개선을, 주거복지의 경우 질적인 주거 개선을 의미한다(제해득, 2016).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실시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질적인 개선보다는 양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어왔다. 그로 인해 현재는 양적인 주거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는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위주로 변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기에 주거환경과 이에 따른 주거만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진선진·하규수, 2009; 손희주·남궁미, 2018).

주거만족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의 질적인 개선은 양적인 개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구의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에는 가구주의 연령, 소득수준, 학력 등이 있으나 이 중 주거 복지 정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구의 구분 기준은 소득이며 최근 소득수준별 주거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박재운·김현욱, 2013). 하지만 기존의 소득에 따른 가구의 주거만족도 연구들은 특정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거나 계층별로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경우에도 주거환경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않아 전체 소득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주거만족도 요인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와 주거환경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거복지 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결정 요인들은 그 영향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를 위하여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소득에 따라 계층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t검정과 순서형 로짓 분석으로, 소득계층 간 주거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활용하였고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 소득계층별로 어떤 주거환경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1. 소득계층별 가구 특성과 주거환경

저소득 가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과 상황이 취약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지위로 인해 배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제해득, 2016). 소득계층

을 구분할 때는 이와 같이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건에 따른 경제적 기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소외의 개념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준을 나누는 등의 관점이 있다. 하지만 계층 구별의 목적이 주거복지 대상의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소득계층별 가구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지표를 사용한 소득계층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남진·김진하 2015; 김순용·박현수 2017).

소득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경제적인 요소 중 소득에 따른 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더라도 선행연구에 따라 계층 구분의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김순용·박현수(2015)의 연구에서는 1-4분위 집단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통계청의 기준을 기반으로 주택을 소유 및 임대할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해 월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집단을 저소득층으로, 월 소득 150만-300만 원 이하의 집단을 중소득층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박윤택 외(2015)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2013년도에 실시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조사 자료는 전국의 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남진·김진하(2015)의 연구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기준과 같이 소득 10분위에 따라 소득계층을 1-4분위, 5-8분위, 9-10분위로 나누었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의 기준을 수도권에 한정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비율이 맞도록 기준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진·김진하의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실태조사에서 분류한 소득계층 분류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순용·박현수의 연구의 경우 같은 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했지만 조사연도가 2012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자료와 시간차가 있으며, 박윤택 외의 연구의 경우 사용된 자료의 조사대상이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남진·김진하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한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고 1분위-4분위(-200만원) 집단을 저소득층, 5-8분위 집단을 중소득층(201만원-400만원), 9-10(401만원-)분위 집단을 고소득층으로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위와 같이 소득에 따라 구분된 가구들은 소득 계층에 따라 가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주거비, 주거 선택 등의 가구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구성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가구 구성에서 1-2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저

학력인 비율과 여성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해득, 2016).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저소득가구와 상반되게 구성원 수가 3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현태·남진, 2012; 남진·김진하, 2015).

소득계층은 주택의 점유 형태나 주택 유형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진·김진하(2015)의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는데, 저소득층의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보다 임대의 비율이 높았고 임대유형 중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통근시간, 자산, 주택 규모 등이 점유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산과 주택규모가 클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아파트이면서 전세인 주거를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중소득 계층의 경우 소득, 자산, 주택규모가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 계층과 마찬가지로 주택규모와 자산이 클수록 아파트이면서 전세인 주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계층의 경우 주택 규모가 아파트 전세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가구형태와 함께 주거선택이나 주거이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남진·김진하, 2015).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에 비해 한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주거이동 경험은 적으며 자발적인 이동보다 비자발적인 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이동의 방향이 기존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하는 주거하향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환경에 만족하여 이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동을 위한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휘, 201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소득계층별 주거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주거환경의 차이는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차이를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2.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

주거환경은 일상생활을 위한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주거환경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면서도 신뢰감, 안정감, 사회성, 자아존중 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공간이며(김윤옥 외, 2016) 인간의 주생활을 영위하는 물리적·

생리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행동과 가족 및 사회와도 관련을 갖는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한다(박영근 외, 2006). 즉, 주거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리·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거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유·무형의 외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옥 외, 2016).

선행연구에서 주거환경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박영근 외(2006)은 주거환경 변수를 웰빙성, 경제성, 편리성, 안정성, 사회성으로 구성하였고, 황태수(2006)는 웰빙성, 경제성, 안전성, 사회성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윤호(2010)는 주택 특성, 단지 특성, 주변 환경 특성, 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성기 외(2008)는 주거만족의 변수를 경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 위치적 특성, 인지 특성, 공동체 특성으로 나누었고 유시은·양승우(2013)는 주거환경 요인을 안정성, 쾌적성, 입지적 편리성, 물리적 편리성, 경제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황광선(2013), 최희용·전희정(2017), 손희주·남궁미(2018)는 사회적 요인, 물리적 요인, 자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단, 최희용·전희정의 연구에서는 황광선의 연구에서 사용된 물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과 동일한 개념을 편리성, 쾌적성, 사회성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황광선, 최희용·전희정, 손희주·남궁미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가 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광선의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타 연구와는 달리 물리적 환경의 관점에서 주거환경 구성요소를 분류하였기 때문이다(최희용·전희정, 2017). 또한 황광선의 연구에서는 배제된 경제성 변수는 주택의 투자가치, 소득대비 월세비중, 임대계약의 형태, 유지관리비용, 공공관리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아닌 주택의 경제적인 가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유시은·양승우, 2013) 본 연구에서도 경제성 변수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을 물리적 환경의 관점에서 나눈 물리적 환경, 사회적·자연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물리적 변수의 구성요소로는 각 시설과의 접근성, 주차 등에 대한 만족, 사회·환경적 변수로는 소음, 쓰레기 처리상태, 대기오염 등에 대한 만족, 치안 상태, 이웃과의 관계 등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한다(황광선, 2013; 최희용·전희정, 2017; 손희주·남궁미, 2018).

주거만족이란 주거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기대감, 경험 등과 비교하여 현재의 거주 상태에 대해 내린 평가(윤호, 2010) 또는 주거대상인 물리적 환경요소와 이 와 관련된 활동의 결과로 획득된 심리적 반응(배장오·전영일, 2014)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자연적 요인이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호·정재호, 2015; 황광선, 2013; 윤호, 2010; Hur & Morrow-Jones, 2008; Parkes et al.,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병호·정재호(2015)의 연구에서는 주변 자연환경, 방범상태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이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환경, 교육환경, 주차 청소 환경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광선(2013)의 연구에서는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변 환경뿐만이 아니라 연령대, 소득과 같은 거주자의 특성이나 생애주기, 거주기간, 점유형태와 같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택·정효미(2015)는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를 구별하여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남궁미 외(2017)는 연령에 따라 노인가구를 장년가구, 전기 노인 가구, 후기노인 가구로 분류하고 비노인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청년가구를 포함하여 주거만족도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확인했다. 권세연·박환용(2014)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 연령별로 가구를 구별하여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했다. 이외에도 손희주·남궁미(2018)는 가구를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 진입기, 가구 형성·확대기, 가구 축소기, 가구 해체기로 분류하여 각 생애주기마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황광선(2013)의 연구에서는 월세와 전세, 등과 같은 가구의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거만족은 주거환경 요인뿐만이 아니라 개인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만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거복지는 지역 내 격차문제로 소득계층 간 주거환경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하성규, 2018). 국외 선행연구들은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Adriaanse, 2007; Lu, 1999; Frank & Enkawa, 2009; Galster, 1987). Adriaanse (2007)와 Lu (1999)의 연구에서는 고소득 가구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alster (1987)과 Frank와 Enkawa (2009)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 고소득 계층의 경우 타 계층에 비하여 비교적 주거지 이동에 제약이 없는 것에 비하여 저·중 소득 계층의 경우 경제적 제한으로 인하여 주거만족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자력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주거복지 측면에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강평년·최승영(2008)의 연구에서 성별, 학력과 같은 여러 가구의 특성에 비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 선호 경향이 매우 상이 하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해득(2016)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환경이 저소득계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태 외(2015)의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자들은 병원시설과 문화시설 접근성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박천일(2012)의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안과 방범, 분쟁, 소음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열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산의 영구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분석한 결과 방범시설이 주거환경의 평가에 있어 유의하다고 분석했으며, 이재현·고봉성(2012)이 전북의 분양·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사회적 요인 중 방범 및 치안 유지 항목만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치안 및 방범상태가 주거환경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중산층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신명호, 2010), 김태섭(2003)의 연구에서 중산층은 자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유 중 자녀의 교육요인이 원인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소득층의 경우 교육환경 요인이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하여 주거입지 선택 시 생활의 편리성이 높은 입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며(박원석, 2015), 향후 시세차익과 같은 주택 투자가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민, 2003; 박원석, 2015). 이성현·전경구(2012)의 연구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상업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윤경·강정규(2016)의 연구에서는 고급주택의 실거래가(6억 초과~9억 이하)의 백화점과의 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고소득층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거나, 전체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도 주거환경요인을 접근성, 환경성과 같이 여러 세부요소를 포괄적으로 묶어 분석하여 소득 계층 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주거환경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계층별 주거만족도의 차이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위의 논의 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_1 : 저소득 계층에서는 치안 및 방법상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H_2 : 중소득 계층에서는 교육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H_3 : 고소득 계층에서는 상업시설 접근성이 주거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로 '2016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주거실태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조사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이다. 내용은 가구의 특성, 주택 유형, 주택 점유형태, 현재 주택 상태, 소득 수준, 주거환경요인별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20,133가구 중, 월평균 소득 자료가 있는 20,047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소득계층을 구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앞서 선행 연구 검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거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소득 계층 구분에 따라 월 소득 200만 원이하 가구는 저소득 가구, 월 소득이 201만원~400만원인 가구는 중소득 가구, 월 소득 400만 원 초과 가구는 고소득 가구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¹⁾. <표 1>은 소득 계층별 가구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 계층에 따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평균 연령이 65.58세로 다른 계층에 비해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56.8%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형태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49.8%

1) 소득은 가구의 총 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이며, 재산소득, 근로·사업 소득, 정부보조금, 사회보험 수혜금,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었다.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 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 형태가 5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거 기간이 12.75년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중소득 계층의 경우 평균연령이 51.19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56.9%,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의 형태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 계층의 경우 평균 연령이 51.79세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이 소득 계층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인 경우가, 점유 형태는 자가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득 계층별 가구주의 특성

		가구 수(%)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전체
평균연령(세)		65.58	51.19	51.79	57.63
월 평균 소득(만 원)		112.14	313.58	591.62	280.08
학력	중졸이하	4998(56.8)	1036(14.2)	276(7.0)	6310(31.5)
	고졸	2791(31.7)	2895(39.8)	1088(27.4)	6774(33.8)
	대졸이상	1014(11.5)	3351(46.0)	2598(65.6)	6963(64.7)
주택 형태	단독	4388(49.8)	1840(25.3)	584(14.7)	6812(34.0)
	아파트	2909(33.1)	4145(56.9)	2910(73.4)	9964(49.7)
	기타 ²⁾	1506(17.1)	1297(17.8)	468(11.8)	3271(16.3)
주택점유 형태	자가	4888(55.5)	4510(61.9)	2911(73.5)	12309(61.4)
	전세	1032(11.7)	1251(17.2)	638(16.1)	2921(14.6)
	기타 ³⁾	2883(32.8)	1521(20.9)	413(10.4)	4817(24.0)
주거기간(년)		12.75	8.64	8.30	10.38

종합해 보자면, 고소득 계층일수록 가구주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점유 형태는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자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기간이 저소득 계층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제한으로 인

2) 주택형태의 기타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오피스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그 외의 기타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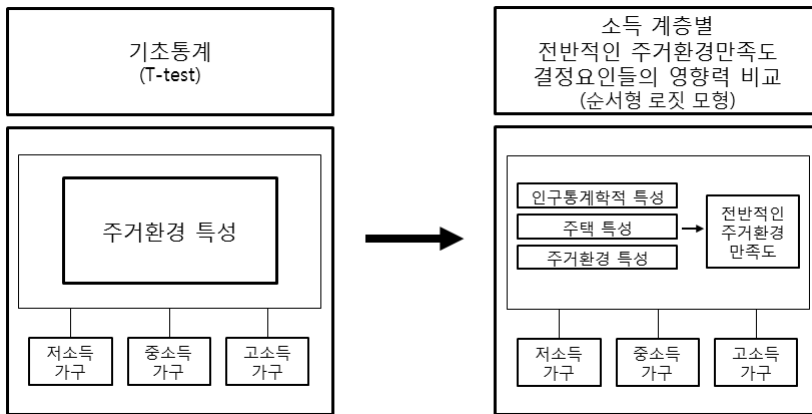
3) 점유형태의 기타는 각종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의 형태이다.

해 주거이동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환경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소득 계층별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과 변수설정

〈그림 1〉 분석모형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첫째로 소득 계층별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 변수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득 계층별로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를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

족’으로 구별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일정한 순서에 따른 응답을 통해 얻어진 종속변수를 분석할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순서형 로짓 모형 상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는 다음 식 (1)로 설명이 가능하다.

$$(1) \quad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이 식에서 y^* 는 응답자가 주어진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할 기준으로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답변선택지가 1부터 4까지 순서적인 경우에, 응답자는 관찰불가능한 기준인 y^* 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응답자가 선택이 가능한 응답이 j 개가 존재한다면 관찰 응답과 잠재적인 응답의 관계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2) \quad \begin{aligned} y &= 1 \text{ if } y^* \leq \mu_1 \\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 &\vdots \\ &= j \text{ if } \mu_{j-1} < y^* \end{aligned}$$

이때 총 관찰 가능한 j 개의 응답 중에서 값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μ 가 사용되며, 이는 y^* 의 경계값을 의미한다. 즉,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 종속 변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본식은 다음의 식 (3)과 같다.

$$(3) \quad \text{Prob}(y \leq j) = \text{Prob}(y^* \leq \mu_j) = \frac{e^{\mu_j - \sum_{k=1}^K \beta_k x_k}}{1 + e^{\mu_j - \sum_{k=1}^K \beta_k x_k}}$$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변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앞선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하여 이에 대한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주거환경변수,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주택 변수로 구분되며 구체 적인 변수는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가구주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유무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수준은 참조변수를 ‘중학교 졸업 이하’로 사용하였다. 가구 소득은 월 평균 총 경상소득을 사용하였고, 직업유무는 ‘있음(=1)’, ‘없음(=0)’으로 구성하였다.

주택 변수는 주택 유형, 점유 유형, 주거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주택 유형은 단독 주택, 아파트,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기타를 참조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 전세,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기타를 참조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2〉 순서형 로짓모형의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매우 불만족=1, 약간 불만족=2, 대체로 만족=3, 매우 만족=4
설명 변수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연령		가구주의 연령 (세)
		월평균 가구 소득		월평균 총 경상소득(만원)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해당=1, 그 외=0 (reference.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직업 유무		있음=1, 없음=0
	주택 변수	주택 유형	단독주택	해당=1, 그 외=0 (reference. 기타)
			아파트	
		점유 유형	자가	해당=1, 그 외=0 (reference. 기타)
			전세	
		주거 기간		현재 주택에 거주한 기간(년)
	주거 환경 변수	상업시설 접근성		매우 불만족=1, 약간 불만족=2, 대체로 만족=3, 매우 만족=4
		의료시설 접근성		
		공공기관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육 환경		
		집주변의 소음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주차시설		
		보행 안전		
		방범상태		

주거환경 요소의 경우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⁴⁾ 물리적 환경은 상업시설 접근성, 공공기관 접근성, 의

4) 객관적 구분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1(상업시설 접근성, 공공기관 접근성, 의

료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육 환경의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소음 정도, 대기오염 정도, 주차시설 이용 편의성, 이웃과의 관계, 보행 안전, 방법상태로 구성하였다. 항목별 주거환경 변수 또한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주거 환경 만족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기술통계

〈표 3〉은 기술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57.63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평균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2.03)으로 나타났다.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78%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0%정도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61%정도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변수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3.10점) 변수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문화시설 접근성’(2.68점) 변수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환경 변수들도 대체로 3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 통계

구분		변수 이름	Obs	Mean	Std. Dev.	Min	Max
종속변수		주거환경 만족도	20047	2.93	0.542	1	4
설명 변수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연령	20047	57.63	15.891	17	99
		가구 소득(월평균)	20047	280.08	212.555	0	8000
		교육수준	20047	2.03	0.813	1	3
		직업 유무	20047	0.78	-	0	1
	주택 변수	단독주택	20047	0.34	-	0	1
		아파트	20047	0.50	-	0	1
		자가 주택 점유	20047	0.61	-	0	1
		전세 주택 점유	20047	0.15	-	0	1
		주거 기간	20047	10.38	10.333	1	79

의료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육 환경)과 요인2(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소음 정도, 대기오염, 주차시설 이용 편의성, 이웃과의 관계, 보행 안전, 방법상태)으로 나타났다.

구분	변수 이름	Obs	Mean	Std. Dev.	Min	Max
주거 환경 변수	상업시설 접근성	20047	2.91	0.743	1	4
	의료시설 접근성	20047	2.89	0.736	1	4
	공공기관 접근성	20047	2.90	0.719	1	4
	문화시설 접근성	20047	2.68	0.803	1	4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20047	2.90	0.732	1	4
	대중교통 접근성	20047	2.97	0.722	1	4
	교육 환경	20047	2.92	0.661	1	4
	집주변의 소음	20047	2.84	0.727	1	4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20047	3.02	0.610	1	4
	대기오염	20047	3.00	0.615	1	4
	이웃과의 관계	20047	3.10	0.503	1	4
	주차시설	20047	2.79	0.825	1	4
	보행 안전	20047	2.98	0.626	1	4
	방법상태	20047	2.98	0.605	1	4

IV. 실증분석결과

1. 소득 계층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 분석

소득 계층별로 주거환경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저소득 계층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⁵⁾ 그 결과 첫째, 다수의 만족도 항목에서 주거만족도의 평균이 저소득 계층보다 중소득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득 계층보다는 고소득 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주거만족도의 평균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저소득 계층과 중소득 계층의 평균 차이는 대기오염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계층과 중소득 계층의 만족도 평균 차이가 큰 항목이 ‘문화시설 접근성’, ‘도시

5) 분산분석에서는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 및 개별 주거환경만족도에 있어 집단 간(소득 계층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 간(소득계층별) 세 부적인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원 및 녹지 접근성', '상업시설 접근성'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각종 시설 접근성에 있어 주거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의 주거만족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고소득 계층이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평균 차이가 큰 항목이 중소득 계층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 접근성 항목에서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저소득 계층이 특히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소득 계층별 주거환경 만족도 세부 변수들의 평균 비교 결과

세부 변수	저소득 (a)	중소득 (b)	고소득 (c)	평균 차이	
				a*b	a*c
상업시설 접근성	2.80	2.95	3.07	-0.147***	-0.274***
의료시설 접근성	2.78	2.92	3.06	-0.139***	-0.273***
공공기관 접근성	2.79	2.93	3.06	-0.135***	-0.264***
문화시설 접근성	2.55	2.73	2.88	-0.182***	-0.333***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2.78	2.94	3.09	-0.154***	-0.306***
대중교통 접근성	2.89	3.01	3.10	-0.119***	-0.211***
교육 환경	2.83	2.95	3.07	-0.125***	-0.247***
집주변의 소음	2.80	2.84	2.93	-0.033***	-0.127***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2.96	3.02	3.14	-0.059***	-0.174***
대기오염	2.99	2.99	3.05	-0.001	-0.067***
이웃과의 관계	3.07	3.09	3.16	-0.021***	-0.093***
주차시설	2.71	2.79	2.97	-0.087***	-0.265***
보행 안전	2.91	2.99	3.10	-0.076***	-0.187***
방범 상태	2.91	2.99	3.11	-0.071***	-0.195***
전반적인 주거환경	2.86	2.95	3.05	-0.081***	-0.182***

* p<0.1 ** p<0.05 *** p<0.01

2. 소득계층별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표 5〉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⁶⁾ 결과 값 중 승산비(Odds ratio)는 종속변수(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주거환경 변수는 유의하게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변수 중에서는 가구의 주택유형과 점유형태(자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는 가구의 주택 변수와 주거환경 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 변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수 중 ‘이웃과의 관계’, ‘집주변의 소음 정도’, ‘상업시설 접근성’ 순으로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집단을 구별한 뒤 계층에 따른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6〉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모델과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 변수 중 점유유형과 주거환경 변수는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에서 ‘이웃과의 관계’ 변수와 ‘소음 정도’ 변수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이웃과의 관계’ 변수와 ‘소음 정도’ 변수가 3 순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과의 상호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이웃과 간의 관계가 주거만족도와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Hur & Morrow-Jones, 2008; 윤호, 2010; Parkes et al., 2002). 단,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만족도가 한 단위 상승할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가 상승할 확률이 1.9배(Odds ratio=1.921) 정도 이지만 고소득 계층의 경우 2.2배(Odds ratio=2.268) 정도로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주변 소음 정도’ 변수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중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50-3.97으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표 5〉 순서형 로짓 모형 결과 (전체모델)

변수			Odds ratio	Std. Err.	P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연령		1.003	0.002	0.148
	월평균 가구 소득		1.000***	0.000	0.00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0.984	0.058	0.791
		대학교 졸업 이상	1.035	0.074	0.635
	직업 유무		0.985	0.053	0.776
주택 변수	주택 유형	단독	1.056	0.065	0.381
		아파트	1.043	0.063	0.484
	점유 형태	자가 주택 점유	1.088	0.059	0.117
		전세 주택 점유	1.047	0.070	0.489
	주거 기간		1.000	0.002	0.887
주거 환경 변수	물리적	상업시설 접근 접근성	1.678***	0.079	0.000
		의료시설 접근 접근성	1.401***	0.073	0.000
		공공기관 접근 접근성	1.190***	0.056	0.000
		문화시설 접근 접근성	1.262***	0.046	0.000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1.303***	0.047	0.000
		대중교통 접근성	1.446***	0.050	0.000
		교육 환경	1.637***	0.066	0.000
주거 환경 변수	사회적·환경 적	집주변의 소음	1.738***	0.057	0.000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	1.386***	0.060	0.000
		대기오염	1.531***	0.065	0.000
		이웃과의 관계	2.071***	0.101	0.000
		주차시설	1.322***	0.038	0.000
		보행 안전	1.522***	0.064	0.000
		방범 상태	1.605***	0.071	0.000
N			20047		
Log likelihood			-8950.353		
ρ^2			0.438		
χ^2 value			13957.62		

* p<0.1 ** p<0.05 *** p<0.01

〈표 6〉 순서형 로짓 모형 결과 (소득 계층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Odds ratio	P	Odds ratio	P	Odds ratio	P
연령		0.998	0.349	1.004	0.337	1.027***	0.000
교육 수준	고졸	0.998	0.975	0.901	0.366	0.867	0.518
	대졸이상	1.041	0.715	1.046	0.729	0.999	0.998
직업 유무		1.048	0.469	0.939	0.595	0.968	0.869
주택 유형	단독	0.995	0.952	1.023	0.831	1.658***	0.006
	아파트	1.064	0.499	1.028	0.779	1.373**	0.033
점유 형태	자가 주택 점유	1.208	0.010	1.019	0.849	1.147	0.390
	전세 주택 점유	1.058	0.565	0.993	0.947	1.321	0.135
주거 기간		1.001	0.718	1.000	0.986	0.990	0.203
물리적	상업시설 접근성	1.583***	0.000	1.627***	0.000	1.985***	0.000
	의료시설 접근성	1.330***	0.000	1.651***	0.000	1.193	0.135
	공공기관 접근성	1.227***	0.003	1.026	0.742	1.491***	0.000
	문화시설 접근성	1.282***	0.000	1.184***	0.006	1.413***	0.000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1.348***	0.000	1.242***	0.000	1.294***	0.003
	대중교통 접근성	1.376***	0.000	1.644***	0.000	1.283***	0.002
	교육 환경	1.562***	0.000	1.800***	0.000	1.511***	0.000
사회·환경적	집주변의 소음	1.588***	0.000	1.916***	0.000	1.761***	0.000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1.538***	0.000	1.261***	0.002	1.380***	0.003
	대기오염	1.382***	0.000	1.664***	0.000	1.604***	0.000
	이웃과의 관계	1.921***	0.000	2.258***	0.000	2.268***	0.000
	주차시설	1.257***	0.000	1.390***	0.000	1.432***	0.000
	보행 안전	1.568***	0.000	1.514***	0.000	1.424***	0.000
	방범상태	1.623***	0.000	1.561***	0.000	1.676***	0.000
N		8803		7282		3962	
Log likelihood		-4236.000		-3029.898		-1627.835	
ρ^2		0.394		0.462		0.481	
χ^2 value		5511.51		5199.45		3021.15	

*p<0.1 **p<0.05 ***p<0.01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계층에서는 모든 주거환경 변수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와 '소음 정도'를 제외하고 '방범상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현·고봉성(2012)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분양, 임대와 같은 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방범 및 치안 요인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최열 외(2013)가 부산의 영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방범 시설이 주거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실제로 범죄취약지역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신상영·조권중,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 계층에서는 치안 및 방범상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가설 H_1 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소득 가구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와 '소음정도' 변수 외에 '교육 환경'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태섭(2003)의 연구에서 중산층에서 자가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유 중 자녀의 교육요인이 원인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중산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중소득 계층은 경제적 한계로 인해 자녀의 학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 비해 계층 상승에 있어 학력 자본의 위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층 하강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신명호, 2010).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H_2 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소득 계층에서는 앞선 두 소득계층과는 다르게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변수가, 주택변수에서는 주택형태가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형태에서 단독주택이 주거환경만족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 계층이 주거형식 중 단독주택에 높은 효용가치를 보인다는 강평년·최승엽(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거환경 변수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와 '소음정도' 요인 외에 '상업시설 접근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소득 계층이 다른 계층과는 주거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과 중소득 계층은 경제적 제한으로 인하여 주거공간을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득이 높은 고소득 계층의 경우 투자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소득 계층은 주거선택에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기(신동민, 2003) 때문

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시설 접근성이 유의하게 나온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논의했던 상업시설 접근성이 고소득 계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H_3 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각 주거환경 변수의 한 단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표 7〉 한계효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각 주거환경 요인의 한계효과

	전 가구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상업시설 접근성	-0.0039***	-0.0046***	-0.0029***	-0.0037***
의료시설 접근성	-0.0024***	-0.0029***	-0.0028***	-0.0010
공공기관 접근성	-0.0013***	-0.0021***	-0.0018	-0.0021***
문화시설 접근성	-0.0017***	-0.0025***	-0.0010***	-0.0018***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0.0019***	-0.0030***	-0.0012***	-0.0014***
대중교통 접근성	-0.0025***	-0.0030***	-0.0028***	-0.0011***
교육 환경	-0.0037***	-0.0044***	-0.0034***	-0.0023***
집주변의 소음	-0.0042***	-0.0046***	-0.0038***	-0.0032***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0.0024***	-0.0044***	-0.0013***	-0.0018**
대기오염	-0.0036***	-0.0032***	-0.0032***	-0.0027***
이웃과의 관계	-0.0054***	-0.0066***	-0.0047***	-0.0043***
주차시설	-0.0022***	-0.0024***	-0.0019***	-0.0019***
보행 안전	-0.0030***	-0.0044***	-0.0024***	-0.0017***
방범상태	-0.0037***	-0.0049***	-0.0026***	-0.0026***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경우 ‘이웃과의 관계’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0.54%이고, ‘집주변의 소음정도’가 한 단위 변화할 때에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0.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은 저소득 계층의 경우 0.66%, 중소득 계층의 경우 0.47%, 고소득 계층의 경우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주거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침을 시사한다. 저소득층 계층의 경우 ‘방범상태’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계층의 경우 ‘교육환경’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상업시설 접근성’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

아질 확률이 각각 0.34%, 0.37%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별 주거만족도의 차이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본을 소득에 따라 저소득(1~4분위), 중소득(5~8분위), 고소득(9~10분위)으로 구분한 후, 소득 계층 간의 주거만족도 차이와 주거환경 구성요소들이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거환경 변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주거입지 선택 시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주택변수 중 점유형태와 주택유형 변수와 주거환경 변수는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 변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웃과의 관계’, ‘소음 정도’, ‘상업시설 접근성’ 순으로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대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영향력이 1순위로 나타나 사회적 환경이 자연적 환경, 물리적 환경보다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소들이 다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다른 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방범상태’가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중소득 계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교육환경’ 요인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계층의 경우 ‘상업시설 접근성’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최근 주거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거 복지 정책 수립 시에 주거구의 소득 계층별 주거환경 중요 요인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경우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

의 경우 안전 환경이 양호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계층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 안전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CCTV의 확충 및 순찰의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설계(CPTED)의 도입 등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둘째, 중산층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대 주택의 경우 주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시키거나, 최근 국내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방과 후 학교의 확대 등의 방안은 저소득 계층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주거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 주거만족도에 대해 '이웃과의 관계'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웃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사회는 이동성이 높으며 주로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커뮤니티의 형성과 해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홍이식·정재용, 2004). 따라서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이웃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커뮤니티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질 좋은 보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좋은 보행환경은 더 많은 보행을 발생시켜 이웃 간 교류를 발생시킬 기회를 늘리기 때문이다(이경환, 2009). 이와 같이 사회적 주거환경 변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전체 소득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분석 과정에 있어서 가구원 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별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실제 가처분 평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별 가구의 상대적 소득 수준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서울의 경우 상대평균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하다(이정민, 2013). 이러한 지역별 소득수준의 상대적인 차이는 지역별로 소득계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만족도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다양한 가구의 특성, 주택 재고의 특성, 지역별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본질적으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면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가구의 실제 가치분 평균 소득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주거복지정책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은택·정효미. (201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13(1): 109-121.
- 강평년·최승영. (2008). “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주거선호 결정에 관한 연구 : 중소도시인 목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6(1): 19-33.
- 권세연·박환용. (2014).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구」, 22(1): 77-104.
- 김경휘·김선미. (2010).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불평등에 관한 연구:주거이동 경험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0): 148-176.
- 김선엽·박천일. (201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79-99.
- 김순용·박헌수. (2015).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지역 및 소득계층별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6(2): 71-86.
- 김윤옥·박병남·김갑열. (2016).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보」, 64(0): 227-240.
- 김태섭. (2003). “중산층의 민간임대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 37-53.
- 김현태·남진. (2012). “서울시 가구특성에 따른 생활권별 주택 점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3(2): 155-173.
- 남궁미·최희용·전희정. (2017). “노인가구의 연령별 주거만족도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3): 1-23.
- 남진·김진하. (2015). “서울시 소득계층별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선택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28(2): 199-222.
- 박영근·김판준·황태수. (2006). “주거환경이 주거선택기준, 가치, 만족,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2): 145-173.
- 박원석. (2015). “수도권 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호요인 분석.” 「한국지역지리

- 학회지」, 21(3):515-528.
- 박재운·김현욱. (2013).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기도의 소득5분위별 균등화 생활비와 가처분 소득·총자산·주거비와의 관계분석.” 「부동산학보」, 53: 174-188.
- 배장오·전영일. (2014).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9: 173-187.
- 손희주·남궁미. (2018). “가구 생애 주기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 169-196.
- 신동민. (2003). “수도권 주택의 구매수요 결정요인 및 소비자 선호특성 연구.” 「국토계획」, 38(3), 339-341.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5.
- 신상영·조권중. (2014).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정책리포트」, 161: 1-21.
- 오윤경·강정규. (2016). “고급주택의 주거특성 및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4(4): 31-45.
- 유시은·양승우. (2013). “용도지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자 특성과 주거만족도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4(4): 83-92.
- 윤호. (2010).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1: 184-200.
- 이경환. (2009). “근린의 보행 환경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5(7), 203-210.
- 이성현·전경구. (2012).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토계획」, 47(4): 193-204.
- 이재현·고봉성. (2012).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0(3): 231-244.
- 정병호·정재호. (2015).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3: 256-267.
- 정성기·이성근·고덕균. (2008). “아파트 주거만족도에 따른 주거이동 결정요인.” 「부동산학보」, 33: 236-247.
- 제해득. (2016). “주거만족도 요인구조와 주거복지 정책 중요도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열·김형준·천선미. (2013). “Stepwis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부산지역 영구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5): 2147-2156.
- 최희용·전희정. (2017).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거이동방향 간 주거환경만족도 차이 분석.” 「도시행정학보」, 30(1): 163-180.
- 하성규 (2018). 「한국인 주거론」. 서울: 박영사.
- 홍이식·정재용. (2004). “집합주거단지에서 지역성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4(2), 27-30.
- 황광선. (2013).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 「서울도시연구」, 14(1): 57-72.
- 황태수, (2006). “주거환경이 주거선택기준, 가치,만족,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Adriaanse, C. C. M. (2007). “Measur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scale (RES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2(3): 287.
- Frank and Enkawa, 2009Frank, B., & Enkawa, T. (2009). “Economic drivers of dwelling satisfaction, Evidence from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Markets and Analysis*, 2(1): 6-20.
- Galster, G. (1987). “Identifying the Correlates of Dwelling Satisfaction: An Empirical Critique.” *Environment and Behavior*, 19(5): 539-569.
- Hur, M. & Morrow-Jones, H.. (2008). “Factors that influence residents's satisfaction with neighborhoods.” *Environment and behavior*, 40(5): 619-635.
- Lu, M. (1999).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rdered logit vs .regression models.” *Journal of growth and change*, 30: 264- 287.
- Parkes, A. & Kearns, A. & Atkinson, R. (2002). “What makes people dissatisfied with their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9(13): 2413-2438.
- 국토교통부. (2016).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hSelectId=&sStyleNum=&sStart=&sEnd=&hPoint=&hAppr=>
- 이정민. (2013).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2ahUKEwixPIfsiuTdAhUCwbwKHa37C64QFjAAegQICRAC&url=http%3>

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3%2F7%2Findex.board%3Fbmode%3Ddownload%26bSeq%3D%26aSeq%3D370074%26ord%3D1&usg=AOvVaw0jRHTPNVrS2thPAptgjA-J

이수정(秀李貞): 주저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부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정책 등 이다(0107hi@naver.com).

남궁미(南宮嫫): 교신저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2014년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연구분야는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건조환경과 보행활동의 관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방안 등 이며, 최근 주요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서 출판된 “Gender Difference and Spatial Heterogeneity in Local Obesity”(2018)이다 (ngm1119@pusan.ac.kr).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 예측모형 탐색 연구: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정인호·이대웅·권기현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청년 취업자의 잦은 이직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의 이직은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요인이 일자리 지속과 이탈을 결정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토대로 '이직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T-test와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을 설계하였다. 자발적 이직 예측을 위해 요인 간의 상호작용과 이직의사가 높은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청년 취업자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직무요인 중 '직무-기술 적합도'와 '복리후생 만족도', 그리고 외부환경 요인 중 '임금/소득 만족도'와 '교육수준'이 다른 요인을 우선하여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도출되었다. 특히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조합에도, 고위험집단은 '직무-기술 수준'이 낮고, 조직의 '복리후생제도'의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 의사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향후 청년 취업자 노동정책 관련 정책설계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고용노동정책, 자발적 이직, 이직 의사, 청년 취업자, 의사결정나무모형]

I. 문제의 제기

정책이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탐색과 논의의 결과물이다(Lasswell, 1951:11-13; 권기현, 2018). 다양한 우리사회의 문제 가운데 최근에 대두된 것이 청년 취업자의 '자발적인 이직' 문제이다. 통계청(2018)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약 9.3%로, 전체 실업률인 3.7%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상황에도 20

대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자의 1년 미만 이직률이 OECD평균인 50.4%에 비해 월등히 높은 72.6%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2018)에 의하면 청년층 가운데 53%가 첫 직장에 들어간 지 10년 안에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개인에게 있어 소득과 경력 증대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임정연·이영민, 2010: 5). 그러나 청년에게 이직은 근로경험의 단절과 개인의 인적 자원 축적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측면(김재신, 2017: 7) 역시 존재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위치한 청년 취업자의 이직문제는, 초기 경력형성과 재취업을 위한 비용문제를 야기하며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한다. 이처럼 청년층의 이직은 단순한 개인문제로서의 접근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¹⁾ 이에 학술적으로 청년 취업자 이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부요인(개인적 차원)과 외부요인(직무·외부환경 차원)을 구분하여 변수 사이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청년위원회(2016)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이직문제는 특정한 몇몇의 요인만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직에 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발적 이직의사가 높게 나타난 집단의 특성을 종합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자가 높은 취업문턱을 넘어 취직한 직장에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자의 이직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출 및 예측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대규모 데이터 안에 내재하는 관계와 패턴, 규칙 등을 탐색·추출하여 도형화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연관성에 따라 예측모형 생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대웅 외, 2016: 2). 본 연구는 해당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자의 이직 예측

1) 정부는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정책 목표와 달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청년 취업자의 이직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년 취업자 노동정책 관련 정책설계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이직의 개념과 유형

이직(turnover)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rice(1977)는 ‘재직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며 사회제도의 조직구성원 자격 경계를 이동하는 개인의 이동정도’라 하였고, Mobley(1982)는 이직에 대해 ‘소속된 조직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있는 개인이 소속 자격을 끝내고 떠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직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별된다. 먼저, 이직은 근로자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과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재신, 2017: 9). ‘자발적 이직’이란 이직행동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이직으로서 전직과 사직을 포함한다. 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해고, 정년퇴직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즉, ‘이직의사’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취하기전의 생각·행동의도이며, ‘이직행동’은 소속된 조직을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의미한다. 이렇듯 심리적 의사와 행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직의사와 이직행동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직의사는 이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이직행동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선행요인이기 때문에 이직행동의 대체개념으로서 이직의사를 사용되고 있다(Griffeth et al., 2000; 홍기봉, 2012; 김경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의 개념을 Iverson(1992)의 연구에서 밝힌 개념정의에 따라 “근로자가 조직 구성원 자격을 포기하고 현재의 직장에서 떠나려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임금근로자가 조직 밖으로 이동하려는 의도’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직 결정 이론

이직을 설명하는 이론은 접근법에 따라 심리적·경제적·조직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이론, 기대이론, 탐색이론, 직무특성이론 등으로 설명한다. 먼

저, Becker(1975)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축적되는 기능이나 기술의 숙련이라 설명하며, 조직 내의 인적자본을 일반적 인적자본(general skill)과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skill)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한 인적자본투자는 학교를 통한 교육, 직업훈련 등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조직에서의 인적자본 특성이 기업특수적일수록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적자본투자 또한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을 축적하게하며, 이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도와 심리적 유대감을 높이고 자발적 이직을 낮춘다고 설명한다.

Vroom(1964)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행동결정이론 중 하나이다. 이는 동기부여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임하는 행동 양상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대이론은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의 세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동기부여(motivational force)를 설명한다. 먼저 기대감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며, 수단성은 직무 수행의 결과로 인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유의성은 직무완수 이후 보상에 대해 느끼는 가치이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동기 부여를 결정하며, 개인은 조직에서의 보수·직업안정성·승진 등의 다양한 보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보상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Mortensen(1986)에 의해 처음 소개된 탐색이론(search theory)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탐색이 필요하며 이러한 직업탐색에는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기본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구직자가 투자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로 인해 확보된다고 가정한다. 즉, 직업탐색에 있어서 비용지불과 수익이 고려가 주요 고려사항이며, 구직자들은 다른 직장·직종의 직업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구직자는 직업 탐색의 한계비용과 한계이익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본인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정하고, 이 이상의 임금을 제안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Oldham & Hackman(1980)의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 theory)에 따르면 ‘핵심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심리상태가 변화되며, 직무만족과 직무능력 향상, 이직의사의 감소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 조직 내에서 핵심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피드백이 동반될 때,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에 긍지를 갖게 되며 높은 동기유발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이직은 개인과 직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 요인 탐구와 더불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전술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개인적 요인과 직무, 환경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3. 청년 취업자 이직의사 영향요인: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크게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와 이직 행동을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직의사(turnover intention)는 근로자가 현재의 고용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김상옥·유홍준, 2002). 이직의사는 이직행동 측정의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이직 관련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는 이직행동을 대신하여 이직의사가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김정은 외, 2017).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 L. Tuttle & M. Cotton(1986)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수행된 이직에 관한 실증분석 자료들을 메타분석기법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들을 정리했으며, 이를 근로자의 개인특성요인, 구조적 또는 직무관련요인, 외부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연령, 근속년수, 교육수준, 부양가족 수, 전반적 직무만족, 급여만족도, 조직몰입, 직무만족도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5$), 승진기회, 동료만족도, 직무성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Light · Ureta(1992)는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이용해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청년 취업자의 이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금, 취직 준비기간, 이직의 자발성 정도가 이직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직이 특정 요인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다수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크게 개인요인, 직무요인, 외부요인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lau & Kahn, 1981; Light & Ureta, 1992; 강순희, 2014; 성지미·안주엽, 2016).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세연·김효선(2009: 4)은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남성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우정·최민식(2012: 2)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첫 직장 이탈률이 남성 보다 높은 이유로 결혼·출산·양육 등과 같은 비임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설명한다. 이 외에도 연령 또한 이직의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이직의사와 이직행동 모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rak et al., 2001; 김재신, 2017). 또한 김혜원·최민식(2008)은 청년층·장년층·중/고령층과 같이 연령대를 구분하여, 연령계층별로 이직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혼인여부도 이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정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이직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안정성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 외에도 교육수준과 이직의사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학력일수록 기대수준과 직무환경의 격차로 인해 현재의 조직을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점과 고학력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은석·정철영, 2010; 원지영, 2015). 이와 마찬가지로 차성현·주휘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에 비해 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요인관련 요인은 직무-기술수준 적합도, 직무-교육수준 적합도, 직무-전공 적합도이다. 직무적합성이란 개인적 속성이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정민주·강우정, 2016: 3). 직무수준과 근로자가 보유한 인적자본 수준의 격차가 클 경우,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 또한 높아진다고 설명한다(차성현·주휘정, 2010: 3-5).

셋째, 외부환경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조직에 관한 요인이다. 전주용 외(2012)는 청년패널 1~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자의 이직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는 부(-)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하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높을수록 이직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은 이직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 이는 개인의 삶(가정)의 영역에 참여하는 양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박규연, 2016). 복리후생제도 역시 이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현숙 외(2012)는 병원근로자의 복직만족도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노동조합의 유무 또한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동훈·조준모(2007)의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근로환경에서 고충처리 기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영향보다 직업안정성에 기여해 직장 내 만족도를 높이고 자발적 이직의사를 낮춘다고 설명한다.

한편, 이직의사 및 이직행동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형근·손영곤(2016)은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수행했다. 그 결과 ‘비인격화’, ‘감정고갈’, ‘역할모호성’이 이직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사와의 수직 커뮤니케이션’이 이직을 낮추는 역할임을 확인했다. 안민옥 외(2018)는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5GOMS)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전체직종과 특정직종로 구분해 이직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직준비 예측 모형에는 의사결정나무, 베이즈넷,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전체 직종에서는 ‘근로시간 형태’와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주당 정규 근로시간’, ‘주당 정규 근로일’, ‘개인의 발전가능성’ 등이 이직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종 차이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사무 분야는 ‘인사체계 및 승진제도’와 ‘임금 및 소득’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자신의 교육수준 대비 일의 수준’과 ‘자신의 수준 대비 일의 기술수준’, 건설 분야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와 ‘인간관계’,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직무관련 교육 또는 훈련’과 ‘일의 자율성과 권한’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관점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간호사·외식업체 종사자 등 특정 직종 종사자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직종에 대한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를 살펴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분석 방법 관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 역시 이직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직은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행됐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를 도출함과 동시에, 나무형태로 나타나 해석이 용이하며, 교호작용(interaction) 효과와 비 선형성(nonlinearity)을 자동적으로 찾아주고, 비모수적인(nonparametric)방법인 의사결정나무모형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 자료 관점에서, 청년층의 범주를 34세까지로 확장했으며,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로 분석대상자로 한정하여 ‘자발적 이직’의 의사요인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요인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청년 취업자 이직 요인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결과

구분	독립변수	분석 결과	선행연구
개인	성별	여성	Blau & Kahn(1981), Light & Ureta(1992), 연경진(2009), 황덕순 외(2004), 김은석·정철영(2010), 김경범 외(2016), 박진아(2016)
	연령	(-)	Cotton & Tuttle(1986), Barak et al.(2001), 황덕순 외(2004), 김경범 외(2016), 문영만·김종호(2017)
	혼인여부	미혼	김경범 외(2016), 박진아(2016), 김재신(2017)
	교육수준	(+)	Cotton & Tuttle(1986), 차성현·주휘정(2010), 김경범 외(2016), 문영만·김종호(2017)
직무	직무-교육수준 적합도	(-)	차성현·주휘정(2010), 노연경 외(2011), , 김경범 외(2016), 문영만·김종호(2017), 박주연(2018)
	직무-기술수준 적합도	(-)	차성현·주휘정(2010), 노연경 외(2011), 성지미·안주엽(2016), 문영만·김종호(2017)
	직무-전공 적합도	(-)	이석열(2014), 박진아(2016), 김경범 외(2016), 성지미·안주엽(2016), 문영만·김종호(2017)
외부 환경	사업체 규모	(-)	황덕순 외(2004), 원지영(2015), 성지미·안주엽(2016)
	임금	(-)	Mobley(1982), 송기호(1996), 나인강(2005), 노연경 외(2011), 이영민·임정연(2010), 원지영(2015), 김경범 외(2016), 박진아(2016), 문영만·김종호(2017)
	근로시간	(+)	노연경 외(2011), 이영민·임정연(2010), 박진아(2016), 성지미·안주엽(2016)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	이석열(2014), 박진아(2016), 문영만·김종호(2017), 지민웅·박진(2017)
	노동조합 유무	없음	M. Cotton & J. L. Tuttle(1986), 나인강(2005), 이우정·최민식(2012), 문영만(2013)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흐름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청년 취업자 중 이직의사가 높은 집단을 도출하여 이직을 유발하는 환경을 예측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이직의사가 있는 집단과 이직의사가 없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t검정).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예측변수를 구성한 후, 의사결정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흐름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란 “의사결정규칙을 나무모양의 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목표변수와 입력변수들 사이의 관련 정도

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별하고, 나무형태의 분석결과를 생성하는 기법이다(강현철 외, 2015). 기존의 통계분석 방법이 이론적 근거에 따라 연구모형이 설정되고 이후 가설검정을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자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 패턴을 바탕으로 탐색적으로 설명모형을 만들어 내는데 주안점을 둔다(김영숙, 2009). 이러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대용량에 기반을 둔 데이터 내에서 유용한 입력변수를 찾아내고 이후 이들 변수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목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는 기법이다. 이는 정규성(normality)이나 선형성(linearity) 등의 가정이 불필요한 비모수적인 방법이다(최종후 외, 2003). 즉, 기존 회귀분석이나 로짓분석 같은 모수적 방법은 교호효과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지만,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등의 가정이 필요 없는 비모수적 방법이므로, 기존의 방법론들과는 달리 가설 없이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새로운 패턴이나 상관관계, 조합 등을 발견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다양한 원인들과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송태민·송주영, 2015: 176). 또한 두개 이상의 변수들을 결합시킴으로써 형성되는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군의 도출이 확인할 수 있어, 정책의 근거자료와 문제해결 접근이 가능하다. 의사결정나무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의사결정나무 구성요소

마디(node)	내용
뿌리마디(Root Node)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마디로써 전체 자료로 이루어짐
부모마디(Parent Node)	자식마디의 상위마디
자식마디(Child Node)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들
끝마디(Terminal Node) 또는 잎(Leaf)	각 나무줄기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마디
중간마디(Internal Node)	나무구조의 중간에 있는 마디들로 뿌리마디나 끝마디가 아닌 마디들
가지(Branch)	하나의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연결된 마디들
깊이(Depth)	가지를 이루고 있는 마디의 개수

출처: 강현철 외(2015: 81)

의사결정나무는 하나의 나무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마디(node)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마디는 그 기능에 따라 뿌리마디, 부모마디, 자식마디, 끝마디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가장 상위의 뿌리마디로부터 시작해 자식마디를 형성해나가며, 끝마디에 이르러 완성된다.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뿌리마디(root node)는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마디로, 분석대상이 되는 전체자료로 이루어진다. 자식마디(child node)는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된 2개 이상의 마디이며, 자식마디의 상위마디가 부모마디(parent node)이다. 끝마디(terminal node)는 잎(leaf)이라고도 하며, 끝마디의 개수만큼 분류규칙이 생성된다. 중간마디(internal node)는 나무구조의 중간에 있는 마디를 의미한다(강현철 외, 2015: 81).

3. 분석변수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수는 “이직의사”이며, 현재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직업소개소 등록,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구인광고 등의 탐색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창업 또는 개인사업 준비도 포함된다. 변수의 측정은 해당 활동의 경험이 있다면 1로, 없다면 0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예측변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요인, 직무요인, 외부환경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성별과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을 선정하였다. 직무요인은 직무-교육 적합도, 직무-기술 적합도, 직무-전공 적합도이며, 외부환경요인은 사업체 규모, 임금/소득 만족도,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노동조합 유무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대한 분석을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5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5GOMS) :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활용하였다.²⁾ 2015GOMS 자료는 2014년 8월 및 2015년 2월 대졸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조사한 자료이다. 대졸자들이 졸업 후 18개월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년 취업자의 이직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일련의 표본선택과정(sample selection process)을 실시했다. 먼저, 김재신(2017)의

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학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조사이며, 조사를 통해 노동정책 변화양상에 부응하고,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계청, 2016: 5).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석대상자를 응답자 중 3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통계적 지표와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을 29세까지로 설정했지만, 최근 청년 노동 문제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35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로 설정했다. 또한 종사상지위를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로 한정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김복순·이규용(2010)의 연구에서 밝혔듯 일용근로자는 타 종사상지위에 비해 산업성장률과 최저임금 등의 요인에 의해 고용환경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변수에 대해 무응답으로 표시한 결측값을 삭제했고, 혼인여부에서 사별, 이혼을 기혼으로 코딩하였다. 이를 통한 최종 분석대상은 9,931명이다.

〈표 3〉 분석변수

구분	변수		변수내용	설문문항
종속 변수	청년 취업자 이직 의사 여부		- 이직 의사 유 1, 무 0	gp1510160
예측 변수	개인 요인	성별	- 여자 1, 남자 0	sex
		연령	- 2016 기준	age
		혼인여부	- 미혼 1, 기혼 2	gp1511166
		교육수준	- 4년제 1, 전문대 0	school
	직무 요인	직무-교육 적합도	- 매우 낮다 1, 낮다 2, 알맞다 3, 높다 4, 매우 높다 5	gp1510126
		직무-기술 적합도	- 매우 낮다 1, 낮다 2, 알맞다 3, 높다 4, 매우 높다 5	gp1510127
		직무-전공 일치도	- 전혀 맞지 않는다 1, 잘 맞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잘 맞는다 4, 매우 잘 맞는다 5	gp1510128
	외부 환경 요인	사업체 규모	- 소상공인 1, 소기업 2, 중기업 3, 대기업 4	gp1510022
		임금/소득 만족도	-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gp1510111
		근로시간	- 주당정규근로시간+주당초과근무시간	workinghours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gp1510117
		노동조합 유무	- 유 1, 무 0	gp1510145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앞서, 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대상인 9,931명 중 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1,552명(15.6%)이며, 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8,379명(84.4%)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요인에서 성별과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0.48)가 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0.45)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p < 0.05$). 즉, 이직의사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고 미혼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요인을 살펴보면, 직무-교육 적합도, 직무-기술 적합도, 직무-전공 적합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직무-교육 적합도, 직무-기술 적합도, 직무-전공 적합도 모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와 임금/소득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 노조유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01$). 사업체 규모에 대해 이직의사가 있는 집단(1.74)보다 이직의사가 없는 집단(1.84)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사업체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환경에서 일하며, 임금/소득 만족도와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시간은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명		이직의사 있는 근로자(1,552명)	이직의사 없는 근로자(8,379명)	t
개인	성별 (0=남자, 1=여자)	0.48	0.45	-2.000*
		0=804(51.8%) 1=748(48.2%)	0=4,572(54.6%) 1=3,807(45.4%)	
	연령	25.89세	26.03세	-2.408*
	혼인여부 (0=기혼, 1=미혼)	0.98	0.97	-3.596***
		0=27명(1.7%) 1=1,525명(98.3%)	0=261명(3.1%) 1=8,118명(96.9%)	
	교육수준 (0=4년제, 1=전문대)	0.22	0.26	3.084***
		0=1,210(78%) 1=342(22%)	0=6,234(74.4%) 1=2,145(25.6%)	
직무	직무-교육 적합도 (5점 척도)	2.72	3.03	14.270***
	직무-기술 적합도 (5점 척도)	2.74	3.04	14.267***
	직무-전공 적합도 (5점 척도)	2.74	3.04	12.827***
외부 환경	사업체 규모 (0=소상공인, 1=소기업, 2=중기업, 3=대기업)	1.74	1.84	3.522***
		0=873(56.3%) 1=447(28.8%) 3=232(14.9%)	0=4,287(51.2%) 1=2,610(31.1%) 3=1,482(17.7%)	
	임금/소득 만족도 (5점 척도)	2.84	3.36	19.053***
	근로시간	44.63	44.55	-0.250
	복지후생 만족도 (5점 척도)	2.93	3.55	22.578***
		0.22	0.26	
	노동조합 유무 (0=없음, 1=있음)	0=1,217(78.4%) 1=335(21.6%)	0=6,161(73.5%) 1=2,218(26.5%)	4.247***
표본수		9,931		

*p<0.05, **p<0.01, ***p<0.001

2.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1)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결정요인을 분류하고자 의사결정나무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해당 표본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CART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Breiman et al.(1984)이 개발한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는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분석 알고리즘 중 하나로서 불순도(impurity)를 측정해 부모마디로부터 자식마디가 2개만 형성되는 이진분류(binary split)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다(변해원, 2015: 4).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산형(이직의사 유무)이다. 이 때문에 종속변수의 각 범주는 빈도(frequency)에 근거하여 나뉘지며, 이를 통하여 분류나무를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 이직의사 연구의 가장 효율적인 예측을 위해 예측 변수간 조합을 도출하는 CART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분리기준으로는 지니 지수(Gini Index)를 이용하였으며, 최대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4로, 상위노드와 하위노드의 사례 수는 각각 100과 20으로 지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의사결정나무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5>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 모형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표이다. 위험도표(risk chart)란 분류행렬(classification matrix)을 말하며, 위험추정치(risk estimate)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의해 잘못 분류되거나 잘못 예측될 위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추정치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구축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최종후 외, 2003; 이대웅, 2016). 분석결과 본 모형의 위험추정치는 0.153, 표준오차는 0.004, 분류정확도는 84.7%였다. 교차 분류모형의 오분류율은 15.4%였다.

〈표 5〉 청년근로자 이직의사 결정 위험도표

실제분류	예측분류		
	이직의사 무	이직의사 유	정확도
이직의사 무	8,337	42	99.5%
이직의사 유	1,475	77	5.0%
전체비율	98.8%	1.2%	84.7%
위험추정치(교차)	0.153(0.154)		
위험추정치 표준오차(교차)	0.004(0.004)		

2)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먼저 가장 상위마디는 종속변수의 빈도를 의미한다. 즉, 이직의사가 있는 청년취업자는 1,552명(15.6%)이며, 이직의사가 없는 청년취업자는 8,379(84.4%)명이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무-기술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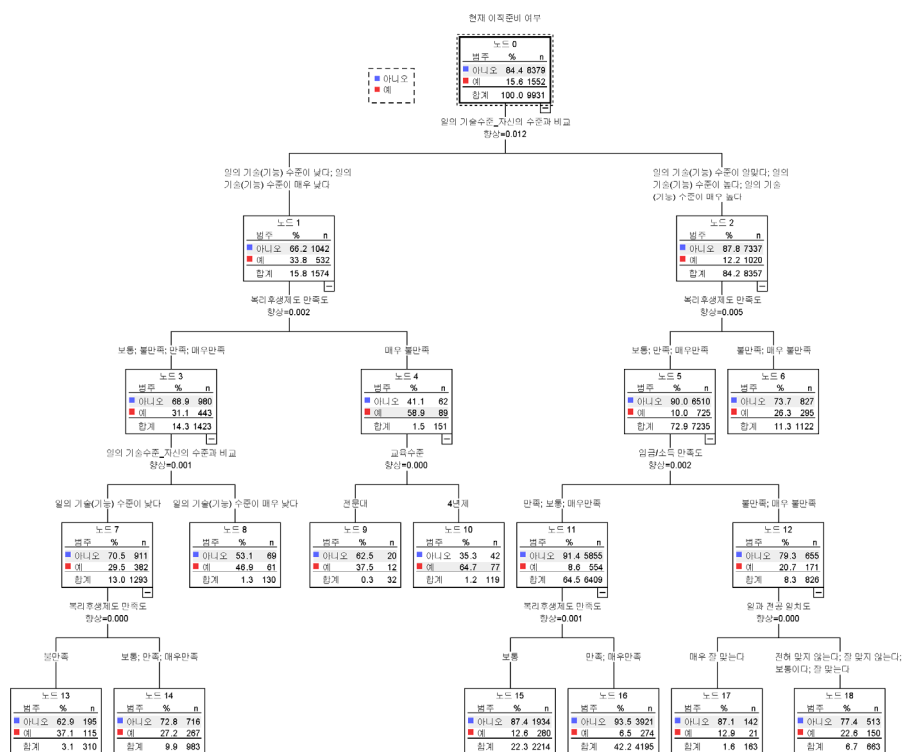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결과표에서 종속변수 하단은 이직의사를 설명하는 예측변인들이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예측변수가 종속변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이대웅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로 '직무-기술 적합도'가 도출되었다. 직무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때 이직의사가 15.6%에서 33.8%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직무수준이 알맞거나 높을 경우 이직의사가 15.6%에서 12.2%로 감소하였다. 직무-기술 불일치가 이직의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하위노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직의사를 가지며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나 다소 불만족하는 집단(31.1%)이 직무-기능 수준이 매우 낮다고 생각할 때 이직의사가 크게 증가(46.9%)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유한 기술이 직무에 부적합할 경우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직의사를 더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차성현·주희정, 2010: 25). 또한 직무 수준에 비해 높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는 동일 기술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직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2010)에 따르면 과잉학력자는 적정수준에 비해 7.8%, 전공 불일치는 5.8%, 과잉기술자는 10.5%의 임금 손실이 있고 이 중 기술과잉의 경우가 임금 손실률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과잉학력의 경우 직무불만족이 높고 임금과 발전가능성 부분에 불만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2) 복리후생제도 만족도

다음으로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외부환경요인 중 하나인 '복리후생 만족도'로 나타났다. 직무-기술수준이 낮은 집단을 살펴보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매우 불만족 성향을 조합하면 이직의사가 58.9%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직무-기술 수준이 알맞거나 높아도(12.2%),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불만족 할 경우 2배(26.3%)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복리후생제도는 의료혜택·복지시설 사용·주택자금지원·휴가제도 등으로 임금 외의 부가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조직이 자신에게 공로와 기여를 인정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무에 더 만족하며 동시에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다(최수찬·이희중, 2014). 이은숙 외(2003)는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증소병원 간호사들의 이직을 억제하는 영향요인으로 설명하는데, 이중 특히 교육지원과 행사지원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급여, 복지,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청년 근로자 이직 예측모형



(3)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대한 변수도 이직의사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무-기술 적합도가 낮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도,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자의 경우 58.9%에서 64.7%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37.5%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분석결과에서 가장 높은 이직의사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기술수준에 대해 자신의 기술이 직무에 비해 수준이 높으며,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불만족 성향이 크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이직의사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이직의사·이직행동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으며, 근로자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낮은 임금 때문에 직무 불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김주섭, 2005). 이외에도 이인재·최은미(2003)에 따르면 고학력일수록 기대수준과 성취욕구가 높아져 직접적인 이직성향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으며, 다수의 대졸 청년층의 이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전문대와 4년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박정현·류숙진, 2008; 차성현·주휘정, 2010). 본 연구에서도 차성현·주휘정(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이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임금/소득 만족도 및 기타요인

다음으로 직무-기술수준이 알맞거나 높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만족하더라도 (10%), 임금/소득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으면 2배의 이직의사(20.7%)를 보였다. 임금만족(pay satisfaction)이란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인 심리태도이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대한 지각과 상여금·인센티브 등을 통한 간접적 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본급을 제외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예측변수로 투입했던 개인요인 중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과 직무요인 중 ‘직무-교육 적합도’, ‘직무-전공 적합도’, 외부환경요인으로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유무’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 예측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3) 의사결정나무모형 이익도표

다음의 <표 6>은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이다. 이익도표란 마디들이 이익점수(gain score)에 따라 높은 순으로 정렬된 지표로써, 목표변수가 가진 특징들을 알기 쉽게 도와준다(최종후 외, 2003). 이익도표에서 가장 상위

에 위치한 노드(마디)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직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익도표(index, %)는 특정 마디에서의 이직의사가 전체 표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청년 취업자 이직의사가 가장 높게 나온 경우는 직무-기술 수준이 낮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며, 4년제 대학을 나온 조합으로 나타났다. 즉, 10번 마디(414%)가 해당된다. 또한 10번 마디의 조건을 갖춘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가 전체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15.6%)보다 4.14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직의사가 2번째로 높은 경우는 8번 마디 즉, 직무-기술 수준이 낮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일부 불만족스러우나 대체로 만족스럽지만, 직무-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역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년 취업자 이직의사의 이익도표

Node	Node: n	Node: %	Gain: n	Gain: %	Response: %	Index: %
10	119	1.2%	77	5.0%	64.7%	414.0%
8	130	1.3%	61	3.9%	46.9%	300.3%
9	32	0.3%	12	0.8%	37.5%	240.0%
13	310	3.1%	115	7.4%	37.1%	237.4%
14	983	9.9%	267	17.2%	27.2%	173.8%
6	1122	11.3%	295	19.0%	26.3%	168.2%
18	663	6.7%	150	9.7%	22.6%	144.8%
17	163	1.6%	21	1.4%	12.9%	82.4%
15	2214	22.3%	280	18.0%	12.6%	80.9%
16	4195	42.2%	274	17.7%	6.5%	41.8%

다음으로 이직의사가 가장 낮게 나온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기술 수준이 알맞거나 높으며,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만족하며, 임금/소득 모두 만족하는 조합으로써 16번 마디(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이직의사(15.6%)의 절반수준이다. 그 외에도 직무-기술 수준이 알맞거나 높으며,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만족하며, 임금/소득에 다소 불만족하더라도 직무와 전공이 매우 잘 맞으면 이직의사가 감소(15.6%→12.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기술이 불일치하더라도 복리후생제도와 임금/소득 요인이 이직의사를 상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직의사를 줄이고 장기근속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노

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복리후생제도와 임금/소득을 포함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함의

국회입법조사처(2015)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의 63.3%가 1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 개인요인, 직무요인, 외부환경요인의 각 요인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직의사를 갖고 있는 청년 취업자와 없는 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직무 측면에서 직무-교육적합도, 직무-기술 적합도, 직무-전공 적합도, 외부환경 측면에서 사업체 규모, 임금/소득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요인에 의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직의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직무요인 중 ‘직무-기술 적합도’와 ‘복리후생 만족도’, 그리고 외부환경 요인 중 ‘임금/소득 만족도’와 ‘교육수준’이 다른 요인을 우선하여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도출되었다. 변수 간의 조합에서도 가장 이직의사가 높은 집단은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낮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매우 불만이며, 4년제 대학을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직무-기술 수준과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만족하지만, 임금/소득에 다소 불만족하는 근로자는 직무와 전공이 매우 잘 맞는다고 판단하면 이직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리후생제도와 임금/소득 요인이 이직의사를 상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직문제의 선결조건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청년 취업자의 이직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복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직자의 ‘눈높이’ 문제 뿐만 아니라 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복리후생제도 만족도’를 고려하여 근로환경 상향을 위한 정부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왜 근무만족도가 낮은지와 무엇이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인 질문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향후 정부의 기조 역시 단순한 ‘고용률 지표달성’이 아닌, ‘좋은 일자리(good job)창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가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피고용된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금대비 수익률이 217%에 달하지만, 2018년 기준 가입률이 7%에 불과하며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지율도 20%가 넘는 상황이다. 청년 취업자는 임금조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좋은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적절한 근로시간과 월급으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는 특징을 갖는다(광주전남연구원, 2018: 2). 그러나 근무시간이 길며 주말출근·야근이 잦고 사회적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을 첫 직장으로 2~3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 또한 가입대상이 첫 직장에서의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제도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가입대상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임금/소득 만족도 요인이 다른 이직요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인 만큼,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많은 청년 취업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확대시행이 필요하다. 직무교육과 현장기술 간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NCS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부문·수준별로 체계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일자리의 경우 직무에 대한 학력 조건은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또한 입직 이후에도 동일 학력·조건에서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기술의 불일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NCS의 확대시행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구직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취업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좋은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부문·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위험관리에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진단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청

년 취업자는 현 직장보다 안정적이고 보수가 나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업자가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기술직·서비스직·단순노무직 등 직종에 따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요인 외에도 다수의 이직요인이 존재하지만 저조한 응답률과 설문 항목의 한계로 분석의 제약이 존재하였다. 때문에 명확한 요인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설문이나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대상의 근무특수성과 환경에 따라 세분화하여 심도깊은 접근또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직의사는 근로자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른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 이직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이직 대응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정책」, 87(2): 317-347.
- 강현철·한상태·최종후·이성건·김은석. (2015). 「데이터마이닝방법론」, 서울: 자유아카데미
- 광주전남연구원. (2018). “일·가정 양립을 넘어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로.” 광전리더스INFO.
- 국회입법조사처. (2015). 신입사원 이직 현황.
- 권기현. (2018). 「정책학 콘서트」, 서울: 박영사
- 김경범·이주현·노진원·권영대. (2016).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480-491.
- 김경호. (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갈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3(2): 326-365.
- 김복순·이규용. (2010).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구조변화와 원인.” 「노동리뷰」,

- 2010(5): 45-69.
- 김상욱·유홍준. (2002).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행태학적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1): 51-81.
- 김영숙·박소라·우후남. (2009).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의 욕구사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과 욕구추출 알고리즘 과정 연구: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 79-109.
- 김은석·정철영. (2010). “청년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이 이직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3): 107-122.
- 김재신. (2017). 「청년층의 이직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이직 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강경주·이영면. (2017).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1): 55-84.
-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
- 김혜원·최민식. (2008).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노동경제논집」, 31(1): 29-57.
- 나인강. (2005). “직무만족, 이직의도 및 이직행위의 관계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49: 509-530.
- 노언경·홍세희·이현정. (2011). “청년 취업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 변화의 잠재계층에 대한 이층 변화형태 모형의 적용.” 「조사연구」, 12(2): 113-144.
- 문영만. (2013). “노동문제에 대한 통계적 분석: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의향 결정요인.” 「산업노동연구」, 19(2): 127-159.
- 문영만·김종호. (2017). “청년층의 중소기업 정착요인 및 임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9(2): 809-826.
- 박규연. (2016). 「여성관리자들의 이직의도 및 이직행동에 관한 연구: 여성비율과 근로시간 및 업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욱·김영훈. (2017). “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26: 73-98.
- 박유정·한은희·임진숙·한채정. (2013).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감정노동이 미용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1(1): 111-118.
- 박정현·류숙진. (2008).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와 이직행위: 개인 특성, 직무만

- 족, 조직·구조적 요인의 영향력 분석.”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 박주연. (2018). 「청년 취업자의 자발적 이직 결정 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16). “산업진흥경영 :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이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산업진흥연구」, 1(1), 35-40.
- 변해원. (2015). “통계적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요인.” 「예술인 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1): 47-56.
- 성지미·안주엽. (2016).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의사 및 이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2(2): 135-179.
- 송기호. (1996). “직무위험과 이직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논집」19(1): 179-206.
- 송태민·송주영. (2015). 「빅데이터 연구 한 권으로 끝내기」,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안민욱·김태운·유동희. (2018).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근로자의 고용유지 강화 방안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265-279
- 안세연·김효선. (2009). “기혼 여성 관리자의 이직의도에 관한 통합적 고찰: 가족상황, 직무상황, 조직상황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77: 5-48.
- 연경진. (2009). “정보통신분야 여성 청년층의 이직의도와 이직행동 결정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세걸. (2001). 「Mobley의 이직모형 및 수정모형들 간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지영. (2015). “청년층 이직의 결정 요인과 효과.” 「비판사회정책」, 46: 348-376.
- 이대웅·손주희·권기현. (2016). “학교폭력 위험예측을 통한 선제적 정책대안의 모색: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95-125.
- 이동하·우석진·강현아·정익중·노충래·전종설. (2016). “임금이 사회복지사사의 이직에 미치는 효과.” 「유라시아연구」, 13(2): 87-102.
- 이만기. (2013).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61-81.
- 이석열·박철우·이미라. (2014). “청년층의 입직 및 이직 실태와 해소방안 탐색.” 「공학교육연구」, 17(6): 30-45.
- 이성균. (2011).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 :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2(2): 5-29.

- 이우정·최민식. (2012). “한국노동시장의 남녀 직장이동 요인별 차이와 직장이동 유형별 임금 변화.” 「노동경제논집」, 35(2): 117-146.
- 이은숙(2003).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 의도 영향 요인」,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 이인재·최은미. (2003).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이직의도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22: 229-255.
- 이현숙·김재우·김성호·황슬기. (2012). “병원의 복지제도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3): 107-115.
- 이형근·손영곤. (2016). “콜센터 상담사 이직행동 예측 모형: 직무 및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8(1): 145-174.
- 임정연·이영민. (2010). “대졸초기 경력자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기업교육과인재연구」, 12(1): 129-153.
- 전주용·강순희·김미란·남기곤·민주홍. (201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민주·강우정.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개인-환경적합성 지각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4(6): 103-120.
- 정성석·이기훈. (2008). “2단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직무만족도와 이직행동에 관한 연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CSAM(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5(6): 859-873.
- 조동훈·조준모. (2007).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프로빗-로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노동경제논집」, 30(3): 43-75.
- 중소벤처기업부.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
- 지민웅·박진. (2017).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에서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11): 189-211.
- 차성현·주휘정. (2010). “교육 및 기술 불일치가 임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177-215.
- 청년위원회. (2016). 사회초년생 조기이직 실태.
- 최수찬·이희종. (2014).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서비스와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465-491.
- 최종후·한상태·강현철·김은석·김미경·이성건. (2003). 「Answer Tree 3.0을 이용한

- 데이터 마이닝 예측 및 활용」. 서울: 데이터솔루션.
- 통계청. (2008). 고용이동패턴분석.
- _____. (2015). 사업체노동력조사.
- _____.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_____. (2018). 7월 고용동향.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10). 고용동향조사(OES, YP, GOMS).
- _____. (201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의 청년 고용 현황과 니트(NEET·구직 활동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 국제비교.
- 홍기봉. (2012). 「이직의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공기업을 중심으로」, 가톨릭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광훈. (2018). “청년층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 항덕순·전병유·고선. (2004).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분석.” 한국 노동연구원.
- Barak, M. E. M., Nissly, J. A., & Levin, A. (2001). “Antecedents to retention and turnover among child welfare, social work, and other human service employees: What can we learn from past research? A review and met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75(4), 625-661.
- Becker, G. (1975). *Human Capital*.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au, F. D., & Kahn, L. M. (1981). “Race and sex differences in quits by young workers.” *Industrial Labor Relation Review*, 34, 563-577.
- Breiman, L., Friedman, J., Olshen, L and Stone, J. (1984).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Wadsworth.
- Cotton, J. L., & Tuttle, J. M. (1986). “Employee turnover: A meta-analysis and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1), 55-70.
- Griffeth, R. W., Hom, P. W., Gaertner, S. (2000).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 p>and correlates of employee turnover: Update, moderator tests,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next millennium.”
- Journal of Management*
- , 26, pp.463-488.
- Hartog, J. (2000). “Over-education and earnings : Where are we, where should we go?”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2), 131-147.
- Iverson, R. D. (1992). “Employee intent to stay: An empirical test of a revision of the Price and Mueller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 Lasswell. Harold D. (1951). *“The Policy Orientation”. The Policy Sciences: Recent Developments in Scope and Metho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ght, A., & Ureta, M., (1992). “Panel estimates of male and female job turnover behavior: Can female non-quitters be identifie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2), 156-81.
- Mobley, W. H. (1982). *Employee Turnover: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Reading, MA: Addison-Wesley.
- Mortensen, D. T. (1986).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2, 849-919.
- Oldham, G. R., & Hackman, J. R. (1981).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mployee reactions: Comparing alternative framework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6-83.
- Price J. L. (1977). *The study of turnover*, Ames. I. 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Y: Wiley.

정인호(鄭寅鎬):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정책평가, 산업정책, 청년정책 등이다(ihjeong@skku.edu).

이대웅(李大雄):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2014,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난 및 위험관리 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이다. 최근 논문으로 “The effect of risk communication on the acceptance of policies for high-risk faciliti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Forthcoming), “정부신뢰가 위험인식과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한국행정학보, 2018), “재난정책분야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 분석”(한국정책학회보, 2017) 등이 있다(leedw1011@naver.com).

권기현(權祈憲): 교신저자. 미국 Harvard University. John J.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International Institutions After Hegemony),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학이론(정책형성론 및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전자정부론 및 정부혁신론)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정책학의 향연>(박영사, 2018), <정책학 콘서트>(박영사, 2018), <정부혁명4.0>(박영사, 2017), <정책학강의>(박영사, 2014), <행정학강의>(박영사, 2014), <E-Government & E-Strategy>(박영사, 2014), <비정상의 정상화>(박영사, 2014), <행정학 콘서트>(박영사, 2013), <정의로운 혁신이란 무엇인가>(한연, 2013),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박영사, 2012),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박영사, 2011), <정책분석론>(박영사, 2009), <정책학의 논리>(박영사, 2007)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 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6), “정책결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실증적 접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5) 등이 있다(gkwon77@empas.com).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창민·정원희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수 평가 및 개발은 도민의 행복한 생활과 지자체 경쟁력 강화에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민의 행복의 정도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행복지수의 평가를 위해 선행사례 결과에서 나타난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종합하여 활용하였으며, 객관적 지수는 개인, 사회, 교육·문화, 생활·환경, 안전, 참여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각종 통계 및 사회지수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주관적 지수는 AHP 방법을 통해 가능한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중치를 계산하여 실질적인 지수가 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I. 서론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사전적으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에드 디너(Ed Diener) 교수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affect)”라고 하여 행복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였다(서은국, 2017).

개인은 개인대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정부, 기업, 지자체는 국민, 고객·구성원, 주민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는 ‘행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부탄법전을 인용하여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국민행복에 관심이 많으며(한겨레, 2017.05.15),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인권, 일자리, 출산·노후, 복지·교육, 안전, 성평등, 문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행복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진행 중이다. SK그룹은 2004년 이후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이익 극대화’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로 바꾸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아시아경제, 2018.08.31), 지자체는 (가칭)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전국 39개 지자체장 참여) 구성을 통해 행복지수 공동개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등), 분기별 정기 행복정책포럼 개최, 행복 관련 국제회의 개최, 회원 지역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의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한국안전신문, 2018.08.31).

이와 같이 행복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연구의 경우 OECD, UN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재단 등에서 행복을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행복에 대한 측정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복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행복에 대한 수준은 높지 못하다.¹⁾ 과거 경제적 측면의 행복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소확행(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또한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복에 관한 연구는 매우 종합적이며, 세부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 차원의 행복에 대한 관심만 이루어질 뿐 실제 세부단위인 지자체 차원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도 단위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광역시·도 단위에서는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정책결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결국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하고자 한다. 행복지수의 평가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인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

1) 2015년 리서치 앤 리서치의 결과(1,000명 대상)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0명 중 1명(12.6%)에 불과하였으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인원 역시 10명 중 3.7명(37.7%)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5.01.29.).

리가 있다.”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주관적, 객관적 지수로 구분·분석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지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행복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보건분야의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청소년·대학생, 브랜드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행복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지자체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개발 및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사례 연구방법은 크게 국제도시, 해외·국내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사례 연구의 지수를 모두 취합한 결과 정신, 건강, 취업률, 경제, 가족, 주위관계, 사회생활, 교육, 시간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및 안전, 시민참여 등 총 14개 지수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국제단위 행복지수 연구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는 행복지수(삶의 질)에 대한 조사로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측정은 객관적·주관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Housing(20), Income(24), Jobs(16), Community(36), Education(4), Environment(30), Civic Engagement(4), Health(31), Life Satisfaction(29), Safety(6), Work-Life Balance(33) 등 총 36개 조사국 중 교육, 시민참여,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17).

〈표 1〉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	객관적/ 주관적	생활 만족도	건강	채용 정보 (취업률)	수입 (소득)		커뮤니티 (공동체)	일과 생활의 균형	교육			주택	환경	안전
														시민 참여

출처 : OECD(2017), Better Life Index.

런던의 신경제재단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는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된 행복지수로 3-4년에 한번 발표되며, 한국은 2016년 기준 140개국 중 80위를 차지하고 있다(NEF, 2016).

〈표 2〉 신경제재단의 행복한 지구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신경제재단의 행복한 지구지수	객관적/ 주관적	삶의 만족도	평균 수명										생태 흔적	

출처 : NEF(2016), The Happy Planet Index(HPI).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행복 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GDP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지수로 UNDP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6년 기준 51개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UNDP, 2017).

〈표 3〉 UNDP 인간개발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UNDP 인간개발지수	객관적/ 주관적		평균 수명		생활수준 (국내 총생산)				교육 수준					

출처 : UNDP(2017),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EU는 EU 내 국가의 다양한 삶의 질을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를 결합하여 개인 웰빙을 제시하였으며, 본 내용에는 물질적 생활환경을 비롯한 생산적·핵심 활동, 건강, 교육, 여가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함께 경제적·물리적 안전, 거버넌스와 기본권, 자연·생활 환경,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이 측정되었다. 특히 EU 국가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step, 2015.06.15).

〈표 4〉 EU 삶의 질 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EU 삶의 질 지수	객관적/주관적		건강	고용	물질적 생활 환경			상호 작용	교육	여가		만족도	환경	안전
														거버넌스

출처 : Eurostat(2015), Facts and views about quality of life in the EU.

또한 갤럽의 웰빙지수(Global Well-Being)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 총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여,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시그나 그룹의 웰빙지수에서 2018년 기준 23개국 중 23위(최하위)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7.07.10.).

〈표 5〉 Gallup 웰빙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Gallup 웰빙지수	객관적/주관적	인생 목표	건강		경제 상황			사회 관계						안전

출처 : Gallup(2015), Well-Being Index.

2. 해외 행복지수 연구

호주의 경우 2000년 조사를 시작으로 건강·인구, 경제자원, 가족과 공동체, 직업, 교육, 문화와 레저, 주택, 범죄 등 총 8가지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1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건강, 생활수준, 커뮤니티, 교육, 시간사용, 생태계의 건강, 시민참여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되고 있다.

〈표 6〉 호주 및 캐나다 웰빙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호주 웰빙지수	객관적/ 주관적		건강, 인구		경제 자원	가족과 공동체		직업	교육		문화와 레저	주택		범죄
캐나다 웰빙지수	객관적/ 주관적		건강		생활 수준		커뮤니티		교육	시간 사용			생태계	시민 참여

출처 : Australia(2017),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CANADA(2017),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부탄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믿는 나라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만의 측정 방식과 전 국민이 불교도 등의 영향이 있으며, 행복지수의 측정은 정신적 웰빙, 건강, 생활수준, 지역사회협력, 교육, 시간활용, 생태계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측정되었다.

〈표 7〉 부탄의 국민 총 행복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부탄 국민 총 행복지수	객관적/ 주관적	정신적 웰빙	건강		생활 수준		지역 사회 협력		교육	시간 활용			생태계	

출처 : Bhutan(2017), Gross National Happiness(GNH).

일본은 1992년부터 신국민 생활지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객관적 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신국민 생활지수의 측정은 보건의료, 소비지출, 교제관계, 근로, 교육·양육, 여가, 주거 등 총 7개 영역으로 측정되었다.

〈표 8〉 일본의 신국민 생활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일본 신국민 생활지수	객관적		보건 의료		소비 지출		교제, 관계	근로	교육, 양육	여가		주거		

출처 : Japan(2016), People's Life Indicators(PLI).

마지막으로 홍콩은 삶의 질 측정을 사회문화, 경제, 환경 등 총 3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 등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측정·활용하고 있다.

〈표 9〉 홍콩의 삶의 질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홍콩의 삶의 질	객관적/ 주관적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출처 : Hong Kong(2016), Quality of Life Index(CUHK).

3. 국내 행복지수 연구

국내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행복지수 연구에 대한 부분만 확인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 및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의 서울서베이는 도시정책지수에 대한 종합적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의 현재 모습과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확대 하기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며, 서울시가 측정하는 행복지수는 건강상태, 재정 상태, 가정생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 등 총 5가지 영역으로 조사 되었다.

〈표 10〉 서울시민 행복지수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서울시민 행복지수	주관적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가정 생활	주위, 친지, 친구관계	사회 생활						

출처 : 서울시(2018), 서울시 시민행복지수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대전시민 삶의 질 연구는 2006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조사와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 정책에 활용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대전시의 삶의 질 측정은 건강, 경제적 삶, 교통, 사회문화적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전한 삶 등 총 7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11〉 대전시민 삶의 질 연구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 참여
대전시민 삶의 질 연구	객관적/ 주관적		건강		경제 적 삶				교육	사회 문화적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전한 삶	

출처 : 대전연구원(2007), 대전시민 삶의 질 연구, 대전시.

전북도민 행복지수의 측정은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생활, 주위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 사회생활 등 총 5개 영역으로 서울시민 행복지수 측정영역과 동일하게 측정되고 있다.

〈표 12〉 전북도민의 행복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 참여
전북도민 행복지수	주관적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가정 생활	주위, 친지, 친구	사회 생활							

출처 : 김동영 외(2016), 전북도민 행복도와 정책연계방안, 전북연구원.

인천 부평구는 2017년 ‘행복실감 부평 행복지수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를 통해 행복지수를 개발하였다. 행복지수 개발 연구는 삶의 질, 마을자원, 공동체역량, 배경질문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복지수는 경제,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안전, 보건의료, 주거, 정주환경, 삶의 질 등 총 10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13〉 인천 부평구 연구 측정지수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 참여
인천 부평구 행복지수 연구	객관적/ 주관적		의료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시설	거주 여건	마을 환경	안전	

출처 : 지역재단(2017), 행복실감부평 행복지수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 부평구.

선행사례	측정 방법	선행사례 측정영역													
		정신	건강	취업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 참여
경남 하동군 행복지수 연구	객관적 / 주관적	정신	건강		경제	가족	주위 관계	사회 생활	교육	시간 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 참여

위와 같이 국제적 행복지수, 해외 행복지수, 국내(지자체) 행복지수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총 14개의 행복지수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는 정신, 건강, 취업률, 경제, 가족, 주위관계, 사회생활, 교육, 시간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및 안전, 시민참여 등이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지수 평가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제지수 및 국내·외 지수의 특징은 건강과 환경 등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모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모두 건강 및 환경 등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동일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복지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부터 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지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주관적 지수는 개인적 삶의 인지상태를 기반으로 심리적인 개인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 서울시민과 전북도민, 인천 부평구민의 행복지수 등이 있다.
- 3) 객관적 지수는 삶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분석하여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 한국의 행복지수개발, 경남도민의 삶의 질 평가분석 등이 있다.
- 4)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를 종합한 지수는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주관적 행복과 각종 사회지수를 함께 측정하는 장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신경경제단의 행복한 지구지수, 부탄 국민 총 행복지수, 대전시민 삶의 질, 경남 하동군 행복지수 등이 있다.

〈표 15〉 선행사례 측정영역 지수 종합결과

지수명		측정 구분	선행사례 행복지수 측정영역														
범국가 국제적	Your better life index'	객관적/ 주관적	생활 만족도	건강	채용정보 (취업률)	수입 (소득)		커뮤니티 (공동체)	일과생활의 균형	교육				주택	환경	안전	시민참여
	신경제재단의 행복한 지구지수	객관적/ 주관적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태 흔적		
	UNDP 인간개발지수	객관적/ 주관적		평균수명		생활수준 (국내총생산)				교육 수준							
	Gallup Well-Being Index	객관적/ 주관적	인생 목표	건강		경제상황			사회관계							안전	
	EU 삶의 질 지수	객관적/ 주관적		건강	고용	생활환경			상호작용	교육	여가			만족도	환경	안전	거버넌스
해외	캐나다 '웰빙지수	객관적/ 주관적		건강		생활수준		커뮤니티 (공동체)		교육	시간사용				생태계건 강		시민참여
	부탄 국민 총 행복	객관적/ 주관적	정신적 웰빙	건강		생활수준		지역사회 협력		교육	시간활용				생태계		
	일본 신국민 생활지수	객관적		보건의료		소비지출		교제, 관계	근로	교육, 양육	여가			주거			
	홍콩의 삶의 질	객관적/ 주관적				경제		사회문화							환경		
	호주 웰빙지수	객관적/ 주관적		건강,인 구		경제자원	가족과 공동체		직업	교육			문화와 레저	주택		범죄	

지수명		측정 구분	선행사례 행복지수 측정영역													
국내	서울시민 행복지수	주관적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 생활	주위, 친지, 친구관계	사회생활							
	전북도민 행복지수	주관적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 생활	주위, 친지, 친구	사회생활							
	대전시민 삶의 질 연구	객관적/ 주관적		건강		경제적 삶				교육	사회 문화적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전 한 삶	
	인천 부평구 행복지수 연구	객관적/ 주관적		의료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시설	거주여건	마을환경	안전	
	경남 하동군 행복지수 연구	객관적/ 주관적	정신	건강		경제	가족	주위관계	사회생활	교육	시간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참여

Ⅲ. 연구 설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사례와 함께 측정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2016),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2015),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행복수준 조사(2015),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201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16) 등의 결과를 토대로 행복지수에 포함 가능한 지수를 선정하였다.

우선 행복지수의 구성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① 정신, ② 건강, ③ 취업률, ④ 경제, ⑤ 가족, ⑥ 주위관계, ⑦ 사회생활, ⑧ 교육, ⑨ 시간활용, ⑩ 문화, ⑪ 주거, ⑫ 환경, ⑬ 범죄 및 재난, ⑭ 시민참여 등 총 14개 영역들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분류된 14개의 영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6개의 영역(개인적, 사회적, 교육·문화적, 생활·환경적, 참여, 안전)으로 구분하고 21개의 세부 지수로 재분류하였다.

행복지수의 평가를 위해 선행 사례와 같이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종합하여 활용하였으며, 객관적 지수는 개인적 행복, 사회적 행복, 교육·문화적 행복, 생활·환경적 행복, 안전의 행복, 참여의 행복 총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각종 통계 및 사회지수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주관적 지수는 AHP 방법을 통해 가능한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중치를 계산하여 실질적인 지수가 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구성안

행복지수 선행연구 지수들												
생활 만족도	건강	채용정보 (취업률)	수입 (소득)		커뮤니티 (공동체)	일과생활의 균형	교육			주택	환경	안전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태 흔적	
	평균수명		생활수준 (국내총생산)				교육 수준					
인생 목표	건강		경제상황			사회관계						안전
	건강	고용	생활환경			상호작용	교육	여가		만족도	환경	안전
	건강		생활수준		커뮤니티 (공동체)		교육	시간사용			생태계건강	
정신적 웰빙	건강		생활수준		지역사회 협력		교육	시간활용			생태계	
	보건의료		소비지출		교제, 관계	근로	교육, 양육	여가		주거		
			경제		사회문화						환경	
	건강, 인구		경제자원	가족과 공동체		직업	교육		문화와 레저	주택		범죄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 생활	주위, 친지, 친구관계	사회생활						

행복지수 선행연구 지수들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 생활	주위, 친지, 친구	사회생활						
	건강		경제적 삶				교육	사회 문화적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전 한 삶
	의료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시설	거주여건	마을환경	안전
정신	건강		경제	가족	주위관계	사회생활	교육	시간활용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			↓			↓			↓		↓	↓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분류(6개 영역, 10개 지수)												
개인적 행복		사회적 행복		교육·문화적 행복		생활·환경적 행복		안전		참여		
건강	경제	가족	사회생활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범죄 재난	시민 참여			

지수의 선정에 있어서 선행연구 사례 중 객관적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행복지수를 분석한 지수들을 모두 취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구성하였고, 전문가(연구진)검토 후 지수를 최종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수를 선정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지수는 선정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주관적 지수는 객관적 지수를 토대로 AHP 중요도 분석을 통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객관적 지수 선정 결과¹⁾ 개인적 행복 영역의 총 15개 항목 중에서 선정된 지수는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살률(인구 10만명당)’, ‘1인당 지방세’ 등 총 4개 세부 지수, 사회적 행복영역의 총 5개 항목 중에서 선정된 지수는 ‘조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 3개 세부 지수임. 그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역별 등록단체 수가 아닌 사업체 수로 적용하였다.

교육·문화적 행복영역의 총 7개 항목 중에서 선정된 지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아동교육 환경을 대체)’, ‘지정등록문화재 수(예술행사 수를 대체)’, ‘도시공원 조성면적(공원 수를 대체)’ 등 총 5개 지수이며, 생활·환경적 행복영역 총 7개 항목 중에서 선정된 지수는 ‘주택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산림면적’ 등 총 3개 세부 지수이다.

안전의 행복영역 총 4개 항목 중에서 선정된 지수는 ‘범죄율’,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등 총 4개 세부 지수이며, 참여의 행복영역 총 2개 항목 중에서 ‘전국투표율’, ‘축제방문경험’ 등 총 2개 세부 지수로 구성하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지수를 선정한 이유는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논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 지수로 행복을 구별할 수 있는 지자체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지수 중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수를 선정하였다.

1) 실제 측정 및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와 맞지 않는 지수는 제외하였다.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세부지수 분석 데이터

행복지수 지수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영역구분		선정 세부지수	
개인적 행복	건강	평균수명(기대여명)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연령 별 인구 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인구 10만명당)
	경제	1인당 지방세	지방세 총액 인구수
사회적 행복	가족	조이혼율	조이혼율
	사회생활	경제활동참가율	사업체수 인구수
		실업률	실업자 수
교육·문화적 행복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학생 수 교원 수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수
			7세 이하 인구 수
	문화	지정등록 문화재 수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생활·환경적 행복	주거	주택보급률	주택 수 세대 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환경	산림면적	산림면적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범죄율	범죄건수 인구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화재발생건수 인구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축제 방문 경험	축제 방문 경험		

IV.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지수 설정 및 분석이라는 본 조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지수의 확인·개발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각 시·도의 2차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를 실제 행복지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객관적 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 사회, 교육·문화, 생활·환경, 안전, 참여 등 6대 영역의 객관적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발행하는 통계자료 및 책자 그리고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통해 1차 객관적 지수를 발굴하였다.

둘째, 행복지수 관련 지수 선정과 가중치 부여를 위하여 행복지수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지수를 선정하였고, AHP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다만, AHP 전문가 설문과 객관적 지수 간의 우선순위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와 다른 시·도 간의 행복지수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 17개 시·도의 객관적 지수를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선정된 객관적 지수 중심으로 17개 시·도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수준을 단순 비교해서 분석하였다.

1. 주관적 지수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객관적 지수의 가중치 부여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행복의 객관적 지수를 개발하여 AHP에 의한 행복지수들의 우선순위 선정과 함께 17개 시·도의 객관적 지수에 대한 상대적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AHP 분석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 지수체계를 활용하여 행복(삶의 질)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를 활용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해 행복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의 구성은 각 계층구조에 맞고,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쌍대비교의 척도는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9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또

한 AHP 프로그램은 expert choice 11.5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계층구조를 기본으로 3계층(제1계층 : 측정목표 → 제2계층 : 측정영역 → 제3계층 : 세부측정 영역)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AHP를 활용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 산정은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A_1	A_2	...	A_n
A_1	$W1/W1$	$W1/W2$	...	$W1/Wn$
A_2	$W2/W1$	$W2/W2$	...	$W2/Wn$
$\vdots$	$\vdots$	$\vdots$		$\vdots$
A_n	$Wn/W1$	$Wn/W2$	...	Wn/Wn

중요도 평가과정에 집단이 참여할 경우 집단적 동의에 의한 평가를 함으로써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으나, 개인마다 다른 평가를 할 경우,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사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단계별, 범주별로 일관성 비율(C.R) 값을 산정하여 각각 0.2를 초과하는 값은 모두 제외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표 18〉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상대적 중요성 평가를 위한 측정지수와 측정항목

지수구분	선택지수
개인적 행복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자살률(인구 10만명당)
	1인당 지방세
사회적 행복	조이훈율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교육·문화적 행복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생활·환경적 행복	주택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산림면적
안전의 행복	범죄율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참여의 행복	전국 투표율
	축제 방문 경험

AHP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특성은 남성 56%(14명), 여성 44%(11명)으로 나타났다으며, 전공 특성은 인문사회계열 60%(15명), 이공계열 24%(6명), 의약학계열 8%(2명), 예체능계열 8%(2명)순으로 나타났다으며, 활동분야 특성은 연구자(교수, 연구원 등) 64%(16명), 시민사회단체 소속 28%(7명), 공무원 8%(2명)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특성은 대학원 재학 이상 64%(16명), 대학중퇴 또는 대졸 36%(9명)순으로 나타났다고, 연령 특성은 50대 68%(17명), 40대 32%(8명)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계
성별	남	14	56	25(100.0%)
	여	11	44	
전공	인문사회계열	15	60	25(100.0%)
	이공계열	6	24	
	의약학계열	2	8	
	예체능계열	2	8	
활동분야	연구자(교수, 연구원 등)	16	64	25(100.0%)
	공무원	2	8	
	시민단체소속	7	28	
학력	대학중퇴 또는 대졸	9	36	25(100.0%)
	대학원 재학 이상	16	64	
연령	40대	8	32	25(100.0%)
	50대	17	68	

제주특별자치도민 행복지수 21개 세부 지수 간의 전체 상대적 우선순위는 주택 보급률(.099) → 실업률(.091) → 범죄율(.081) → 전국 투표율(.078) → 자살률(.064) → 평균수명(.062) → 교통사고 발생건수(.054) → 경제활동참가율(.050) → 65세 이상 인구비율(.042) →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041) → 산림면적(.041) →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039) →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038) → 1인당 지방세(.037) → 축제 방문(.034) →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032) → 조이혼율(.031) →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 (.030) → 화재발생률(.030) → 도시공원 조성 면적(.014) → 지정등록 문화재 수(.0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종합 가중치 및 순위

지수구분	선택지수	가중치	순위
개인적 행복 0.206	평균수명(기대여명)	0.062	6
	65세 이상 인구비율	0.042	9
	자살률(인구 10만명당)	0.064	5
	1인당 지방세	0.037	14
사회적 행복 0.172	조이혼율	0.031	17
	경제활동참가율	0.050	8
	실업률	0.091	2
교육·문화적 행복 0.134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0.041	10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0.030	18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수	0.038	13
	지정등록 문화재수	0.012	21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0.014	20
생활·환경적 행복 0.179	주택보급률	0.099	1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0.039	12
	산림면적	0.041	11
안전의 행복 0.197	범죄율	0.081	3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0.032	16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0.030	19
	교통사고 발생건수	0.054	7
참여의 행복 0.112	전국 투표율	0.078	4
	축제 방문	0.034	15

2. 객관적 지수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에 대한 실증적·분석적 연구로 실증적 분석을 위해 기 개발된 객관적 행복지수에 대한 다른 17개 시·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시점은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2013년-2015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자료가 없는 지수에 대해서는 단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앞서 제시한 총 6개 영역 21개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종합적인 행복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각 단위 지수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

나 절대 기준으로 100점(만점)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여 상대적 차원에서 다른 시·도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의 질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향후 행복지수 평가가 연결되어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 평가된 지수의 결과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행복지수 수준이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객관적 지수에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중치 분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본 연구는 객관적 지수를 중심으로 전국 특·광역시·도의 행복지수를 비교·측정하여 AHP 분석을 통해 지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찾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17개 시·도 삶의 질 비교 평가모형은 아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① n개의 비교 대상지역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k개의 요인들을 설정하였다(지역의 요인을 X_{ij} 라고 가정하였다).
- ② 각 구성요소들의 표준화지수(Z_{ij})를 계산하였다.

$$Z_{ij} = (X_{ij} - X_i) / S_j$$

$$X_i = j\text{요인의 평균}$$

$$S_j = j\text{요인의 표준편차}$$
- ③ 비교대상 16개 시·도의 종합적 삶의 질(J)는 각 요인들의 표준화지수(Z_{ij})를 단순 합산하여 구하고자 하였다.

$$J = \sum Z_{ij}$$
- ④ 측정된 J값에 AHP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이 가장 큰 것이 지역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순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비교·측정하였으며, 활용은 각 지수들에 대해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의해 산출된 17개 시·도의 행복지수 순위는 본 연구모형을 단순히 적용해 본 결과이며, 따라서 요인별 가중치가 부과하는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17개 시·도의 정확한 삶의 질 순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연구의 목적이 17개 시·도의 행복지수 순위를 측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복 정도를 확인하고,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은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²⁾

1) 개인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인적 행복영역에 대한 종합 평가는 ‘평균수명(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수’, ‘자살률(인구 십만명당)’, ‘1인당 지방세’ 등을 표준화 지수로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인적 행복영역은 전국 시·도에서 9위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며, 그 다음으로 전남,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수명(기대여명) 및 1인당 지방세 세부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나, 65세 이상 인구수 부분에서 평균 수준을 보였다.

〈표 21〉 개인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시·도별	평균수명	65세 이상 인구수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경제 (1인당 지방세)	합계 표준화 지수	순위
서울	2.65707	-0.36986	-1.03315	0.35016	1.60422	3
부산	-0.75525	0.26229	0.44321	-0.28755	-0.3373	10
대구	-0.10036	-0.33594	-0.11679	-0.38757	-0.94066	12
인천	-0.08313	-0.95884	0.03594	-0.34256	-1.34859	13
광주	-0.13483	-0.77074	-1.49133	-0.4557	-2.8526	15
대전	0.98538	-0.89409	-0.06588	-0.4519	-0.42649	11
울산	-1.30674	-1.54474	-0.75315	-0.44495	-4.04958	17
세종	-0.28994	-0.98043	-1.21133	-0.50991	-2.99161	16
경기	1.38176	-1.00818	-0.49861	0.39423	0.2692	7
강원	-0.94483	0.95304	2.04683	-0.4536	1.60144	4
충북	-0.44504	0.31472	0.79957	-0.43846	0.23079	8
충남	-0.18653	0.80811	1.99593	-0.38894	2.22857	1
전북	-0.03143	1.24599	-0.1677	-0.44304	0.60382	5
전남	-0.47951	2.0755	0.90139	-0.43234	2.06504	2
경북	-0.49674	1.21824	0.06139	-0.35698	0.42591	6
경남	-0.89312	-0.0029	-0.24406	-0.30054	-1.44062	14
제주	0.696415	-0.05103	-0.44943	-0.17688	0.019075	9

2) 본 연구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중요한 이유는 각 지역마다 다른 지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여 인구, 소득수준, 지역경제상황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 차이가 존재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2) 사회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행복영역에 대한 종합 평가는 ‘이혼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을 표준화 지수로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행복영역은 전국 시·도에서 13위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며, 그 다음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혼률, 경제활동 참가율부분에서 높은 지수를 냈으며, 실업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지수를 보였다.

〈표 22〉 사회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시·도별	조이혼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합계 표준화 지수	순위
서울	-1.0853	0.25249	1.02228	0.18947	9
부산	-0.38531	-0.02759	0.93539	0.52249	5
대구	-1.1922	0.16782	0.41402	-0.61036	15
인천	1.46673	0.35671	1.80432	3.62776	1
광주	-0.5627	0.08966	-0.02045	-0.49349	14
대전	-0.59954	0.22644	0.41402	0.04092	11
울산	0.39132	0.1092	-0.10734	0.39318	8
세종	-2.64155	-	-	-2.64155	17
경기	0.19327	0.34368	0.7616	1.29855	3
강원	0.78429	0.04406	0.24024	1.06859	4
충북	0.45486	0.33717	-0.36802	0.42401	7
충남	0.73385	0.38276	0.41402	1.53063	2
전북	0.32616	0.05058	-1.15006	-0.77332	16
전남	0.11586	0.28506	-0.45491	-0.05399	12
경북	-0.26246	0.33717	0.06645	0.14116	10
경남	0.67557	0.18736	-0.36802	0.49491	6
제주	0.4642808	0.341195	-0.88841	-0.082934	13

3) 교육·문화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문화적 행복영역에 대한 종합 평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중·고등학교)’,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지정등록 문화재 수’, ‘도시공원 조성면적’ 등을 표준화 지수로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

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문화적 행복영역은 전국 시·도에서 4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에서 높은 지수를 보였으며 지정등록 문화재 수에서는 낮은 지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도시공원 적용면적 등에서 평균을 보였다.

〈표 23〉 교육·문화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중·고등학교)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지정등록 문화재수	도시공원 조성면적	합계 표준화 지수	순위
서울	0.849301	0.888179	1.329738	1.40579	-0.51026	3.962748	1
부산	0.41791	-0.23228	-0.64456	-0.52459	-0.32164	-1.30516	14
대구	0.2831	0.356554	-1.00618	-0.78938	-0.69888	-1.854786	15
인천	1.11892	0.615326	-0.43919	-0.7714	-0.40261	0.121046	6
광주	0.734713	1.074166	-0.77324	-0.9561	-0.50788	-0.428341	10
대전	0.478574	0.50357	-0.88914	-0.85149	-0.39737	-1.155856	13
울산	0.896484	0.822233	-0.50023	-0.97735	0.31375	0.554887	5
세종	-0.86278	-2.89189	0.448876	-1.12446	3.81081	-0.619444	11
경기	2.049107	0.612981	-0.21768	0.45286	-0.52502	2.372248	2
강원	-1.67164	-1.1278	-0.02687	-0.16826	-0.00728	-3.00185	17
충북	-0.78864	0.140482	0.632132	0.04423	-0.2359	-0.207696	8
충남	-0.5999	-0.1549	0.260534	0.44305	-0.25162	-0.302836	9
전북	-1.1324	-0.55501	-0.56087	0.18643	0.09513	-1.96672	16
전남	-1.54357	-1.05753	0.676086	0.74381	0.38996	-0.791244	12
경북	-0.74819	-0.57759	-0.80009	2.03509	0.0737	-0.01708	7
경남	-0.08089	0.020583	-0.47383	1.68039	0.02464	1.170893	3
제주	0.4698108	0.3891207	1.1777408	-0.99433	-0.075571	0.9667717	4

4) 생활·환경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환경적 행복영역에 대한 종합 평가는 '주택보급률',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산림면적' 등을 표준화 지수로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환경적 행복영역은 전국 시·도에서 13위로 평균수준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전남, 울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경기, 강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4〉 생활·환경적 행복영역 평가결과

시·도별	주택보급률 (총주택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산림면적	합계 표준화 지수	순위
서울	-1.54684	1.06945	-0.35845	-0.83584	14
부산	-0.50945	1.01053	-0.35757	0.14351	5
대구	-0.66663	0.93836	-0.357	-0.08527	7
인천	-0.76094	0.78666	-0.35097	-0.32525	9
광주	-0.36799	0.95309	-0.35828	0.22682	4
대전	-0.57232	0.87209	-0.35782	-0.05805	6
울산	0.16643	0.83821	-0.35612	0.64852	3
세종	2.71276	-0.60663	-0.35827	1.74786	1
경기	-1.12246	0.47737	-0.33605	-0.98114	16
강원	0.13499	-0.7274	-0.29918	-0.89159	15
충북	0.8423	-0.66702	-0.33742	-0.16214	8
충남	0.38648	-1.96605	-0.34083	-1.9204	17
전북	0.26074	-0.29145	-0.33958	-0.37029	10
전남	0.71656	-1.67443	2.618144	1.660274	2
경북	1.04664	-1.17072	-0.30031	-0.42439	11
경남	0.08784	-0.27966	-0.32817	-0.51999	12
제주	-0.800009	0.170664	-0.1456525	-0.774998	13

5) 안전의 행복영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의 행복영역에 대한 종합 평가는 ‘범죄율’,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을 표준화 지수로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의 행복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균 수치를 보였으나, 범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안전의 행복영역 평가결과

시·도별	범죄율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화재발생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합계 표준화 지수	순위
서울	-0.20483	1.29405	-1.20294	1.344542	1.230822	4
부산	0.62743	0.56197	-1.29801	-0.28083	-0.38944	12
대구	0.57332	0.13796	-0.74988	0.985559	0.946959	5
인천	-0.47167	0.45347	-1.04045	-2.02201	-3.08066	17
광주	0.91667	0.5572	-0.90253	0.985772	1.557112	2
대전	-0.75158	0.56803	-0.44049	0.067334	-0.556706	14
울산	0.24303	0.73027	-0.70313	-0.25093	0.01924	7
세종	-	-0.80999	0.75836	0.004854	-0.046776	8
경기	-0.42502	2.41517	-0.44217	-2.34259	-0.79461	15
강원	0.01164	-1.70417	2.08531	0.974513	1.367293	3
충북	-0.51832	-0.4421	-0.30689	0.949097	-0.318213	10
충남	-0.85794	-0.63457	1.61501	-0.48602	-0.36352	11
전북	-1.12106	-0.58312	0.28568	-0.08689	-1.50539	16
전남	-0.32985	-0.93502	1.38041	0.397443	0.512983	6
경북	-0.50153	-0.90179	0.56403	0.603155	-0.236135	9
경남	-0.25334	0.06428	0.69978	-0.94336	-0.43264	13
제주	2.6424549	-0.24692	0.05823	-0.205308	2.2484569	1

6) 참여의 행복영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참여의 행복영역에 대한 종합 평가는 '전국투표율', '축제방문경험' 등을 표준화 지수로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여의 행복영역은 전국 시·도에서 11위로 평균수준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참여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 순이며, 대구, 부산, 경북 등이 낮게 나타났다.

〈표 26〉 참여의 행복영역 평가결과

시·도별	전국투표율	읍면 마을행사 및 축제참여	합계 표준화 지수	순위
서울	0.45911	-1.26232	-0.80321	13
부산	-1.06042	-0.70185	-1.76227	16
대구	-1.26763	-2.51915	-3.78678	17
인천	-0.99135	-0.24327	-1.23462	14
광주	1.08073	-0.46407	0.61666	8
대전	0.04469	0.69086	0.73555	6
울산	0.2519	0.95411	1.20601	4
세종	1.73689	0.26625	2.00314	1
경기	-0.33519	-0.26875	-0.60394	12
강원	-0.26612	0.50403	0.23791	9
충북	-0.40426	1.21737	0.81311	5
충남	-1.02588	1.65896	0.63308	7
전북	1.52969	-0.08192	1.44777	3
전남	1.80596	0.14736	1.95332	2
경북	-0.61147	-0.8632	-1.47467	15
경남	-0.50786	0.61443	0.10657	10
제주	-0.342256	0.1193978	-0.222858	11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종합 평가한 결과 6개 영역 종합순위는 3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교육·문화적 행복영역, 안전의 행복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개인적 행복영역, 참여의 행복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사회적 행복영역에서 높은 세부 지수는 '실업률'이었으며, 교육·문화적 행복영역에서는 '7세 이하 1인당 유치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전의 행복영역에서 '범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지수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7〉 전체 6개 영역 시·도별 종합 평가결과

시·도 별	개인적 행복	사회적 행복	교육·문화적 행복	생활·환경적 행복	안전의 행복	참여의 행복	전체	순위
서울	1.60422	0.18947	3.962748	-0.83584	1.230822	-0.80321	5.34821	1
부산	-0.3373	0.52249	-1.30516	0.14351	-0.38944	-1.76227	-3.12817	16
대구	-0.94066	-0.61036	-1.854786	-0.08527	0.946959	-3.78678	-6.3309	17
인천	-1.34859	3.62776	0.121046	-0.32525	-3.08066	-1.23462	-2.24031	13
광주	-2.8526	-0.49349	-0.428341	0.22682	1.557112	0.61666	-1.37384	10
대전	-0.42649	0.04092	-1.155856	-0.05805	-0.556706	0.73555	-1.42063	11
울산	-4.04958	0.39318	0.554887	0.64852	0.01924	1.20601	-1.22774	9
세종	-2.99161	-2.64155	-0.619444	1.74786	-0.046776	2.00314	-2.54838	14
경기	0.2692	1.29855	2.372248	-0.98114	-0.79461	-0.60394	1.560308	5
강원	1.60144	1.06859	-3.00185	-0.89159	1.367293	0.23791	0.381793	7
충북	0.23079	0.42401	-0.207696	-0.16214	-0.318213	0.81311	0.779861	6
충남	2.22857	1.53063	-0.302836	-1.9204	-0.36352	0.63308	1.805524	4
전북	0.60382	-0.77332	-1.96672	-0.37029	-1.50539	1.44777	-2.56413	15
전남	2.06504	-0.05399	-0.791244	1.660274	0.512983	1.95332	5.346383	2
경북	0.42591	0.14116	-0.01708	-0.42439	-0.236135	-1.47467	-1.58521	12
경남	-1.44062	0.49491	1.170893	-0.51999	-0.43264	0.10657	-0.62088	8
제주	0.019075	-0.082934	0.9667717	-0.774998	2.2484569	-0.222858	2.153514	3

7)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 시사점

본 평가에서 나타난 6개 영역 즉, 개인, 사회, 교육·문화, 생활·환경, 안전, 참여의 경우 현재 국내·외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지수이며, 우리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객관적 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외에 더 많은 행복에 대한 지수도 가능하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행복지수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만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개인적 행복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65세 이상 인구의 관리 측면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이미 도래한 상황에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고령인구의 관리와 함께 출산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행복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관리이며, 산업체계를 보다 다양화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행복을 높일 수 있다

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문화적 행복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보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활·환경적 행복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결국 도민들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의 행복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역시 안전의 행복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민들 역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수록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행복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적극적인 도민의 참여가 가능할 때 비로소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종합결과

행복지수 지수			분석결과	종합 순위
영역구분		선정 세부지수		
개인적 행복	건강	평균수명(기대여명)	0.696415	9
		65세 이상 인구비율	-0.05103	
		자살률(인구 10만명당)	-0.44943	
	경제	1인당 지방세	-0.17688	
합계(표준화 지수)			0.019075	
사회적 행복	가족	조이훈율	0.4642808	13
	사회생활	경제활동참가율	0.341195	
		실업률	-0.88841	
합계(표준화 지수)			-0.082934	
교육·문화적 행복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0.4698108	4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0.3891207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1.1777408	
	문화	지정등록 문화재 수	-0.99433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명당)	-0.075571	
		합계(표준화 지수)		
생활·환경적 행복	주거	주택보급률	-0.800009	13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0.170664	
	환경	산림면적	-0.1456525	
합계(표준화 지수)			-0.774998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범죄율	2.6424549	1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0.24692	
		화재발생률(인구 천명당)	0.05823	
		교통사고 발생건수	-0.205308	
합계(표준화 지수)			2.2484569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전국 투표율	-0.342256	11
		축제 방문 경험	0.1193978	
	합계(표준화 지수)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수들 사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복지수를 확인하였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계량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지수와 심리적 차원의 주관적 지수에 따라 삶의 질 측정기준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강창민, 2010). 이는 결국 실질적인 행복지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행복을 다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개발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의 행복 또는 삶의 질 지수에서 나타난 일상생활 관련 지수를 중심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지수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 차원에서의 행복 수준이 어떠한지를 객관적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물론 관련된 자료에 대한 한계로 인해 정확한 행복의 객관적 수준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 이유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문제도 확인하고, 실제 행복과 관련된 주민 정책을 설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행복지수를 개선·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행복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균형적·통합적 차원의 정책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행복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강창민, 2010).

참고문헌

강창민 외. (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연구원.

- 강창민. (2010),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동영 외. (2016), 「전북도민 행복도와 정책연계방안」. 전북연구원.
- 배웅규 외. (2013), 「하동군 행복지수 측정 및 비교연구」. 하동군.
- 서울시. (2018), 「서울시 시민행복지수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은국. (2017), 「행복의 기원」. 파주: 21세기북스.
- 「아시아경제」. (2018). “[최태원 SK회장 취임 20주년] 경청·행복 리더십…재계 톱3 점프 ‘최태원 매직’.” 8.31.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2016), 통계연보.
- 지역재단. (2017), 행복실감부평 행복지수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 부평구.
-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
- 통계청. (2016), 국민 삶의 질 조사.
- 「한겨레」. (2017). “‘부탄 예찬’ 문 대통령, 행복 정책 도입할까.” .5.15.
- 「한국안전신문」. (2018). “김주수 의성군수, ‘행복도시 만들자’ 전국 단체장들과 회동: 29일 전주서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구성 2차 회의 가져.” 8.31.
- 「한국일보」. (2018). “한국 웰빙 지수, 남부끄러운 세계 꼴찌.” .7.10.
- 행정자치부. (2015). 지역공동체 행복수준 조사.
- Australia. (2017).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 Bhutan. (2017).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CANADA. (2017).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 Eurostat. (2015). Facts and views about quality of life in the EU.
- Gallup. (2015). Well-Being Index.
- Hong Kong. (2016). Quality of Life Index(CUHK).
- Japan. (2016). People’s Life Indicators(PLI).
- Kistep. (2015.06.15.). 「EU 삶의 질 관련 통계」의 주요내용, 주요통계 48호.
- NEF. (2016). The Happy Planet Index(HPI).
- OECD. (2017). Better Life Index.
- UNDP. (2017).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강창민(姜昌旻): 주저자.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人事改革의 適實性에 관한 研究: 金大中 政府 人事改革을 中心으로, 2002), 현재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사, 지방자치(행정), 지방재정 등이다. 최근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2017),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이질성 분석(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전망(2014), 무기계약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 연구(2013) 등이다(kgilsan@hanmail.net).

정원희(鄭元熙): 교신저자.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위기관리, 공공갈등, 기후변화, 교양교육 등이다. 최근 저서 및 논문으로는 쉽게 쓴 행정학(제2판(공저), 2018),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18), 공공재로서의 안전과 안전복지 강화 방안(2017),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2017),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기후변화 농어촌 취약성 법제도정비의 정책효과(2016) 등이다(chung0405@konyang.ac.kr).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ume 13 Number 3

September 2018

Contents

Analysis of key topics in Korea's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Jinhee Song, Yoonseo Choi, Jungjin Kim & Inseok Seo	1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s in Attitude of Social Welfare between Generations Jonghoon Park & Seongwoo Lee	31
A Study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Government: Focusing on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Kiwoong Yoon & Seunghyun Yoo	59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ect of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Jeonghee Lee & Giheon Kwon	9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Income Class Soojung Lee & Mi Namgung	121
A Study on Job Turnover Predictive Model of Youth Workers: Focused on Decision Tree Model Inho Jeong, Daewoong Lee & Giheon Kwon	147
Research and Evaluation on the Happiness Index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angmin Kang & Wonhee Chung	175

Abstract

Analysis of key topics in Korea's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Jinhee Song, Yoonseo Choi, Jungjin Kim & Inseok Se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opics were discussed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 review of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In particular, we identified six research problems based on theoretical and logical review, and tried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regimes in that different aspects may appear depending on the timing. Based on the SNA analysis method, which was deemed most appropriate for the main text analysis, some implications were confirmed.

First, 'local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term in the theme of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This means that scholarly research on performance management in Korea has been dealt with as a necessary institution or tool for the assessment or evaluation of competencie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main emphasis was on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In the past, the focus of the evaluation was on the private sector. However, as the public sector wa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important as a performance theme.

[Key words: Korea's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Key Topics of research, SNA]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s in Attitude of Social Welfare between Generations

Jonghoon Park & Seongwoo Le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ap differences in attitude of social welfare between gener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on social welfare by examining various factors such a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elfare variables, political characteristics, etc. For analyzing the gap of social welfare recognition by generation, this study adopts the 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which can utilize a discrete type of dependent variab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5th (2010) and 11th (2016)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tudy revealed that type of work, subjective perception on social welfare, and political tendency variables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generation gap in agreement on welfare-extension. The residual effects, which are not explained in the model, found that 40 and over 50 age groups have statistical valid differences on welfare-extension compared to the recognition of the 2030 generation on social welfar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in twofold: First,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of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welfare between generation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Second,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to resolve generation gap toward social welfare.

[Key words: Social Welfare, Generation differences, Welfare policy, Extended decomposition method]

A Study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Government: Focusing on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Kiwoong Yoon & Seunghyun Yoo

Over the past two decades, variou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s and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owever, many scholars have a critical view on whether thes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have achieved their intended purposes. The reasons for not achieving their purposes may be numerous, but one of the most critical reasons i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how many unintended consequences are emerging in the process of operating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PGMS). It finds that 1) although there are actually many unintended consequences, the degree of occurrence of unintended consequences has been somewhat reduced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2) the degree of occurrence of unintended consequences varies according to agency type, type of work, position of civil servant, and leadership; 3) team-type manager (high on production and high on people) is most effective type of leader in reducing the risk of unintended consequences.

[Key words: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Leadership,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ect of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Jeonghee Lee & Giheon Kwon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bout the effect of the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one of the effectiveness of humanities. This study was accomplish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etwork analysis by forming an analytical model based Policy design theory, Logic mode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ities support project(Process of promotion satisfaction, Process of result satisfaction, Will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Contribution to the spread of humanities) were all present, policy design factors, leadership factors, resource factors, network factors.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government-local autonomous entity's suitability of roles, the willingness of a subjective research institute, the suitability of vision-goals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ities city support project.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of humanities city network focusing on density and centrality, it was distributed at the top, Gwangsan-gu, Gwangju (3 times), Andong City (3 time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Cheongju, North Chungcheong Province, Yeonje-gu, Busan, Wonju, Gangwon Province, Mokpo, South Jeolla Province, twice each. It supports the possibility that network factors such as the voluntary will of participants and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could be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humanities support project.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humanities support project were presented.

[Key words: Humanities city, Policy design, Logic model, Network Analysis]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Satisfaction by Income Class

Soojung Lee & Mi Namgung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income classes in Korea. Using the 2016 Korea Housing Survey data, we classified the income class into low-income group, middle-income group, and high-income group. Then, we compared the level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each of the three income groups. The empirical analyses showed that the low-income household is less satisfied with their neighborhood attributes and have an overall low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vary by income groups. Safety from crim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re important factors on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middle-income households, respectively. Access to commercial facility is important for high-income households. Neighborhood interactions and noise levels are important for all groups regardless of income class. This finding suggests that varying strategies should be employed to enhance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st the different income classes.

[Key words: Income Class, Residential Environ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A Study on Job Turnover Predictive Model of Youth Workers: Focused on Decision Tree Model

Inho Jeong, Daewoong Lee & Giheon Kwon

This study is about the frequent turnover of youth workers among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We analyze the factors of 'job turnover' in order to clarify what factors determine job continuance and departure. T-test and decision tree were designed for analysis. In order to predict voluntary turnover, we tried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f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with high turnover intentions.

As a result of analysis, major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leave the youth employment were 'job-skill fit', 'welfare benefit satisfaction', 'wage/income satisfaction' and 'education level'. Especially, in the combination of variable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the high risk group was found to have a low job - skill level and a very low satisfaction level of the welfare system, and graduated from universit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youth worker and contributes to the policy design and countermeasure plan of the youth worker 's future labor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Employment labor policy, Voluntary turnover, Turnover intention, Youth employee, Decision tree model]

Research and Evaluation on the Happiness Index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hangmin Kang & Wonhee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make Jeju people feel happy and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is area through the research and evaluation of the happiness index of the provi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ing research on happiness index, fourteen indexes were selected, which was reclassified as six areas(personal, socio-relational, educational-cultural, living, environmental, participatory and safe) and thirteen detailed indicators. As for analysis method,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assessment were introduced: the former is made by conducting an AHP survey of twenty five exper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latter is made by evaluating the happiness level of the Jeju Province through the local statistics of seventeen provinces and cities.

[Key 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ppiness Index, Subjective Assessment, Objective Assessment]

논문기고지침 및 윤리규정

■ 투고 및 심사

1. 「국정관리연구」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와 정책사례 연구를 다룬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본 학술지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6개월이 경과한 다음, 근본적인 수정을 하고 '재투고'(처음 투고한 일자 표시)임을 명기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4.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e-mail: goveditor@gmail.com)로 전송한다.
5. 수시로 접수하는 공모논문과 편집위원회의 기획논문 모두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비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초심의 심사판정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3가지로, '수정게재'에 대한 재심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2가지로만 판정한다. 초심 또는 초·재심에서 둘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을 받은 경우만 게재하되, 하나의 '수정게재' 또는 '게재 불가'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하여 게재한다. '수정게재'의 경우 투고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가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조속히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원고작성

■ 기본사항

1.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속에 서양어 또는 한자를 쓸 수 있다.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쓰되 한자인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2. 원고는 **호글**로 작성하며,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35매(27,000자)를 원칙으로 하되 (**호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확인),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 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200자 원고지 175매(35,000)를 초과하

는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3.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주제어 3개), 영문초록(200 단어 이내, 주제어 3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4. 심사용 원고 제출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문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이름은 삭제하며, ‘줄고’나 ‘줄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글꼴: 신명조; 크기: 10(본문), 9(각주·인용문단·참고문헌·필자소개); 장평 100; 자간: 0;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문단 상·하 간격: 0; 들여쓰기: 3; 정렬방식: 양쪽혼합; <편집용지>: 상·하: 30; 좌: 31; 우: 30; 머리말·꼬리말: 12.
6.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7.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원고의 끝 부분에는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8. 제출된 논문이 게재되면 기고자는 본 학술지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9.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본문주

1.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같은 문헌이 되풀이 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 ▶ 문헌의 출처는 문장의 가운데 또는 끝에 언급한다.
예: 박동서(1990: 20)에 의하면…; …을 제시하였다(안병영, 2005: 5-6 참조); 「조선일보」(1990.11.1: 3) 사설에서도….
 - ▶ 저자가 2인인 경우 국내문헌과 한자로 된 중일 문헌은 중간점(.)으로, 서양문헌은 ‘&’로 연결한다.
예: 김창준·안병만(1990)은…; …라고 볼 수 있다(Richard & Smith, 2002: 35-36).
 -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내문헌과 한자로 된 중일 문헌은 ‘외’를, 서양문헌은 et al.을 사용한다.
예: …로 해석한다(이종범 외, 1990: 368). Bevir et al.(2003)의 분류에 따르면….
 - ▶ 번역서인 경우 원전의 발행연도 다음에 번역판의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기재한다.
예: Okun(1975/1988: 61-69)은 …를 주장하였다.
 - ▶ 둘 이상의 문헌을 언급할 때는 발행 연도순으로 한다.
예: …로 정리할 수 있다(Rhodes, 2000: 58-62; Nakamura, 2005 참조).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다.

■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만을 기록하며,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국내 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한자로 된 중·일문헌은 괄호 속에 한글식 표기를 하여[예: 菅谷章(스가라 아키라)]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 표기 옆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3.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 단행본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 「전자정부백서」. 서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Benz, Arthur & Yannis Papadopoulos (eds.). (2006). *Governance and Democracy: Comparing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Kooiman, Jan.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Publications.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 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정용덕(역). 「평등과 효율」.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8.

Richards, David & Martin J. Smith. (2002).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일반논문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Bevir, Mark, R.A.W. Rhodes, & Patrick Weller. (2003). “Traditions of Governance: Interpreting the Chang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81(1): 1-17.

Kettl, Donald F. (2000).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Globalization, Devolution, and the Rol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488-497.

Rhodes, R.A.W. (2000).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Jon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54-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학위논문

신열. (2000). 「과학기술지방화정책의 기술혁신 효과 분석: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학술대회 발표논문

안병영. (2005). “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천안, 4.29-4.30.

Nakamura, Akira. (2005). “Government, Governance, and Governability: The Futur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May 24-27, Seoul, Korea.

▶ 법률,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등

「감사원법」(개정 2005.5.26, 법률 제7521호).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26: 5.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30: 3.

Mallaby, Sebastian. (1999). “Big Nongovernment.” *Washington Post*, November 30: A29.

OMB. (2006). *PART: Refresher Training*. http://www.whitehouse.gov/omb/part/training/2006_refresher_training.pdf(2006.9.5).

■ 기타사항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출처:’라고 표시하고 본문 ‘참고주’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Kettl(2000: 49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여기에 제시된 본문주와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5th. ed.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Manual에 따른다.

■ 서평

1. 서평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는 ‘기획서평’과 저자의 의뢰 또는 평자의 기고로 이루어지는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2.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의 수준을 넘어 분석적 검토를 하고 참고문헌과 각주 등 논문의 온전한 형태를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상으로 한다.
3.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과 기여도 등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원칙적으로 참고 문헌이나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한다.
4. 서평은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외 출간 전문연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서명·저자·출판

사·출판년도·페이지·가격 등을 포함한다.

5. 서평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정립과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원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표현을 정당한 인용 표현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논문 한 편이 두 번 인용되고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공로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외에 학문적 진실성을 해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 (정직성) 본 학술지에 연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학문적 진실성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질 영향과 사회에 의한 연구의 오용까지도 고려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법 준수 의무)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과 연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법들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신의성실의무) 본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책무를 다하고 연구 부정행위 조사와

절차에 협력하여야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제8조 (검증주체) ① 본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②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1. 검증받는 연구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검증받는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기타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대상) 본 학술지는 고의적으로나 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란, 중복게재,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기 등 제3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10조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제소될 경우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전원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장 결정에 대한 조치

제11조 (결과의 통보)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그 연구자의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본 학술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 상에 게재된 논문 삭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사실의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재량으로 연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명예회복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과정 당시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기타 관련규정 준수) 상기 조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그 개정(예고) 규정, 교육과학기술
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의 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적용범위) 이 지침 시행 이전에(통권 1호~13호) 발행된 연구결과물은 당시 윤
리규정 및 소관기관 규정을 따른다.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3호(통권30호)

2018년 9월 30일 인쇄

2018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근세

편집인 문상호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우: 03063)

전 화 (02)760-0745

홈페이지 <http://gsg.skku.edu>

E-mail goveditor@gmail.com

인쇄처 디자인크레파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25-11(합정동 372-28)

오기빌딩 3층

전 화 (02)2267-0663

팩 스 (02)2285-0670

E-mail crayon0663@hanmail.net
